

2016년 하반기 동아시아사 교원연수

다시 보는 동아시아사 : 쟁점과 과제

- 일시 : 2016년 11월 5일~12월 3일
(매주 토요일, 9:30~16:20)
- 장소 : 동북아역사재단 11층 대회의실

2016년 하반기 동아시아사 교원연수 강의 세부 일정

날짜	교시		강의주제	강사
2016년 11월 5일 (제1일)	9:20~9:30		등록 및 개강식	
	9:30~12:20	1교시	동아시아사와 역사 수업	박중현 (잠일고)
	12:20~13:30		점심시간	
	13:30~16:20	2교시	한일 고대국가의 형성발전 및 교류	이재석 (한성대)
11월 12일 (제2일)	9:30~12:20	1교시	고려시대 한중관계	이진한 (고려대)
	12:20~13:30		점심시간	
	13:30~16:20	2교시	명의 국제질서와 한중관계	조영현 (고려대)
11월 19일 (제3일)	9:30~12:20	1교시	공간을 통해서 본 한성 경성 서울의 역사	이수일 (연세대)
	12:20~13:30		점심시간	
	13:30~16:20	2교시	17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조일간 '통신사 외교'	이 훈 (한림대)
11월 26일 (제4일)	9:30~12:20	1교시	근현대 중국의 변경인식과 동아시아	박장배 (동북아역사재단)
	12:20~13:30		점심시간	
	13:30~16:20	2교시	현대 한일관계의 성립(국교수립)과 과제, 향후 전망	이원덕 (국민대)
12월 3일 (제5일)	9:30~12:20	1교시	일본의 우경화와 역사논쟁	한혜인 (성균관대)
	12:20~13:30		점심시간	
	13:30~16:20	2교시	동북아 평화와 역사문제	김정현 (동북아역사재단)
	16:20~16:30		수료식	

목 차

동아시아사와 역사 수업	09
박중현 (잠일고)	
한일 고대국가의 형성발전 및 교류	29
이재석 (한성대)	
고려시대 한중관계	41
이진한 (고려대)	
명의 국제질서와 한중관계	65
조영헌 (고려대)	
공간을 통해서 본 한성 경성 서울의 역사	85
이수일 (연세대)	
17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조일간 ‘통신사 외교’	101
이 훈 (한림대)	
근현대 중국의 변경인식과 동아시아	109
박장배 (동북아역사재단)	
현대 한일관계의 성립(국교수립)과 과제, 향후 전망	121
이원덕 (국민대)	
일본의 우경화와 역사논쟁	143
한혜인 (성균관대)	
동북아 평화와 역사문제	159
김정현 (동북아역사재단)	

동아시아사와 역사 수업

• 박종현 (잠일고) •

동아시아사와 역사 수업

박중현 (잠일고)

1. 동아시아사의 등장

21세기 동아시아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구 이동, 교역 및 정보의 교환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새로운 천년은 역사 전쟁으로 시작하였다.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에서 우익에 의해 만들어진 교과서 검정 통과, 일본군‘위안부’피해 문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중국의 동북 공정 프로젝트 추진 등이었다. 그 정점은 2005년 일본 시마네 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선포하면서 영토를 둘러싼 갈등으로 확산되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은 이러한 문제를 대처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2006년 ‘역사교육 강화 방안’이 발표되고, 이에 따라 짧은 기간 동안에 만들어졌던 것이다.

정부는 당시 점증하는 역사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는 명분과 목적을 강조하고자 하였으나 개발자들은 동아시아 시민으로서 청소년의 성장에 주안점을 두었다.¹⁾ 이를 위해 정치 부분보다는 문화에 대한 비중을 높였다. 상대의 문화와 역사를 배움으로써 같음과 다른의 차이를 인식하고, 갈등을 넘어 평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현재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목적과 방향성에 대하여 현장 교사들의 공감대는 높은 편이다. 특히 2012 학년도 이후 채택에서 많은 채택 부수를 기록함으로써 기본 취지와 과목에 대한 인지도는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²⁾ ‘동아시아사’ 교과목의 정착률을 위하여 동북아역사재단을 중심으로 많은 자료의 발간과 교원 연수가 이루어졌다. 일부 교사들은 소모임을 만들

1) 정연,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의 성격과 내용체계」, 『동북아역사논총』19호, 2008에서는 ‘동아시아사’가 등장하는 배경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체제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과정 등장 즈음에 교과서 서술의 토대를 언급한 학위논문도 제출되었다. 황지숙, 『상대화 중심의 동아시아사 인식과 교육방안』,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2) 필자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학사는 2012년 33,000부(220개교), 2013년 71,000부(450개교)가 채택되었고, 천재교육은 2012년 38,162부(273개교), 2013년 87,595부(601개교)가 채택되었다. 이를 합해보면 2012년에는 71,162부(473교), 2013년에는 158,595부(1051교)가 채택되었다. 2016년의 동아시아사 채택은 천재교육 80,212부(67.3%), 비상교육 22,409부(18.8%), 교학사 16,487부(13.8%)로 전체 119,108부였다.

어 교과서를 분석하고, 학교 현장에 필요한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다. 한 대학에서는 대학원 수업 과정에서 교육과정·교과서 검토를 한 학기 동안 진행하고, 그 내용을 학술지를 통하여 발표하였다.³⁾ 일본에서도 동아아사 교과서를 번역·출판하였다.⁴⁾

그러나 2012년 동아시아사 교육의 실시와 함께 학교 현장은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동아시아사’가 갖는 생경함이 우선이겠지만 이외에도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다.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는 물론 어떠한 자료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해당 단원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수능을 대비하는 경우 어떤 형태의 문제가 만들어질 것인지 등이다. 2012년 교과서가 나온 이후 두 권의 교과서 내용 구성이 다르다는 평가가 있었다. 2011 개정 교과 교육과정에 따라 현재 3종의 동아시아사 교과서가 검정에 합격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2종의 교과서가 갖는 한계를 극복함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믿는다.

역사 현안으로 보는 한일 관계에서 보면 최근 독도 문제와 함께 일본군‘위안부’피해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2015년 연말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이루어진 ‘위안부 합의’에 대하여 아직도 논쟁이 일고 있다. 이외에도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가 잔존하고 있다. 교과서 문제는 아베 정권 등장 이후 왜곡의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 현안의 문제는 상당 부분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정에서 생긴 역사 인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동아시아사’는 4단원이 개항 이후 전개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이에 저항한 민족운동과 국제 연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5단원은 20세기 침략과 수탈의 역사를 넘어 동아시아 공동체를 그리려는 화해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부분에 이슈와 역사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 교육과정과 동아시아사

1) 교육과정의 목표와 방향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서는 이 과목을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된 인간 활동과 그것이 남긴 문화유산을 역사적으로 파악하여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나아가 지역의 공동 발전과 평화를 추구하는 안목과 자세를 기르기 위해’ 개설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3) 『역사와 역사교육』 24호, 응진사학회, 2012. 9.

4) 한국의 천재교육 교과서를 미즈하시 일기가 번역 출판하였다. 안병우 외 著, 三橋廣夫·三橋尚子 譯, 〈東アジアの歴史—韓國高等學校歴史教科書〉(世界の教科書シリーズ), 明石書店, 2015

즉 과거의 인적, 문화적 교류를 통해 상대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이 일차적 과제이다. 다음은 이를 통해 평화를 지향하는 인간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사’ 교육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점은 역사적 사실을 통한 상대에 대한 이해, 이를 통한 평화지향적 태도를 기르는 것이다.

〈동아시아사〉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가. 통합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동아시아 역사를 파악하여 이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는 안목을 기른다.
- 나. 시기별 사회와 문화의 특징을 드러내는 공통적인 요소와 함께 각국의 독자적 요소를 주제별로 접근하여 이해한다.
- 다. 동아시아 역사와 문화의 다양성을 탐구하여 그 특징을 파악하고, 타자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한다.
- 라. 동아시아 역사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 요소를 탐구하고, 이를 해소하여 상호 발전을 모색하는 자세를 갖는다.
- 마.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비교 분석 비판 종합하는 활동을 통해 역사적 사고력을 신장한다.

이처럼 동아시아 지역사로서 균형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주체적으로 역사를 보는 안목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주제별 접근을 통해 학생의 흥미를 유발시킴과 함께 사회와 문화의 특징을 파악하고, 역사의 다양성과 타자 이해의 태도를 기르는 것이다.

한국사는 자주 접하고 호홉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기본 흐름은 대체로 이해하고 있다. 세계사는 최근 교육과정에서 지구사적 관점이 들어가 이전과 다른 시각을 보여주지만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에 생소한 느낌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동아시아사’ 과목은 ‘동아시아사’라는 단어가 주는 생소함이 우선 극복의 과제이다. ‘동아시아’란 어떤 영역과 역사 범위를 갖고 있으며, 그 흐름과 시기 구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정체는 어떤 것인지에 궁금증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고민은 초기에는 학생보다 교사가 더 많이 가졌던 것도 사실이다.

2) 2009 교육과정과 2015 교육과정의 개정

현재 교과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나 2011년 다시 개정된 교과 교육 과정에 따라 가르쳐지고 있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는 2017년도 검정을 거쳐 2018년부터 가르치게 되었다. 두 교육과정의 차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6개이었던 대단원이 교육과정 적정화 지침에 따라 5개 단원으로 축소되었다.

2단원과 3단원이 합쳐져서 ‘동아시아 세계의 정립과 변화’라는 대단원으로 구성되게 되었다. 나머지 부분은 성취 기준의 숫자를 줄여 전체적인 내용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학습 내용 감축에 따라 내용 체계요소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발표 내용은 내용 요소이지만 주제사 중심으로 전개되는 동아시아사에서 주제라고 이해할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	
영역	내용 요소	대주제	소주제
국가의 형성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	동아시아와 동아시아사
	자연 환경과 생업		자연 환경과 생업
	신석기 문화		선사 문화
	국가의 성립과 발전		국가의 성립과 발전
동아시아 세계의 성립	인구 이동과 전쟁	동아시아 세계의 정립과 변화	인구 이동과 문물 교류
	국제 관계		국제 관계의 다원화
	울릉과 유교에 기초한 통치 체제		
	불교		
국제 관계 변화와 지배층의 재편	유목 민족의 성장과 다원적 국제 관계	유학과 불교	
	사대부와 무사		
	성리학		
	몽골 제국 이후의 지역 내 외 교류		

동아시아 사회의 지속과 변화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	동아시아의 사회 변동과 문화 교류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
	16~19세기의 사회 변동		사회 변동과 독자적 전통의 형성
	학문과 과학기술, 서민 문화		교역망의 발달과 은 유통
	지역 내 교역 관계의 변화, 서구와의 교류		
근대 국가 수립의 모색	근대화 운동과 국제 관계 변동	동아시아의 근대화 운동과 반제국주의 민족 운동	새로운 국제 질서와 근대화 운동
	제국주의 침략과 민족 운동		제국주의 침략 전쟁과 민족 운동
	침략 전쟁의 확대와 국제 연대		서양 문물의 수용
	서구 문물의 수용		
오늘날의 동아시아	전후 처리와 동아시아의 냉전	오늘날의 동아시아	제2차 세계 대전의 전후 처리와 냉전 체제
	경제 성장과 교역의 활성화		정치 발전과 경제 성장
	정치 사회의 발전		갈등과 화해
	갈등과 화해		

3. 학교 수업 속에서 동아시아사

본교에서 동아시아사는 3학년에 배치되어 있다. 3학년은 대학입시에 직면해 있는 학생들로 흥미로운 수업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교의 사회과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학년	배정 과목		기타
	필수	선택	
1	한국사(3), 사회(3)		
2		윤리와 사상(3), 세계사(3), 세계지리(3), 경제(3)	4과목 중 2과목 선택
3	사회문화(2)	동아시아사(3), 한국지리(3), 생활윤리(3), 법과 정치(3)	4과목 중 2과목 선택

3학년은 매년 11월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진도를 1년 동안이 아닌 6개월 정도에 모두 마치고, 시험 문제를 푸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 학생들은 동아시아사를 선택하는 학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즐겁게 수업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수업을 진행하는 중에 학생들에게 설문을 통하여 두 가지를 질문하였다. 첫째는 동아시아

아사를 배우면서 느끼게 된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내용을 배우면서 한국과 일본의 화해가 가능한지에 대한 것이다.

1) 동아시아사를 배운 소감

한국사나 세계사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동아시아”는 낯선 단어였음에 틀림없다. 3월부터 동아시아사를 듣고 현재 느낀 소감은 어떤 것인지 감상을 들어 보았다.⁵⁾

고 0 : 옛날도 지금처럼 서로 도울 때는 돕고, 또 서로 원하는게 있으면 대화로 할 때도 있고, 전쟁을 할 때도 있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생각한다. 역사를 배운다는 거는 예전과 같은 실수를 벌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배운다고 들었다.

이 00 : 동아시아사를 배우면서 한국 근처의 중국과 일본의 역사까지도 함께 배워 흐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같은 시기에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는 역사의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좋았다. 주변 국가 간의 관계가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김 00 : 동아시아의 역사를 이웃나라로 들어서는 알지만 배울 기회가 없어 잘알지 못하였다. 직접 동아시아사를 들으니 그 시대의 국제적 관계에 따라 한국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 수 있어 신기했다.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소유권 주장과 같이 잘못된 역사관을 바로잡을 필요도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최 00 : 동아시아사를 비롯해 역사를 배우다보면 우리가 오늘날 태어난 것에 감사해 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 수많은 전쟁과 피해를 넘어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고마웠다. 외세의 침략, 가진 자들의 횡포 등을 겪고 여기까지 발전해 온 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중국과 일본이라는 역사적 강대국 사이에서 끝내 버티고 발전해왔다는 것이 놀랍다.

김00 : 동아시아사를 선택할 때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어서 고민이 있었다. 그런데 선생님 수업이 재미있어서 선택을 했다. 동아시아사를 배우면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의 우

5) 학생들의 소감은 6월 9일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동아시아사를 배우는 2개 학급을 대상으로 하였다.

리 사회를 반성하고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되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국사 전반에 몰랐던 것을 동아시아사를 통해 잘알 수 있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박 00 : 한국사를 좋아하는 편이어서 거부감은 없었으나 여러 나라의 전쟁, 통합, 국가 체제 등 여러 가지를 동시에 배우니 정말 어려웠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야기 형식으로 여러 나라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 듣는 순간 ‘아하 그렇구나’하며 잘 이해가 되었다. 역사는 배워 알게 될수록 더 궁금해지고 관심이 생기는 그런 과목인 것 같다.

이 00 : 동아시아는 수천년 동안 중국 중심의 질서가 지배했다. 근대에 이르러 중국의 역할은 성공적 근대화, 산업화를 이룬 일본에게 넘어갔다. 일본이 중국을 제치고, 동아시아의 강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개혁을 통한 사회 역량의 실현에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사회적으로 심각한 병리.부패 현상이 만연함에도 기득권은 자신들의 지배 논리로 변혁을 거부하고 있다. 마치 개항 전후의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다. 나는 동아시아사의 근대 부분을 배우면서 앞으로 사회의 불합리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아직도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얽매인 한반도와 우리 민족이 외세에 다시는 지배받지 않도록 하는데 일조하고 싶다고 느꼈다.

학생들의 소감은 어렵다든지, 재미가 없다든지 하는 이야기는 거의 없었다. 이것은 동아시아사가 주제사로 되어 있어 핵심 개념을 이해하면 전체 줄거리를 알 수 있도록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제까지의 역사 교과서와 다르게 많은 읽을거리와 토론 거리를 제공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딱딱하다는 느낌을 덜받는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본교에서 동아시아사는 입시를 앞두고 있는 3학년들임에도 큰 부담감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교사 또한 수학능력시험에서 많은 학생이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재미있게 가르치려고 노력한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동아시아사가 일본사를 적극적으로 편입하면서 일본에 대해 막연히 갖던 생각을 많이 해소하고 일본의 문화와 사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은 동아시아 미래 세대인 학생들은 물론 양국의 사회에서도 반길만한 것이다. 한국사의 입장에서는 주로 암기적인 한국사에 비해 ‘재미있는 역사도 있구나’하는 생각은 물론, 동아시아사를 통해 당시 정세를 알게 됨으로써 한국사에 대한 심화가 가능했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2) 동아시아의 갈등과 화해에 대한 소감

동아시아사를 배운 소감과 함께 학생들에게 동아시아사가 동아시아의 갈등을 넘어 화해와 협력을 위하기 위한 학교 교과목으로 설정되었음을 알렸다. 한 학기 가까이 배운 중에 화해가 가능한가에 대하여 학생들의 발표와 토론 중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화해가 가능	화해가 불가능	모르겠음	전체
배우기 전	38	12	12	62(100%)
배운 후	32	18	14	64(100%)

(2개 학급을 조사하였는데, 시기가 달라 전체 인원엔 차이가 있음)

- 정00 : 독일, 프랑스, 독일, 폴란드의 경우를 보면 독일이 정부 차원에서 정식으로 사과하고, 전쟁 범죄자를 처벌하는 등 실천적인 조치를 추하였다. 이러한 반성을 프랑스와 폴란드가 수용하니 이들 간에 화해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한국과 일본 사이에도 화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 0 : 독일 통일의 조건이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일본은 점점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평화 헌법을 개정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려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태도를 보고 주변국이 신뢰가 생길 수 있겠는가. 따라서 화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이00 :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에 피해를 입은 분들도 돌아가시고, 감정을 가진 분들이 없어지고, 교류를 하면서 양국 간 사람이나 문화 교류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면 화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00 : 교류가 많아지고 왕래가 많아지면 감정은 누그러질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역사를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는 거 같습니다.

화해의 가능성에 대하여는 일본(주로 일본 정부이겠지만)이 과거에 대하여 진솔한 자세를 보이거나 사람의 교류가 많아지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학생이 많았다. 여기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주로 위의 학생들과 같은 내용들로 압축되었다. 화해가 가능하다는 쪽이나 불가능하다는 쪽이나 일본 정부가 과거 침략 사실이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부정으로 일관한다면 미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학생들 사이에서 고무적인 내용은 동아시아사를 배우기 이전까지는 ‘일본=일본정부=일본인’이라는 입장이었지만 공부를 하면서 그 속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다양한 생각 속에서 우리보다 더 치열하게 살고자 하였던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4. 한국사 속의 일본, 일본인, 재일코리안

1) 일본의 항복과 한반도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을 계기로 기울기 시작한 일본군의 팽창은 1944년이 되자 급격히 기울게 되었다. 전임 총리였던 고노에 후미마로가 종전을 천황에게 요구하였으나 천황은 이를 기각하였다. 이 때 미군은 1945년 2월부터 3월말까지 전개된 이오지마(硫黃島)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고 승기를 확실히 잡게 되었다. 1944년부터 시작되었던 미군의 일본 본토 폭격은 이오지마의 공항을 사용하면서 더욱 활발해졌다.

1945년 3월부터 3개월 간에 걸친 오키나와 전투는 일본이 항복하지 않으면 안될 수밖에 없었으나 일본 정부는 나가노, 나라 등지에 천황의 지휘소를 암반 속에 설치화하면서 최후 저항을 준비하였다. 1948년 7월 미국을 위시한 연합국은 포츠담 선언을 통하여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통첩하였다. 천황과 문신들은 항복을 받아들이고자 하였으나 조조 히데키를 비롯한 군부 특히 육군의 반발로 결전을 결의하였다. 이와 함께 항복은 하되 천황제 유지 등을 조건을 내걸고 소련을 통하여 협상을 전개하였다.

이 때 미국은 원자폭탄을 완성하였다. 미국 정부는 원폭의 투하를 결정하고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다. 혼란을 수습할 수 없었던 일본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8월 8일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하였다. 미국과 영국 등이 소련의 대일전 참전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유럽 전선에 전력을 다한다는 핑계로 대일전에 참전하지 않았던 그들이었다. 그러나 원폭 투하 후 일본이 항복을 하면 동아시아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것을

우려한 소련은 온폭이 투하되자 선전포고를 한 것이었다. 선전포고 다음 날인 8월 9일 소련군은 만주와 한반도 북부 지역에 소련군을 투입하였다. 또한 이 날 나가사키에 다시 원폭이 투하되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일본은 결국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였다.

소련군이 한반도를 남하하자 미국은 소련에 38도선을 경계로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요구하였다. 소련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38도선을 경계로 미군과 소련군이 진주하게 되었다. 이것이 결국은 한반도 분단의 기원이 되었다. 역사의 가정 속에 만일 천황(일본 정부)이 1945년 초의 고노에의 상주를 받아 들여 항복을 했다면, 또는 적어도 포츠담 선언을 수용했다면 한반도는 어떻게 되었을까? 일본과 개전을 하지 않았던 소련은 한반도에 자신들의 지분을 주장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분단도 이루어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소련은 아시아-태평양 전쟁에서 한 것이 아무 것도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도 한반도 분단의 책임 존재하는 이유이다.

2) 패전과 일본의 민주화, 그리고 역코스

1945년 8월15일 정오 히로히토(裕仁)는 라디오를 통해 항복을 알렸다. 소위 ‘대동아 전쟁 종결에 관한 조서’였다. ‘조서’에서는 전쟁을 통한 피해에 대한 반성보다는 “참기 어려운 것을 참고, 견디기 어려운 것을 견딘다(堪へ難きヲ堪へ忍ビ難キヲ忍ビ)”는 구절을 통해 일단 정세가 어려워 항복을 하는 것임을 알렸다. 명확한 과거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후 제국의 부활을 꿈꾸게 만드는 기반이 되었다. 또한 도쿄 재판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논의를 촉발시키는 근거도 되었다.

조서에는 ‘패전’, ‘항복’이라는 말은 전혀 없다. “제국(일본)의 자존과 동아의 안정을 간절하게 바라는 뜻에서 미 영에 선전포고를 한 것”이며, “다른 나라의 주권을 배격하고 영토를 침략한 행위도 짐(일왕)의 뜻도 아니었다.” 단지 전쟁을 끝내야 하는 이유는 “적(미국)국이 원자폭탄을 터뜨려 무고한 백성들을 살상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연합군의 비인간적 행위에도 교전을 계속한다면 “일본이 멸망할 뿐 아니라 인류의 문명도 깨질 것”이라고 했다. 그 스스로 연합군의 살육에 반대하는 인류문명의 수호자이자 평화주의자임을 천명한 것이다. 이는 결국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통해 전쟁을 반성하기보다는 자신들이 피해자임을 강조하는 역사 인식을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일본을 점령한 연합국(주로 미국)은 일본을 다시는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들기 위

해 여러 민주주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연합국총사령부(SCAP/GHQ, General Headquarters of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에서는 우선 항복문서를 조인함과 동시에 육해공군을 해체하고, 전범자를 체포하였다. 10월에는 5대 개혁 지령을 내렸다. 여기에는 여성의 참정권 부여, 노동조합의 결성 장려, 교육의 자유주의적 개혁, 비밀결사의 폐지 및 경제 민주화가 있었다. 특히 경제 민주화 조치에는 토지 개혁을 단행하여 농민들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 재벌 개혁을 통하여 군국주의자를 지원하고, 전쟁을 이끌게 한 재벌을 해체하도록 하였다. 이어 1946년 1월 1일 천황은 '신일본 건설에 관한 조서', 소위 '인간 선언'을 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짐과 그대 국민들 사이의 유대는 시종 상호 신뢰와 경애에 의해 맺어진 것으로 단지 신화와 전설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니다. 천황을 살아 있는 신으로 여기고, 또 일본 민족은 다른 민족보다 우월한 민족이고 나아가 세계를 지배해야 할 운명을 갖고 있다는 가공의 관념에 기인한 것도 아니다.

이어 전범에 준하는 인물들을 공직에서 추방하였다. 도쿄 재판을 실시하여 전범을 처리하였다. 도쿄 재판에서는 A급 전범 28명을 기소하였다. 그러나 전쟁의 최종 책임자였던 천황은 전범에서 빠졌다. 이것이 재판의 첫째 문제였다. 재판에서 빠지는 대신 그는 인간 선언을 하였다. 재판 결과 교수형 7명, 종신 금고 16명, 금고 20년 1명, 금고 7년 11명으로 판결하였다. (교수형에 처해진 인물들은 1948년 12월 형이 집행되었다.)

미국의 민주주의 정책의 마무리는 일본국 헌법의 제정이었다. 일본국 헌법은 소위 '평화 헌법'으로도 불리우며, 현 아베 정권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헌법이기도 하다. 아베와 그 세력들은 왜 이를 바꾸려는 것일까? 명분은 일본이 보통국가가 되어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아베는 '적극적 평화주의'라 주장하고 있다. 개정의 핵심은 일본 헌법 제 9조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9조 ① 국권의 발동 내지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하게 이를 포기한다.
-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 해, 공군 기타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군대를 보유할 수 없고, 해외 파병 등을 할 수 없으니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통’의 국가들처럼 군대를 가져서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아베의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나라는 미국이며, 이외에 유럽 연합,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지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가상 적국인 중국에 대한 가장 위협적인 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 지지하는 것이다. 평화헌법을 만들어 일본에게 강요한 나라가 미국임을 감안하면 모순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민주주의 정책은 1948년을 기점으로 전환을 맞이하였다. 미국의 일본 점령 정책은 중국의 국민당 정부가 공산주의 세력을 막아준다는 전제 아래 입안된 것이었다. 그러나 세계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던 일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마오쩌둥의 공산군이 장제스의 국민당군을 제압하고 중국을 차지하려는 상황으로 전세는 이미 기울고 있었다. 또한 한반도에서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두 개의 정부가 세워졌다. 세계적으로는 베를린 봉쇄로 대표되는 냉전이 전개되었다. 이제 일본을 공산주의에 대한 방벽으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GHQ는 점령 정책을 180도 전환하였다.

공무원의 쟁의 행위를 금지시키고, 이미 교수형에 처해진 A급 전범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사면하였다.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자 일본 헌법은 자위권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천명하였다. 맥아더는 오키나와에 미군 기지 건설을 개시하고, 일본 공산주의자를 비난하는 한편 공산당 중앙위원의 공직 추방을 지령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한반도에서 북한군은 38도선에서 전면적인 침략을 하였다. 일본 주둔 미군을 한반도에 파견하면서 일본 자위대의 전신이된 경찰예비대가 만들어졌다. 이제 미국은 일본을 반공 기지로 만들기 위해 독립을 시키고자 하였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되었고, 그 날 오후에는 미일안전보장조약이 조인되었다.

3) 일본의 패전과 이주, 그리고 정착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기나긴 전쟁이 막을 내렸다. 식민지와 점령지에 나가 있던 일본인은 민간인이 321만 명, 군인이 367만 명으로 모두 688만 명이였다. 그 중 200만 명이 만주에 있었다. 일본 본토에는 약 117만명 가량의 외국인이 있었다. 미군은 이들의 귀환을 총괄적으로 지휘 감독하며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치안을 유지하는데 관심을 두었다. 소련이 한반도의 북위 38도선 이북지역과 만주지역에서 체포한 일본군을 시베리아로 데려가 중노동시킨 것을 제외한다면, 1946년경까지 귀환 과정은 큰 탈 없이 마무리되었다.

해방과 더불어 조선인들은 다시 현해탄을 건너는 배에 몸을 실었다. 그 과정은 외견상 자발적인 귀국이지만 사실상의 '추방'이었다. 본격적인 점령에 앞서 일본 정부는 9월 1일 강제로 동원했던 조선인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수송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어 12월에는 조선인과 대만인의 참정권을 정지시켜 정치적인 추방을 단행했다.

조선인의 귀환은 앞서 언급한 조선 거주 일본인의 귀환 행렬과 맞물려 전개되었다. 조선에서 출발한 귀환선은 일본의 각 항구에서 일본인을 내려놓은 뒤 조선인들을 싣고 한반도로 되돌아가는 항해를 반복했다. 이는 중국과 대만으로의 송환도 마찬가지였으며, 대략 1946년 5월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과정 속에 1946년 3월까지 240만 명의 조선인 중 약 70%가 한반도로 돌아갔다. 점령당국(GHQ)은 남은 64만 명 중 귀국 희망자를 조사하여 약 80% 정도를 귀국시키려 했다. 13만 명 정도가 실질적인 재일코리안(한국 국적과 '조선'적 돌을 합친 개념)의 적정한 출발선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 귀국자 수는 현저하게 줄었고, 거꾸로 한반도에서 되돌아오는 밀항자가 오히려 늘었다. 결국 약 60만 명이 일본 땅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재일 코리안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일본에 사는 한국인의 법적 신분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조선'과 '한국'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 신분과 일본의 국적을 취득한 '귀화' 등이 그것이다.

외국인 신분의 '조선'과 '한국' 국적 가운데 '조선'이라는 국적명은 지명의 표기이며 국명과는 관련이 없다. 패전 후 일본은 조선 출신의 외국인은 모두 '조선' 국적으로 편입을 시켰다. 이후 1965년 한일협정이 체결되면서부터 '조선' 국적자들이 점차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기 시작했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여전히 '조선'의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일본에 사는 재일코리안을 약 2/3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재일코리안은 '민단'과 '총련'이라는 두 개의 민족단체로 나뉘어져 있다. 한반도의 북과 남 중 어디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재일코리안 사회도 나뉘어진 것이다. 1945년 10월 사회주의자를 중심으로 '재일본조선인연맹'(조련)이 결성되었고, 이 과정에서 중도와 우파는 1946년 10월 '재일본조선거류민단'(민단)을 만들었다. 이후 한국전쟁 과정에서 북한 지지자들은 1955년 5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새롭게 결성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귀화'는 일본 내에서 겪는 차별을 피하기 위해 주로 선택되었다. 식민지 시대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는 일본 내의 차별은 학교에서 시작되어 취업, 노후까지 사회 생활 전반에서 평생 동안 이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귀화를 선택한 뒤에도 이들은 대부분 평생 자신이 한국계임을 밝히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일 만큼 차별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만큼 일본 사회의 제도와 일본인의 의식 속에 차별은 일상화되어 있다.

철폐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재일코리안 2세, 3세들이 주위의 일본인과 협력하거나, 일본인들 스스로 기존 정당이나 노조 등의 조직적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주적인 결집체를 형성하면서 운동의 폭을 넓혀나가고 있다. 이러한 시발점에는 박종석(朴鐘碩) 사건이 있다.

1970년 박종석이라는 재일동포 청년은 국적을 구실로 부당한 해고를 한 일본 대기업 히타치(日立) 제작소를 제소하였다. 재판은 원고의 승소로 끝났지만, 그것의 의의는 단순히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일본 내에서 재일코리안에 대한 취업차별이 대대적으로 부각되었다. 그리고 재판을 전후로 국적으로 인한 취업차별의 현실을 시정하자는 여러 운동이 일본인 노조 및 시민단체와 더불어 전개되었다.

차별철폐운동은 1980년대에 와서는 지문날인 거부 및 철폐로 이어졌다. 21살의 재일동포 최선애(崔善愛)가 외국인 등록 재갱신 때 지문날인을 거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일이 일어났다. 그녀는 법정 최후 진술에서 “나는 지문을 찍고 관리되기 위해 사는 로봇이 아니다.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웃고, 울고, 기뻐하는 감정을 갖고 있는 인간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재판에서 모두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쇼와 천황의 사망에 따라 ‘지문날인 거부 재판’에 대해 대사면을 하였으나 최고 검찰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이에 대한 차별철폐운동이 재일코리안 전체로 확산되었다. 결국 일본 정부는 1993년의 외국인등록법 개정으로 특별영주자 및 영주자의 지문날인을 폐지하였다. 최선애는 2000년에서야 특별영주권을 14년 만에 회복하였다.

오사카에 살고 있는 재일코리안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일본 사회에 살고 있고, 이 사회가 좀더 건강하고 밝은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 노력이 빛을 발하려면 차별이 철폐되어야 한다. 일본 사회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많은 재일코리안들은 점차 일본 사회 안에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일본을 생활기반으로 좀더 일본 사회와 더욱 밀착하며 살아가고 있다. 일본 정부 내에서도 재일코리안을 중심으로 참정권을 검토하는 등 변화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차별과 고난을 겪으며 살아온 이주 1세들과 지금 재일코리안들은 다른 특징들을 보인다. 세대교체, 국제결혼의 증가와 그 자녀(소위 ‘더블’), 올드카머와 뉴카머의 존재, 한류의 확산, 한국에 대한 인식들이 변화하면서 재일코리안이라는 민족적 아이덴티티와 생활은 다원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생존하는 이주 1세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이들 역시 70년대 이전과는 다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경우도 많다.

4) 재일 코리안과 일본 사회

한일역사교류모임에서 주최하는 제6회 한일역사교육실천심포지움의 일환으로 히로시마의 조선학교를 방문하였다. 참가자 중에 제일 씩씩한 여선생님이 한 시간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그 말미에 학생이 질문을 하였다. “선생님은 이번 선거에서 누굴 찍었나요?” “물론 내가 찍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 나의 임무는 그가 대통령 역할을 잘하길 바라고 그러지 못한 경우 그를 철저히 비판하는 일에 앞장 설 것이다.”

오사카에서 만난 시민 운동가인 김광민씨 역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요즘같이 국제사회가 좁아지고 많은 애스닉들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어떤 사회가 발전하는 길은 각각의 아이덴티티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 속에서 각각의 개성이 최대한 발휘될 때 그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다.”

재미동포가 한국말을 못하고 영어를 하면 그러려니 하면서, 재일동포가 한국말을 못하면 욕하는 한국사회를 보면서 어느 동포는 가슴에 담긴 말을 했다. “동포로서의 의무만 강요하였지 이곳에 사는 이들에게 조국은 무엇을 해주었는가” 하고,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국적을 지키고 살려는 그 모습보다 더 가당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고.

작년 7월 텐리(天理)를 방문한 적이 있다. 텐리는 나라현의 현청인 나라와 고대 문화의 출발지인 아스카 사이에 있는 자그마한 도시이다. 천리교의 본산이 있고, 텐리 대학에는 안견의 몽유도원도가 있다. 그 곳 소학교의 한 귀퉁이에 야간 중학교가 있다. 일본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설립한 그곳의 상당수는 한국인들로, 88세의 할머니도 있었다.

현재 할머니들이 많이 살고 있는 천리시 근처의 사쿠라이시는 히노키 나와로 유명한 곳이었다. 히노키는 한국의 온천이나 목욕탕에 있는 히노끼 탕에 쓰이는 재료로 쓰이는 나무이다. 향이 좋고 물에 강해서 온천에 많이 사용된다. 그 껍질 역시 물에 강해 이를 가지고 새끼를 꼬아 목선의 물 새는 것을 막는 데 사용하였다. 그 일이 힘들고, 분진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꺼려 해서 식민지 시대 그곳에 건너간 사람들이 주로 그 일을 하였다. 해방이 되자 그들은 조국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으나 여러 이유로 돌아가지 못한 채 그곳에서 7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구순을 바라보는 연세에도 그는 어린 시절 목화를 키우며 고향을 그리고 있다.

텐리에서 사쿠라이로 가는 도중에 야나기모토(柳本)가 있다. 그곳에는 일제 말기 비행장이 건설되었고, 서쪽으로 터널을 만들어 최후 항전 때 천황의 집무실을 만들려던 곳 중의

하나이다. 그곳에서 비행장과 터널 공사에 동원되었던 한국인 노동자들의 흔적과 그 후손들이 오늘도 남아 있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은 노동자 숙소를 개조한 곳으로 정부로부터 퇴거를 요구받고 있었다. 황량한 숙소는 발을 들여 놓기 어려울 정도였다. 천정에서는 물이 새고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 사는 재일동포들이 일본 전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재일동포 3세, 4세 들의 귀화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추성훈의 예에서 보듯이 그들을 환영하는 곳은 아무 곳도 없었다. 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 학교를 다니며 많은 차별을 받았음에야 귀화를 하지 않은 사람들의 고통은 헤아리고 남음이 있다. 그러나 최근 이주를 하는 전후 재일들의 경우는 자신들이 한국인임을 떳떳히 밝히고 산다. 그리고 그 사회에 적응을 하여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자 한다.

도쿄의 아라카와(荒川) 지역은 동경의 동쪽에 있는 곳으로 일제시대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곳이다. 1923년 관동 대지진 때 학살된 한국인들이 하천의 다리 밑에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1982년 소학교 교사였던 絹田幸惠 선생을 중심으로 유골을 발굴하고, 이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조선인 유골을 발굴하고 추도하는 모임'을 만들고, 매년 유골이 묻혔던 그 장소에 봉숭아 꽃을 심고, 9월의 추도의 날에 꽃을 바치는 행사를 한다. 그들의 소원은 하천 옆에 조그마한 추도비라도 세워 죽은 이의 넋을 위로하고, 사죄하는 것이다. 그러나 스미다구는 하천 변에 만들어 놓은 화단마저 올리는 없애겠다고 통보하였다.

2001년 일본의 후쇼사 교과서의 등장은 동아시아 각국에 제국주의 망령을 떠올리게 하였고, 평화와 인권에 기반한 국제적 연대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후쇼사판 역사 교과서의 채택률을 1%도 미치지 못하게 하였다. 일본의 경우 분파적 경향이 아주 강해서 한국의 시민단체가 그들을 쫓는 역할까지도 수행하였다. 한국이 중국과 일본의 시민세력과 연결하며 역사갈등을 불식시키기에 노력하였다면, 이제 <동아시아사>는 역사 화해의 한 도구로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5. 동아시아사를 가르치며

2006년 12월에 교육부의 회의에 참여하여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을 만든 이후 벌써 10년이 지났다. 그간의 한일 관계에서 있었던 일을 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일본의 선생님들과 우정을 깊게 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 2007년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 동아시아사가 처음 등장하였고, 2012년 학교 현장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2008년 등장한 이명박 정부가 교과목 수를 줄인다고 하였을 때 동아시아사가 탈락하는 것이 기정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 해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문제를 넣겠다고 하면서 한국에서는 동아시아사 필요성이 제기되어 교육과정 속에 살아 남았다.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과목의 존폐에 대한 논란은 수그러들고 있다.

이와 함께 동아시아사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 지에 대한 논의는 점차 증대되고 있다. 비판도 증가하고 있다. 동아시아사 교육과 관련한 학위 논문은 박사 논문 1편을 비롯해 석사 학위 논문이 30여 편이 나와 있다. 일반 학술 논문도 다수 발표되었다. 또한 대학의 커리큘럼에서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동양 고중세사’였던 강좌가 ‘동아시아 고중세사’로 바뀌는 형식이다. 중국사를 전공한 교수가 일본사까지 강의를 못하는 경우 협조를 얻어 특강을 하는 형식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한국의 동아시아사 과목의 등장은 학교 현장의 요구가 대학 교육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의 역사학계에서 동아시아사는 변두리 영역으로 갈 길이 멀다. 한편 일본에서도 학습지도요령 개편 과정에서 고등학교에 “역사·기초”과목이 개설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한국의 동아시아사 교과목이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고도 한다. 한·중·일 공동 부교재를 제작하며 보았던 중국의 학자들도 예전보다는 융통성이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을 느꼈다. 이처럼 동아시아 국가 안의 사람들이 상대의 입장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역사 전쟁을 거치면서 나타났다는 것에 위안을 삼고 있다.

학생들의 수업에서는 전반적으로 동아시아사 수업이 흥미있었다는 것과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이를 통해서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정세를 이해할 수 있어 좋았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특히 한국사와 세계사처럼 죽어 있는 역사가 아니라 지금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자신들의 역사로 이해하게 된 점은 큰 소득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업 방안의 모색, 모형의 창출 등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교육 개혁에서는 다양한 사실의 암기보다는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살아있는 수업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사와 결합한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교과로서의 동아시아사에 대한 생각은 긍정적이었다. 다만 일본 정부에 대해 학생들이 품고 있는 반감은 오히려 강화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과 함께 어떤 학생은 오히려 민족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과 같은 느낌도 받았다. 특히 시간이 지나고 피해자가 없어지면 감정도 누그러지고 화해가 가능하다는 입장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해주었다. 이것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젊은이들도 이 문제를 알아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해주었다. 수업 중에 이런 주장들에 대하여 간단한 해설을 덧붙였는데, 학생들 간에 토론을 시켰으면 더 의미가 있고, 좋은 수업이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사 연수를 통하여 교과와 성격과 목표를 정확히 이해함도 동시에 자료의 제공도 필요할 것이라 여겨진다.

동아시아사는 학생들 자신이 살아야 하는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 좀더 상대에게 다가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참고 문헌〉

- 전교조 대구지부, 『조선통신사』, 한길사, 2005.
- 한·중·일 교재위원회, 『미래를 여는 역사』, 한겨레출판사, 2005.
- 한·중·일 교재위원회, 『한·중·일이 함께 읽는 동아시아 근현대사』, 휴머니스트, 2012.
- 전쟁과여성인권센터, 『여성의 눈으로 본 한일근현대사』, 한울아카데미, 2005.
- 전국역사교사모임, 『마주보는 한일사』, 사계절, 2006.
- 역사교과서연구회, 『한일교류의 역사』, 해안, 2007.
- 국립제주박물관 편, 『미술로 본 동아시아의 문화교류』, 서경, 2006.
- 동북아역사재단,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개발보고서』, 동북아역사재단, 2007. 1.
- 박중현, 『청소년을 위한 동아시아사』, 두리미디어, 2012.
- 유용태, 『환호 속의 경종』, 휴머니스트, 2006.
- 유용태 외, 『함께읽는 동아시아 근현대사』, 창비, 2010.
- 정연, 「고등학교〈동아시아사〉의 성격과 내용체계」, 『동북아역사논총』19, 2008.
- 정재정외, 『동아시아사를 만든 10가지 사건』, 창비, 2008.
- 우에하라 카즈요시 외, 『동아시아 근현대사』, 옛오늘, 2000.
- 요시노 마코토 지음, 『동아시아 속의 한일 2천년사』, 책과함께, 2005.
- 일본역사교육자협의회, 『동아시아 역사와 일본』, 동아시아, 2005.
- 키시모토 미오 외, 『조선과 중국, 근세 오백년을 가다』, 역사비평사, 2003.

한일 고대국가의 형성발전 및 교류
- <임나일본부>론을 중심으로 -

• 이재석 (한성대) •

한일 고대국가의 형성발전 및 교류

- <임나일본부>론을 중심으로 -

이재석 (한성대)

A. <임나일본부>론이란?

1. 소위 임나일본부 학설이란? 왜의 '한반도 남부 경영'론

- 임나일본부 학설은 왜국의 야마토 정권(大和政權)이 4세기 중반 이래 6세기 중반(562년 신라의 가야 전체 병합)까지 200여 년 간 임나를 직할령으로 하여 백제, 신라까지도 간 접지배 하에 두고 있었다는 것.

가야 병합 후 신라는 왜국에 소위 임나의 조(調)를 바쳤다. 647년 왜국을 방문한 김춘추를 인질로 삼고 드디어 왜는 임나의 조를 폐지했다. (출전-모두 日本書紀)

- '임나(任那)'란?

- ① 일본서기 등의 일본측 사료의 용례 ; 가야의 한 국(김해 중심? 삼국지 위치 동이전 韓條의 '拘那韓國' = '任那加羅' = 금관가야)을 가리키기도 하고 때로는 가야권 전체를 총괄하는 개념(총칭)으로도 사용
- ② 한국사료 속의 임나 ; 광개토왕비문 속의 '임나가라' / 삼국사기 열전(강수전)의 '임나', 진경대사비의 '임나'
- ③ 중국 사료 속의 임나 ; 唐代 한원(翰苑) 속의 신라조에 신라의 지배 영역으로서 '임나'를 언급

- '임나'의 의미는? 님(임)의 나라?=가야 연맹체의 맹주격의 나라를 의미?

2. 일본학계의 연구(‘임나일본부’론의 정립)

- 『日本書紀』는 처음부터 백제-신라-임나-고구려 등이 모두 왜국 야마토 조정의 복속국(조공국)으로 설정하고 있음 정한론(征韓論)의 정신적 기원
- 19세기 말부터 임나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한일병합의 역사적 정당성 도출과도 연관. 일본의 근대역사학=서구의 역사학연구 방법론(랑케의 실증주의) 적용
- 대표적 연구

管政友(칸 마사토모), 〈任那考〉(1893)

那珂通世(나카 미치요), 〈加羅考〉(1894)

今西龍(이미니시 류), 〈加羅疆域考〉(1919)

津田左右吉(즈다 소우키치), 〈任那疆域考〉(1913). 『古事記および日本書紀の研究』(1924)

池内宏(이케우치 히로시), 『日本上代史の一研究』(1947)

末松保和(스에마츠 야스카즈), 『任那興亡史』(1949)

임나일본부론의 완결판. 일본의 통설을 형성 (일본서기 등의 사료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해보아도 역시 왜가 임나를 지배한 것은 역사적 사실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제공)

- 주된 연구의 자료

『日本書紀』(720), 광개토대왕 비문, 칠지도, 중국의 『宋書』 왜국전 ...

3. 1960년대 이후의 연구의 변화(일본학계 통설에 대한 반론/비판의 쇄도)

① 북한 김석형의 ‘삼한삼국일본열도분국론(分國論)’(1963)의 충격

② 이진희의 공개토왕비문 석회 변조설 제기

③ 천관우의 日本書紀 사료비판=본격적인 문헌비판의 효시

④ 가야권역의 고고학적 발굴 성과.

1980년대 이후 본격적인 가야사의 복원 시도(김태식의 4국시대?), 고대 한일관계사의 재검증(이영식, 연민수, 백승충..)

⑤ 임나일본부=기관이 아니라 사신을 의미하였다는 사신설의 등장.

가야의 왜는 야마토의 왜와는 무관한 존재였다?... 다양한 학설

B. <임나일본부>론 관련 사료의 비판적 검토 4~5세기의 사료 비판이 중요

1) 한반도 남부지배의 전설적인 기원 사료 : 신공황후의 소위 삼한정벌 전승

<사료-1> 『日本書紀』 신공황후 섭정전기 9년조

(섭정전기) 9년 겨울 10월 己亥朔 辛丑, 和珥津(와니노쓰)에서 출발하였다. 이때 바람의 신이 바람을 일으키고, 파도의 신이 파도를 일으켜 바다 속의 큰 고기들이 다 떠올라 배를 도왔다. 바람은 순풍이 불고 범선은 파도를 따라갔다. 노를 쓸 필요도 없이 곧 신라에 이르렀다. 그때 배에 따른 파도가 멀리 나라 안에까지 미쳤다. 이것으로 天神地祇가 모두 도와 준 것을 알았다. 신라왕은 전전공공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여러 사람을 모아서 “신라의 건국 이래 아직 바닷물이 나라 안에까지 올라온 일을 듣지 못하였다. 천운이 다해 나라가 바다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였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군이 바다를 메우고, 깃발들이 햇빛에 빛나고 북과 피리 소리가 산천에 울렸다. 신라왕은 멀리 바라보고, 생각 밖의 군사들이 자기나라를 멸망시키려는가라고 생각하였다. 두려워 싸울 마음을 잃었다.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내가 들으니 동쪽에 神國이 있다. 日本이라고 한다. 또한 聖王이 있다. 天皇이라고 한다. 반드시 그 나라의 神兵일 것이다. 어찌 군사를 내어 방어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고 백기를 들어 항복하였다. 흰 줄을 목에 감고 스스로를 포박하였다. 圖籍을 바치고, 王船 앞에서 항복하였다. 그리고 “금후는 길이 乾坤과 같이 엮드려 飼部가 되겠습니다. 배의 키가 마를 사이 없이, 춘추로 말빛과 말 채찍을 바치겠습니다. 또, 바다가 멀지만 매년 남녀의 調를 바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거듭 맹세하여 “동에서 나오는 해가 서에서 나오지 않는 한 또 阿利那禮(아리나레)河가 역류하고 강의 돌이 하늘에 올라가 별이 되는 일이 없는 한, 춘추의 朝를 빼거나 태만하여 빛과 채찍을 바치지 아니하면 天神地祇와 함께 죄를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그때 어떤 사람이 “신라왕을 죽입시다”라고 하였다. 이에 황후가 “처음에 신의 가르침에 따라 장차 금은의 나라를 얻으려고 하였다. 또, 三軍에 호령하여 ‘스스로 항복하여 오는 자는 죽이지 말라’고 말한 바 있다. 지금 이미 財國을 얻었다. 또, 사람이 스스로 항복하였다. 죽이는 것은 상서롭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그 결박을 풀어 飼部(미마카히)의 일을 맡겼다. 드디어 그 나라 안에 들어가, 重寶의 곳간을 봉하고 圖籍文書를 거두었다. 황후가 가지고 있던 槍을 新羅王門에 세우고, 후세의 표로 하였다. 그 창이 지금도 신라왕의 문에 서 있다. 신라왕 波沙寐錦은 微叱己知波珍干岐를 인질로 하고, 金銀彩色 및 綾羅縑絹을 가지고 80척의 배에 실어 官軍을 따라가게 했다. 이로써 신라왕은 항

상 배 80척의 調를 일본국에 바친다. 이것이 그 연유이다. 이에 고려, 백제 두 나라 왕은 신라가 圖籍을 거두어 日本國에 항복하였다는 것을 듣고, 몰래 그 군세를 엿보게 하였다.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스스로 薙外에 와서 머리를 땅에 대고 “금후는 길이 西蕃이라 일컫고 朝貢을 그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 인해 內官家屯倉을 정하였다. 이것이 소위 三韓이다. 황후는 신라에서 돌아왔다.

2) 한반도 남부 지배의 출발점으로 평가받는 사료 ; 신공황후의 소위 가야 7국 평정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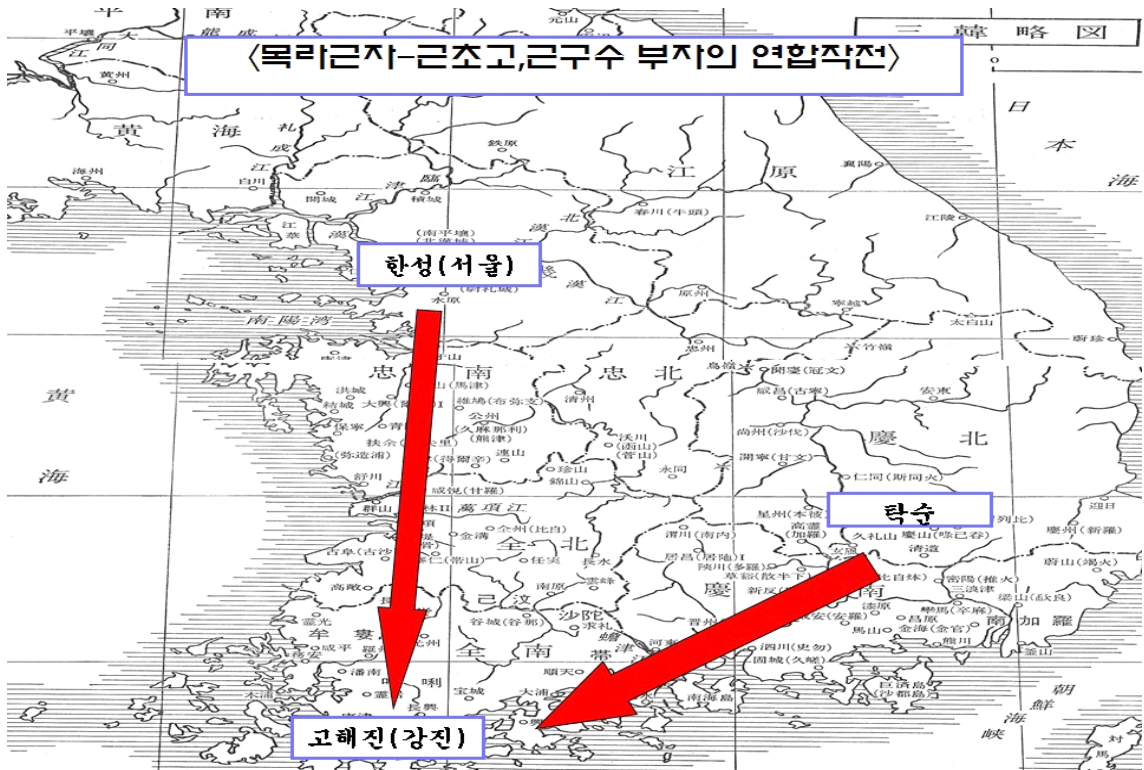
〈사료-2〉『日本書紀』 신공황후 섭정 49년조

49년 봄 3월. 荒田別·鹿我別을 장군으로 삼아 久氐 등과 함께 병사를 거느리고 건너가서 卓淳國에 이르러 장차 신라를 치려고 하였다. 이때 어떤 사람이 “군대가 적어서 신라를 깨뜨릴 수 없으니, 다시 沙白과 蓋盧를 보내어 군사를 늘려 주도록 요청하십시오”라고 말했다. 곧 木羅斤資와 沙沙奴跪에게 [분주; 이 두 사람은 그 姓을 모른다. 단 木羅斤資는 百濟 장군이다.] 정병을 이끌고 沙白·蓋盧와 함께 가도록 명령하였다. 함께 卓淳에 모여 신라를 격파하고 이어서 比自怛·南加羅·喙國·安羅·多羅·卓淳·加羅 7국을 평정하였다.

또, 군대를 옮겨 서쪽으로 돌아 古奚津에 이르러 남만(南蠻) 침미다례(枕彌多禮)를 무찔러 百濟에게 주었다. 이에 백제 왕인 肖古와 왕자인 貴須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만났다. 이때 比利·辟中·布彌支·半古의 4군이 스스로 항복하였다. …(중략)… 이때 백제왕이 맹세하여 말하였다. “만약 풀을 갈아서 자리를 만든다면 불에 탈까 두렵고, 나무로 자리를 만든다면 물에 떠내려갈까 걱정된다. 그러므로 반석에 앉아 맹세하는 것은 오래도록 썩지 않을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니, 이로써 지금 이후 천년·만년 끊이지 않고 항상 西蕃이라 칭하고 봄·가을로 조공하겠다.” 곧 千熊長彦을 거느리고 도읍에 이르러 후하게 예를 더하고 久氐 등을 함께 보냈다.

〈사료-3〉『日本書紀』 흠명천황 2년조

聖明王이 “옛적에 우리 선조 速古王, 貴首王의 치세 때에 安羅, 加羅, 卓淳의 한기 등이 처음 사신을 보내고 상통하여 친밀하게 친교를 맺었었다. 子弟의 나라가 되어 더불어 융성하기를 바랐다. 그런데, 지금 신라에 속임을 받고 천황의 노여움을 사서 임나의 원한을 사게 된 것은 과인의 잘못이다. 나는 깊이 뉘우쳐 下部 中佐平 麻鹵(마로)·城方 甲背 昧奴(마나) 등을 보내어 가라에 가서 임나의 일본에 모여 맹세를 하게 하였다.



3) 칠지도(七支刀)의 해석

앞 : 「泰()四年(五)月十(六)日丙午正陽造百練()七支刀()辟百兵宜(復)供侯王()()()作」
 태화 4년 (오)월 십육일 병오날 정양중에 백련강철로 칠지도를 만들었다. 이는 나
 야가 백병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므로 후왕에게 보내준다. □□□□ 가 제작한 것
 이다.

뒤 : 「先世以來未有此刀百濟(王)世(子)奇生聖音故爲倭王(旨)造傳(示)後世」
 선세이래로 이와 같은 칼은 없었다. 백제(왕)세(자) 기생성음이 왜왕의 뜻을 위하여
 만들었으니 후세에 길이 전하여 보일지어다.

**일본서기에도 백제 근초고왕이 신공황후에게 칠지도 등을 바쳤다는 기사가 있음

4) 광개토왕 비문의 기사

- ◎ 신묘년(391)조 : 百殘新羅舊是屬民由來朝貢, 而倭以辛卯年來渡海破百殘□□□羅以爲臣民
- ◎ 永樂6년(396)조 : 영락 6년(396) 병신년에 왕이 친히 군을 이끌고 백잔국을 토벌하였다. ...(중략)... 이에 백잔주(〔百〕殘主)가 인핍(因逼)해져, 남녀 생구 1천명과 세포 천필을 바치면서 왕에게 항복하고, 이제부터 영원히 고구려왕의 노객(奴客)이 되겠다고 맹세하였다.
- ◎ 永樂9년(399)조 : 영락 9년(399) 기해년에 백잔이 맹서를 어기고 왜와 화통하였다. [이에] 왕이 평양으로 행차하여 내려갔다. 그 때 신라왕이 사신을 보내어 아뢰기를 "왜인이 그 국경에 가득차 성지(城池)를 부수고 노객으로 하여금 왜의 민으로 삼으려 하니 이에 왕께 귀의하여 구원을 요청합니다"라고 하였다.
- ◎ 永樂10년(400)조 : 10년(400) 경자년에 왕이 보병과 기병 도합 5만명을 보내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고구려군이] 남거성(男居城)을 거쳐 신라성(新羅城)에 이르니, 그 곳에 왜군이 가득하였다. 관군이 막 도착하니 왜적이 퇴각하였다. [고구려군이] 그 뒤를 급히 추격하여 임나가라(任那加羅)의 종발성(從拔城)에 이르니 성이 곧 항복하였다. ... 永樂14년(404)조 : 14년(404) 갑진년에 왜가 법도를 지키지 않고 대방 경계까지 침입하였다. 백잔병과 화통하여 석성(石城)....., 연선(連船

5) 목라근자-목만치 父子 기사의 분석

〈사료-4〉『日本書紀』 신공황후 섭정 62년조

62년. 신라가 朝貢해 오지 않았다. 이해에 襲津彦(소츠히코)을 보내 신라를 치게 하였다. [“百濟記”에서 말하기를, 壬午년에 신라가 貴國에 不奉하였다. 貴國은 沙至比跪(사치히코)를 보내 치게 하였다. 신라인은 미녀 두 명을 단장하여 津에서 마중하여 유혹하였다. 沙至比跪는 그 미녀를 받고서는 도리어 加羅國을 쳤다. 加羅國王 己本旱岐 및 아들 百久至·阿首至·國沙利·伊羅麻酒·爾汶至 등이 그 인민을 거느리고 백제로 도망하였다. 백제는 후하게 대우하였다. 가라국왕의 누이 旣殿至가 大倭를 향해 가서 “천황은 沙至比跪를 보내 신라를 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라의 미녀를 받고는 치는 것을 중지하고 오히려 우리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형제, 인민이 모두 유리하였습니다. 근심을 이기지 못하여 와서

아닙니다”라고 말하였다. 천황이 크게 노하여, 木羅斤資를 보내 군사를 거느리고 가라에 이르러 그 사직을 복구시켰다라고 하였다.

〈사료-5〉『日本書紀』應神天皇 25(414?)년조

百濟의 直支王(405-419)이 죽었다. 아들 久爾辛(420~426)이 왕이 되었다. 왕은 나이 어렸다. 木滿致가 국정을 잡았다. 王母와 간음하여 무례한 일이 많았다. 천황이 듣고 불렀다. (百濟記에 말하였다. 木羅斤資가 新羅를 칠 때, 그 나라의 부인을 얻어서 낳은 자다. 그 아버지의 공이 있으므로 任那일을 도맡아 보았다. 우리나라에 오고, 貴國에 왕래하였다. 제도를 天朝에서 배우고, 우리나라의 정사를 집행하였다. 권세가 성하였다. 그런데 天朝가 그 포악한 것을 듣고 불렀다.)

〈사료-6〉『삼국사기』백제본기 개로왕 21(475)년 조

蓋鹵王이 “...나는 마땅히 사직을 위하여 죽겠지만 너도 여기서 함께 죽는 것은 무익한 일이다. 너는 피하여 나라의 계통을 잇도록 하라”고 하였다. 文周는 이에 木滿致·祖彌桀取와 함께 남으로 갔다.

6) 야마토 군대의 임나 주둔? 기생반숙네 기사

〈사료-7〉『日本書紀』현종천황 3년(487)시세(이해)조 (백제 동성왕 9년)

(3년) 이 해. 紀生磐宿禰가 任那를 점거하고 高句麗와 교통하였으며, 서쪽에서 장차 三韓의 왕 노릇을 하려고 官府를 정비하고 스스로 神聖이라고 칭하였다. 任那의 左魯·那奇他甲背 등의 계책을 써서 百濟의 適莫爾解를 爾林에서 죽였다. [爾林은 高句麗의 땅이다.] 帶山城을 쌓아 동쪽 길을 막고 지켰다. 군량을 운반하는 나무를 끊어 (백제의) 군대가 굶주려 고생하도록 하였다. 百濟王이 크게 화가 나서 領軍 古爾解·內頭 莫古解 등을 보내어 무리를 거느리고 帶山城에 나아가 공격하게 하였다. 이에 紀生磐宿禰는 군대를 내보내 맞아 쳤는데 膽力이 더욱 왕성하여 향하는 곳마다 모두 깨뜨렸다. 한 사람이 백 사람을 감당할 정도였다. 그러나, 얼마 후 군대의 힘이 다하니 일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알고 임나로부터 돌아왔다. 이로 말미암아 百濟國이 佐魯·那奇他甲背 등 300여 명을 죽였다.

〈사료-8〉 『日本書紀』 흘명천황 5년(544) 2월조 (백제 성왕 22년)

2월, 백제가 施德 馬武, 施德 高分屋, 施德 斯那奴次酒 등을 임나에 사신으로 보내, ... 따로 河內直[百濟本紀에는 河內直·移那斯·麻都로 되어 있다. 그러나 말이 변하는 것이 심하여 을바를 것은 미상이다]에게 말하여 “옛적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는 다만 그대의 나쁜 것만 들어왔다. 그대의 선조들도[百濟本紀에는 그대의 선조 那干陀甲背, 加獵直岐甲背라고 한다. 또 那奇陀甲背, 鷹奇岐彌라 한다. 말이 변한 것이 심하여 미상이다] 다같이 흥계를 품고 거짓을 말하였다. 爲哥可君[百濟本紀에 爲哥岐彌, 이름은 有非岐라 하였다]이 그 말을 믿고 국난을 걱정하지 않았다. 우리 뜻에 배반하여 자기 마음대로 포악한 일을 하였다. 이 때문에 쫓겨났다. (하략)

〈사료-9〉 『송서』 왜국전 기사

- ◎ 元嘉 15년(438년) 讚이 죽고 동생 珍이 使臣을 보내어 朝貢하였다. 使持節都督 倭百濟新羅 任那 秦韓 慕韓 六國 諸軍事 安東大將軍 倭國王이라 스스로 칭하였다. 安東將軍倭國王을 除授하였다.
- ◎ 元嘉 20년(443년) 倭國王 濟에게 安東將軍 倭國王을 除授하다.
- ◎ 元嘉 28년(451년) 使持節都督 倭 新羅 任那 加羅 秦韓 慕韓 六國諸軍事로 삼고 安東將軍은 옛날과 같다. 23명도 함께 軍, 郡에 除授하였다.
- ◎ 世祖 大明 6년(462년) 安東將軍 倭國王을 加하다.
- ◎ 興이 죽고 아우 武가 서자 使持節都督 倭百濟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七國諸軍事 安東大將軍 倭國王이라 스스로 칭하였다. →상표문을 바침. ‘開府儀同三司’ 칭호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함
- ◎ 昇明 2년(478년) 武에게 使持節都督 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 安東大將軍 倭王을 삼았다.

C. 왜 왜국이 주체가 되어 기술되기에 이르렀는가?

① 일본서기 편찬 과정의 이해

→개별 씨족들의 기록을 제출받아 편찬에 이용.

ex) 이나리아마고분 출토 철검 명문과 신무천황기의 비교

이나리아마 고분 철검명문

(앞면) 辛亥年七月中記.乎獲居臣,上祖名意富比埵,其兒多加利足尼,其兒名弓已加利獲居,其兒名多加披次獲居,其兒名多沙鬼獲居,其兒名半弓比,

(뒷면) 其兒名加差披余,其兒名乎獲居臣.世 爲杖刀人首,奉事來至今. 獲加多支齒大王寺在斯鬼宮時,吾左治天下,令作此百練利刀,記吾奉事根原也.

(앞) 신해년 7월에 적는다. 오와케-신(乎獲居臣), 윗대 조상의 이름은 오호-히코(意富比), 그 아들은 타카리-스쿠네(多加利足尼), 그 아들의 이름은 테요카리-와케(弓已加利獲居), 그 아들의 이름은 타카헤시-와케(多加披次獲居), 그 아들의 이름은 타사키-와케(多沙鬼獲居), 그 아들의 이름은 하테히(半弓比),

(뒤) 그 아들의 이름은 카사헤요(差披余), 그 아들의 이름이 오와케-오미이다. 대대로 장도인(杖刀人)의 우두머리가 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봉사하여 왔다. 와카타케루(獲加多支齒)大王를 모시어 시키(斯鬼)宮에 있을 때 나는 천하를 다스림을 도와서 이 백련리도(百練利刀)를 만들게 하였으니, 내가 봉사한 근원을 적는다.

※일본서기의 각 천황기에는 ○○천황대에 누구누구씨의 조상인 누구누구를 보내어 어떠한 일을 하게 했다는 식의 기술이 매우 많이 나옴

② 백제기, 백제신찬, 백제본기의 비밀

- 백제 멸망 후 망명 백제인들이 왜국에 가지고 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원래의 내용에서 윤색 왜곡되는 경우도 왕왕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됨

- 소위 百濟三書가 일본서기에 인용되거나 채록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함.

과거 백제인으로서의 행동이 그 후손이 일본에 와서 천황의 신하/백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거 조상의 행동은 마치 일본인의 행동으로 치부될 수 있는 구조가 발생.

ex) 예를 들어 木滿致가 蘇我滿智가 되었다면 백제장군으로서의 아버지 木羅斤資의 369년 가라 7국 평정이나 382년의 대가야 부흥, 木滿致의 임나 경영 등은 왜인으로서의 일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고려시대 한중관계

• 이진한 (고려대) •

고려시대 한중관계

이진한 (고려대)



고려(高麗)

- 고려(918-1392): 태조 -공양왕(34대)
- 평양천도 이후 고구려의 국호
- 궁예가 건국한 후 첫번째 국호
-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정한 국호
- 남북 통일 후의 국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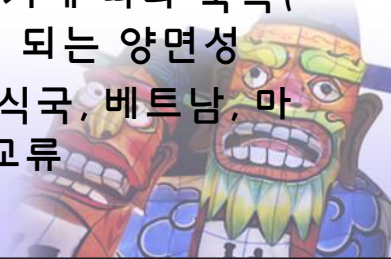
고려시대 중국왕조 변화(多隣性)

- 거란과 오대(후량, 당, 진, 한, 주), 십국
- 거란과 송, 서하
- 금과 송, 서하, 대리
- 몽고(원)과 송
- 원
- 원과 명
- 명과 북원



고려와 중국의 정세

- 중국의 많은 왕조가 흥망: 고려에 영향
- 중국에 두개 이상의 왕조가 있을 때 고려는 외교적으로 유리(송-거란, 금)
- 중국에 강력한 통일왕조가 등장: 고려에 대한 외교적 압력 증가(원, 명)
= 중국이 가까이 있는 것은 시기에 따라 축복(문화적 측면)과 재앙(정치적)이 되는 양면성
= 중국 이외에 일본, 여진, 대식국, 베트남, 말라야국, 유구, 섬라국 등과의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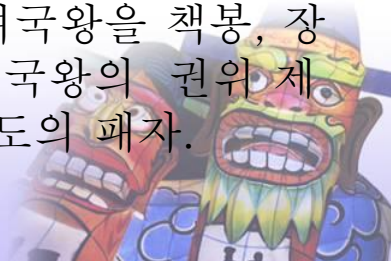
해동천하관(海東天下觀)

- 고려 왕건상: 통천관(通天冠: 천자, 고려) ⇔ 원유관(遠遊冠: 제후, 조선).
- 고려 왕건 초상: 12류면류관 ⇔ 9류관(조선)
- 천자국 또는 황제국 체제: 당6전 체제, 의례
- 해동천하, 해동천자: 중국의 사대 책봉을 전제로 한 천하관. 태양(중국), 지구(고려), 달(여진). => 고려의 자주성을 보여주나 중국과 대등했다는 식의 의미 부여는 안됨.



태조의 대중국 외교

- 918년 후량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사신을 파견, 건국후 고유 연호인 천수(天授) 사용
- 후백제가 이미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선점
- 태조는 후량을 이은 중원왕조인 후당에 사신 파견, 932년 대규모 사신과 조공.
- 933년 후당의 사신이 고려국왕을 책봉, 장흥(長興) 연호 사용. 고려 국왕의 권위 체고, 후백제를 대신한 한반도의 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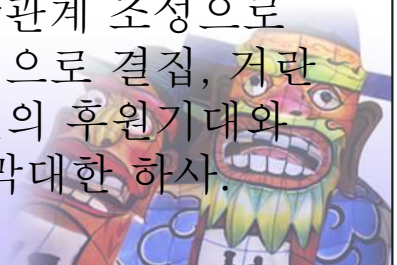
태조대 후진과의 외교

- 후당을 이은 후진 고조 석경당(石敬瑭)은 거란의 도움으로 건국.
- 후진은 사실상 거란의 ‘괴뢰국가’
- 거란에게 연운지역 할양: 장성 이남 지역이 거란 영토가 되어 송대에 이르기까지 근심거리
- 고려는 후진건국 후 조공, 후진은 즉시 사신 파견하여 고려국왕을 책봉, 우호관계



만부교 사건

- 942년 거란의 사신을 유배보내고, 거란 황제가 보낸 낙타를 만부교에 묶어두고 굶겨 죽인 사건.
- 사신을 유배한 것은 거란에 대한 도발
- 의도: 통일에 큰 도움을 준 발해유민에 대한 정서 고려. 거란과 긴장관계 조성으로 호족들의 무력을 국왕중심으로 결집, 거란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후진의 후원기대와 해상무역 지속=>혜종대 막대한 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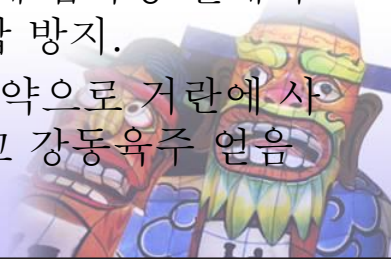
송의 건국과 고려와의 외교

- 송이 건국한 후 십국의 여러 나라를 차례로 정복 통일(?), 거란과 양립하는 형세
- 광종은 송의 건국 이후 즉시 사신 파견 ⇔ 송의 신속한 책봉.
- 광종은 송 황제의 책봉을 통해 호족세력들에 대한 권위를 높일 필요.
- 송 태조는 거란의 배후에 있는 고려를 이용하려는 외교적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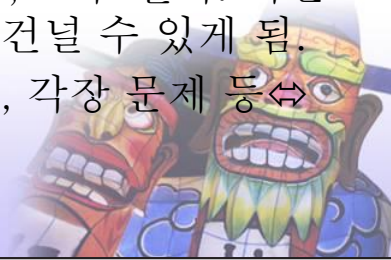
성종의 대종국 외교

- 친송정책: 현실적으로 고려의 직접적 군사적 위협이 되고 있는 거란보다 바다 건너 문화적 선진국인 송과 외교. 문물제도 도입에 실제적인 도움.
- 송의 적극외교: 성종에 대한 5차례 책봉/
- 거란은 고려를 침입하기 전에 압록강 일대의 여진 제압. 송과 여진의 연합 방지.
- 거란의 1차 침입: 서희의 활약으로 거란에 사대하는 조건으로 철수시키고 강동육주 연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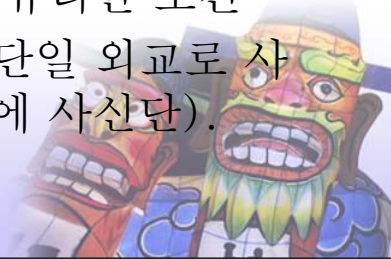
현종대 대중국 외교 1

- 993년 거란과의 1차 침입 이후, 거란에 사대를 하면서도 송에 계속 사신을 보내는 이중외교, 송은 책봉과 관계없이 고려에 후사.
- 1010년 거란의 2차침입은 고려의 이중외교 방지가 목적. 개경 함락, 나주몽진, 반격.
- 1015년 압록강 하중도 점령, 보주 설치. 거란이 계절 관계없이 압록강을 건널 수 있게 됨.
- 이후 고려를 압박할 때 활용, 각장 문제 등⇨ 고려의 지속적 반환요구.



현종의 대중국 외교 2

- 3차 침입 역시 고려-송의 외교를 단절하려는 것, 준비된 고려는 거란군을 격파(귀주대첩)
- 고려는 더 이상의 전쟁이 국익에 도움 안 된다고 판단=> 1022년 거란과 책봉관계를 맺음. 승리했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
- 이후 고려는 거란에 대한 단일 외교로 사대에 충실. (1031년에 송에 사신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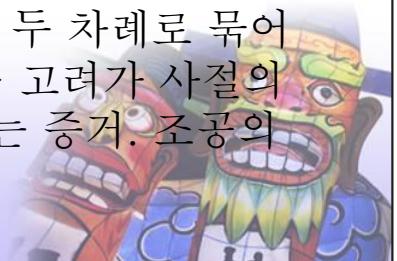
고려와 거란의 사절

- 거란이 고려에 보낸 사신은 책봉사와 고려 왕의 생신사(生辰使) 등.
- 고려가 거란에 보낸 사신은 약 30여 종류: 방물사(方物使: 進奉使), 하정사(賀正使: 正旦使), 사계문후사(四季問候使), 절일사(節日使) 등 정기사절과 사신 파견에 대한 답례로 가는 사은사(謝恩使) 등 비정기적 사절. 송에 비해 훨씬 많은 고려 사절이 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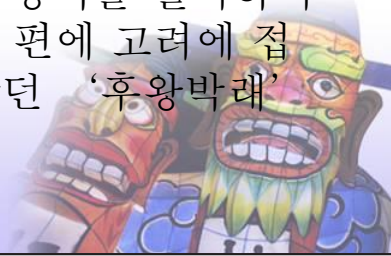
거란의 고려 사절 축소요구

- 거란은 고려의 사절이 너무 많자, ‘춘하계 문후사(春夏季問候使)를 한 번씩만 보내되 천령절하례사(千齡節賀禮使)와 정단사(正旦使)와 동행하도록 하고 추동계문후사(秋冬季問候使)도 한 번씩 보내되 태후생신하례사(太后生辰賀禮使)와 동행하도록 명함.
- 1년에 7차례인 고려 사신을 두 차례로 묶어 한꺼번에 오도록 한 조치=> 고려가 사절의 종류를 늘려 실리를 얻었다는 증거. 조공의 역설. 약소국에게 유리.



문종(1046-1083)의 대송통교: 배경

- 정종대(1036, 1041) 송에 사신파견이후 문종대(1071년)까지 송과의 사신교환 없음.
- 문종: 거란 세력 약화 간파,
- 1040년대에 송에서 고려와 연합하여 거란을 제압해야한다 (聯麗制遼策)' 는 주장 등장.
- 1068년 신종 즉위후 부국강병책을 실시하며 북방의 영토회복 위해, 송상 편에 고려에 접근 <=> 고려는 예전에 받았던 '후왕박래' 를 들며 대송외교 시도.



거란의 방해

- 거란은 고려가 송과 외교를 재개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강온양면책
- 문종을 5번 책봉: 加冊, 태자도 3회 책봉
- 1054년 보주(保州) 동쪽에 궁구문과 우정(郵停) 설치, 국경분쟁 야기.
- 1057년 거란이 송의 북방을 공격
- 1063년 거란이 고려에 대장경 1장(藏)을 줌.



내사문하성 (內史門下省)의 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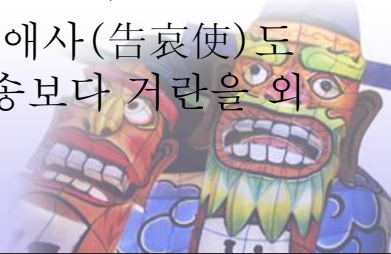
- 내사문하성이 이르기를, “우리 나라에는 문물과 예악이 행한지 이미 오래되었으며 상박이 연이어 내왕하여서 값진 보배가 날마다 들어오므로 중국과 교통하여도 실제로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거란과 영구히 절교하지 않을 것이라면 송과 통교함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좇았다(<<高麗史節要>> 권5, 문종 12년 8월)

문종의 대비책: 국방

- 축성(築城), 무기의 제조, 병량의 확보
- 군비를 확충하고 병제를 정비
- 군사들에 대한 포상과 구휼을 통해 사기를 높임
- 군사 국방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고 그 집행에 간여하는 특별기구로서 도병마사를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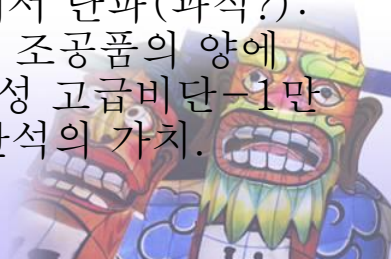
문종의 대비책: 외교

- 거란에 대한 사신 파견을 중단하지 않음.
- 고려가 거란의 책봉국이라는 전제하에 문종은 송의 황제에게 책봉을 요구하지 않음.
- 송에 보내는 표에 연호 없이 갑자기년(甲子紀年)만을 사용. 외교의 기본이 해당국의 연호의 사용이지만, 예외를 둠. 송도 묵인.
- 문종 사후 죽음을 알리는 고애사(告哀使)도 당연히 거란에 먼저 보냄. 송보다 거란을 외교적 우위에 둠.



문종의 대송통교 성공과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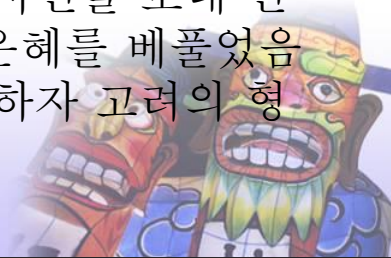
- 충분한 준비를 거쳐 1071년 사신 김제(金悌)를 송에 파견
- 송의 요구에 의해 고려가 위협을 무릅쓰고 송과 통교를 진행한 것이어서 막대한 물품과 더불어 고려가 원하는 문화적 산품(예: 유출 금지 귀중서적) 등을 제공함.
- 1080년 유흥의 배가 중국에서 난파(과적?): 매번 고려가 송에 갈 때마다 조공품의 양에 관계없이 절견(浙絹) - 절강성 고급비단 - 1만 필을 주기로 함, 대략 쌀 1만석의 가치.



인종대(1122-1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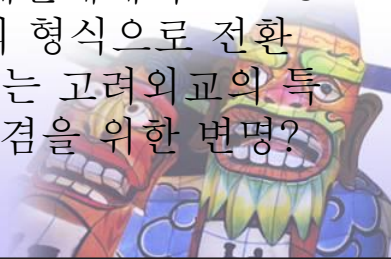
대중국 외교

- 송이 금을 끌어들이려 거란을 공략하고 멸망시키는데 성공했으나, 금을 배신하자 금의 공격을 받아 두 황제가 사로잡힘(1126년, 정강의 변). 회하 이북 지역의 영토를 빼앗기고 남하하여 남송을 세움.
- 위기에 처한 송은 고려에 사신을 보내 전 황제들이 고려에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음을 들며 도와줄 것을 요청하자 고려의 형편을 들며 완곡하게 거절.



고려와 금의 사대관계

- 고려는 금이 거란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국경의 큰우환이었던 보주 등을 회복함.
- 1107년 윤관의 여진 정벌과 9성반환 과정을 통해 여진의 군사력 경험. 인종 즉위 후 중국의 정세에 대한 정보.
- 1117년(예종 12) 금과 형제관계에서 1125년(인종 3) 금과 군신관계의 형식으로 전환은 명분보다 실리를 중시하는 고려외교의 특징을 잘보여주는 사건. 이자겸을 위한 변명?



초기 몽골과의 관계

- 1218년과 1219년 몽골군에 쫓겨 고려에 들어온 동진국(東眞國) 군대를 고려군과 협공하여 물리치면서 우호적 관계로 시작.
- 이후 몽골은 많은 양의 공물을 요구하였으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자 고려국왕 앞에서 무례한 행동. 그 동안 중국의 여러 왕조와 사대를 하면서 정성을 담은 방물을 보낼 뿐, 그것이 강요의 대상은 아니었음.



몽골과의 전쟁 개시

- 고려는 공물을 따지며 압박하는 몽골에 반감.
- 자주 고려에 와서 행패를 부리던 몽골의 사신 저고여(著古與)가 1225년 고려에 왔다가 귀국 중에 압록강변에서 피살됨. 몽골에게 고려 침략의 명분을 줌.
- 몽골의 아시아 지배 전략에 따라 1231년에 살레탑(撒禮塔)이 지휘하는 몽골군사가 고려를 공격. 약 29년간 9차례에 걸친 고려와 몽골의 전쟁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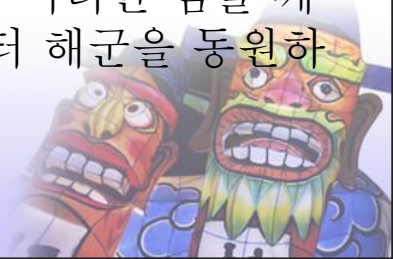
강화도 천도

- 최씨 정권은 항복하는 것이 곧 자신의 권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항전을 택하고, 최우는 여러 신료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1232년에 개경에서 강화로 천도함.
- 최우는 <<삼도부>>에서 바다 건너편에 있는 산과 섬을 둘러싼 바다가 자연의 방어막이 되고, 섬 안의 두 큰 산이 관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강도(江都)가 외적을 막기 쉬운 곳이라고 표현.



강화도와 조운

- 강화도는 방어상에 유리한 점이 있었을 뿐 아니라 고려의 조운체계와 해상 교통의 편리함을 그대로 활용 가능.
- 고려는 몽골군의 침략으로 육지가 유린되었지만, 바다를 장악하였으므로 장기간 항전을 할 수 있었고, 뒤늦게 이러한 점을 깨달은 몽골군은 1256년부터 해군을 동원하여 섬을 공격하기 시작함.



원의 부마국

- 원종대에 세자—충렬왕—가 원에 입조하여 황실의 딸과 혼인하게 됨에 따라 양국은 사돈 관계.
- 충렬왕은 원 황제의 부마 지위를 얻고 원 제국 내에서 고려 국가의 위상이 상승하였으며, 고려 내에서 국왕의 권위는 높아짐.



세조구제와 6사

- ‘세조구제(世祖舊制)’ : 양국의 관계는 원이 고려국왕에 대한 책봉권을 행사함으로써 고려에 대한 간섭을 확고히 하는 체제.
- 6사: 고려가 원에 대해 해야 할 6가지 의무, 인질을 보내는 것, 군사적 협력, 양식의 공출, 역전(驛傳)의 설치, 호적의 제출, 다루가치(達魯花赤)의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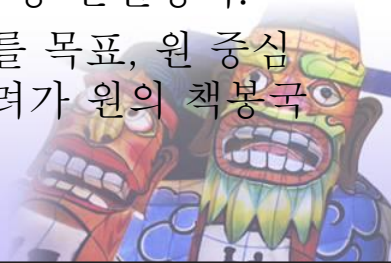
원의 정치적 간섭

- 반면에 충렬왕 이후 여러 국왕이 원에 친조를 함.
- 두 명의 고려 국왕: 충렬왕과 충선왕, 충선왕과 충숙왕, 충숙왕과 충혜왕. 서로 협조보다는 경쟁함. 중조(重祚).
- 충선왕이 동시에 보유하던 고려 국왕과 신왕의 지위를 두 명에게 나누어줌으로 인해 또다른 경쟁관계.
- 원의 고려 분열 정책.



공민왕의 반원개혁 정치

- 원에서 머물면서 원제국의 쇠퇴 확인.
- 즉위 이후 5년 동안 국제정세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왕권 강화.
- 1356년(공민왕 5)에 문종대 구제회복, 부원배의 척결, 정동행성이문소(征東行省理問所)의 폐지, 쌍성총관부의 회복 등 반원정책.
- 원의 정치적 간섭에서 배제를 목표, 원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질서나 고려가 원의 책봉국이라는 사실은 인정.



명의 건국과 고려의 외교

- 주원장(朱元璋)이 장사성 등의 군웅을 정벌하며 세력을 확대하고 1368년 명을 건국하자 오래지 않아 고려는 사신을 보내 외교를 개시하였고, 명은 고려에 사신을 보내 공민왕을 책봉.
- 공민왕은 반원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대명 외교 추진, 중원을 통일하지 못한 신생국인 명도 호응. 책봉관계가 성립되고 해도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사신 왕래.

고려와 명 관계의 악화

- 1371년에 명이 요동지역으로 진출하면서 고려에 대해 강압적인 자세로 돌변하여, 내정간섭을 본격화.
- 1374년 6월에 명에서 돌아온 정비(鄭庇)의 편에 전해진 명 황제의 조서와 증서성의 자문에는 고려가 명에 조공하는 것은 1년에 여러 차례[一年數聘] 하던 것을 3년에 1차례[三年一聘]로 하며 해도를 이용하도록 명함.

공마 문제

- 명은 아직 요동 지역을 정벌하지 못한 상황으로 전마가 필요.
- 원대에 조성된 탐라 목장의 말에 관심.
- 고려에 여러 차례 공마 요구. 마치 원이 공물을 강요하던 것과 유사.
- 우왕대 정치와 왜구의 침구 등이 대명외교의 운신을 좁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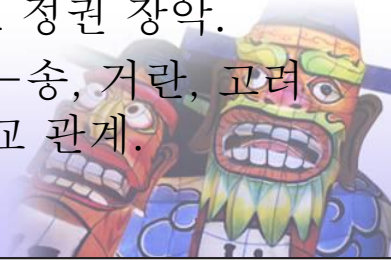
철령위 설치와 요동정벌

- 1385년 명이 공민왕의 시호와 우왕 책봉.
- 이후 다시 공마 문제로 관계 악화
- 1387년 명이 요동을 차지한 뒤, 고려의 철령 이북 땅 요구.
- 최영이 주도하여 요동정벌 준비, 1388년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으로 정권 장악.
- 양국 관계의 정상화. 고려-송, 거란, 고려-원 관계 중간 정도의 외교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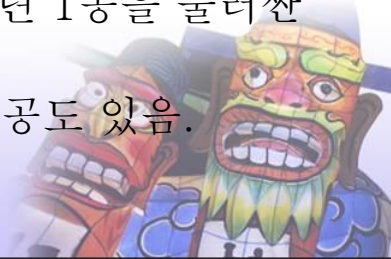
철령위 설치와 요동정벌

- 1385년 명이 공민왕의 시호와 우왕 책봉.
- 이후 다시 공마 문제로 관계 악화
- 1387년 명이 요동을 차지한 뒤, 고려의 철령 이북 땅 요구.
- 최영이 주도하여 요동정벌 준비, 1388년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으로 정권 장악.
- 양국 관계의 정상화. 고려-송, 거란, 고려-원 관계 중간 정도의 외교 관계.



고려시대 대외관계의 특징

- 조공의 재인식: 선진문물 수입의 효율적방식
- 고려 태조, 광종, 성종의 친송정책
- 현종, 문종, 예종 등의 친송 외교 또는 이중외교의 목적.
- 거란과 고려의 사신 수 조정 문제
- 고려의 명 간의 1년 수공, 3년 1공을 둘러싼 갈등.
- 원의 고려에 대한 수탈적 조공도 있음.



고려의 실리 외교

- 조공책봉관계는 다분히 형식적인 측면.
- 중국은 조공한 나라에 대해 황제가 준 책력(冊曆)—正朔—을 사용하고, 일정한 시기와 조공로, 사절의 인원, 조공품, 정해진 문서 등의 형식을 등을 준수한다면 조공하는 국가의 정치적 자주성을 보장.
- 고려는 중국왕조의 각종 편의를 제공받으면서 조공한 것 이상의 여러 가지 회사품을 받음. 후왕박래(厚往薄來). 실리외교.

고려의 외교적 역량

- 고려는 국가의 생존과 번영이라는 전략을 바탕으로 한 주변 국가와의 외교적 전술에 매우 능하였기 때문에 동아시아 국제 정세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500년 가까이 왕조를 지속.
- 고려 태조의 만부교 사건, 서희의 외교, 문종의 대송통교 재개, 거란과 금의 교체기 고려의 외교, 대몽항쟁과 강화체결, 공민왕의 반원정책, 우왕대 요동정벌 시도.

고려의 유능한 외교

- 성종대 송의 거란에 대한 협공 요구 거절.
- 거란이 1차 침입 때 많은 사람들이 북쪽 영토를 떼어주거나 항복하자고 했으나, 거란의 침입 목적을 정확히 파악한 서희는 소손녕과 담판을 하여 전쟁을 종식시키고, 오히려 압록강 부근의 강동육주를 얻음.
- 문종은 거란과의 사대를 하면서도 대송 통교를 결행한 대가로 송으로부터 막대한 희사품을 받고 고려를 부강하게 만듦.

대몽항쟁과 강화

- 무신정권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강화천도를 단행하고 몽골과의 항쟁을 지속: 전세가 불리할 때 몽골의 요구를 들어준다고 하며 철수시키고, 이후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외교적 수사로 몽골을 기만하며 30여년간의 버팀
- 1259년 고려 태자와 쿠빌라이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몽골과 항전했던 다른 어떤 나라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강화.

대명외교와 요동정벌

- 공민왕의 사후에 우왕의 정통성이 문제되면서 고려는 명과의 외교에서 주도권을 빼앗기고 공마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
- 하지만 명이 고려의 옛 땅에 대한 원과의 연고를 주장하며 철령위를 설치하려 하자, 단호하게 군사적인 행동.
- 최영의 요동정벌이 위화도 회군으로 결국 실패했으나 명의 고려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됨=> 고려에 유리한 화해.

고려시기의 전쟁과 외교

- 고려외교의 자주성을 잘 보여주는 것은 이민족의 침략에 대한 적극적인 항전과 빛나는 승리. 비굴함과 교활함이 통하는 이유.
- 고려 왕조가 여러 차례 오랜 전쟁을 수행해 나가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 이민족에 대한 문화적 자부심도.
- 전쟁 과정, 전후 처리, 강화 협상에서 외교적 수완을 발휘=> 인구 300만 정도의 고려가 중국의 대제국과 맞설 수 있었던 힘.

고려의 외교적 역량의 재발견

- 고려왕조가 475년간 주변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 속에서도 굳건하게 유지해나갈 수 있었던 것은 주체적인 외교 역량이 있었기 때문
- 주변 정세에 따라 얻어진 것도 있지만,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고려 나름의 특유한 힘이 있었음.



타율성의 극복

- 식민주의 사관의 타율성론은 우리의 역사와 현재의 대한민국이 틀렸음을 증명.
- 더 나아가 고려의 ‘국가적 위상’을 주변국으로부터 실제 이상으로 평가받고 권위를 누릴 수 있게 하였던 고려의 전통적 외교, 전쟁과 평화 시기를 막론하고 그것을 실현시켰던 국왕 및 외교를 맡았던 관인들의 업적과 노력에 대해 재조명 필요.



명의 국제질서와 한중관계
- 14세기에서 15세기로의 전환기를 중심으로 -

• 조영헌 (고려대) •

명의 국제질서와 한중관계

- 14세기에서 15세기로의 전환기를 중심으로 -

조영헌 (고려대)

* 인트로 : 명의 국제질서란?

- 1398년의 의미 : 조선의 태조(이성계)와 명의 태조(주원장) 집권이 동시에 끝나던 해.(주원장의 사망과 이성계의 퇴위) 또한 같은 해 8월 정도전이 1차 왕자의 난으로 사망. 조선에 대한 불신과 경계로 조선을 압박하던 홍무제의 사망과 요동 정벌의 주도자로 지목된 정도전의 사망, 즉 갈등의 중심에 있던 주축 인물이 동시에 사라짐으로 조선과 명 양국의 갈등은 어느 정도 해결되며, 양국 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됨(강문식, 2014, p.38).
- 혼란했던 격변기를 거치면서 조-명 관계의 기본틀이라 할 수 있는 소위 ‘明秩序’(= 명의 국제질서 = 명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가 형성된 시기. 물론 이러한 명 중심의 국제질서가 ‘완성’된 것은 1404년 일본과 명 사이에 책봉-조공 관계가 맺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 명의 출현과 함께 새로이 재편된 동아시아 질서는 기존 군신 관계 정도로 이루어지던 ‘소극적’인 책봉-조공 관계와 달리, 실질적인 힘과 이념이 결합된 ‘적극적’인 책봉-조공 관계로 변화되어 19세기 청 말까지 그 기본틀로 기능을 유지.
- 당시 외교 관계 : 책봉(冊封)과 조공(朝貢)의 의례(儀禮)를 교환하는 예적(禮的) 관계. 종주국(宗主國)과 번속국(藩屬國) 사이에 의제적(擬制的) 군신(君臣) 관계. 이는 ‘독립적이면서 동시에 차등적인 관계’를 전제.
- 이는 九州(협의를의 天下)뿐 아니라 夷狄까지 포함한 세계(광의의 天下)를 실효적 지배 영역으로 인식한 대원제국의 유산을 계승한 명조가 유교 이데올로기를 활용하여 원의 천하질서를 계승한 측면이 강함.(檀上寬, 2013, 제3부) 단 피책봉국 境內에까지 황제 지배를 구현하려 할 때 명조는 기본적으로 禮制를 매개로 했다는 특징을 지님.(岩井茂

樹, 2005) 원 중심의 세계질서와 차별되는 지점.

- 14세기 후반 15세기 한중 관계의 특징.

- 중국의 왕조 교체(元에서 명으로)와 한국의 왕조교체(高麗에서 朝鮮으로)가 거의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시기. 이로 인해 양국 사이에 이해관계의 변동이 대단히 급속하게 변동하면서 貢期 역시 불안정하게 변동함. 가령 ‘1年3使(신년을 축하하는 賀正使,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는 聖節使, 황태자의 생일을 축하하는 千秋使)’는 1400년(定宗2/建文2) 회복된 이후 1531년(中宗26/嘉靖10) 冬至使가 추가되어 ‘1年4使’ 되기까지 130여 년간 안정적으로 지속됨.
- 무엇보다 원의 퇴조와 명의 등장이라는 ‘중심’ 축의 出入이 발생했던 14세기 후반기에 중국과 한반도와의 관계 뿐 아니라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일시적인 혼돈과 새로운 질서가 형성됨. 따라서 명 중심의 국제질서를 파악함에 있어 13세기 후반 14세기 후반까지 약 100년 동안 유라시아 대륙 거의 전체에 걸쳐 구현되었던 몽골 중심의 세계질서와 그 유산에 유념할 필요가 있음(김호동, 2010).
- 19세까지 지속되는 조선과 명 청 사이의 한중 관계사의 기본적인 역학구도가 성립되는 시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원 간섭기를 분기점으로 형성된 한중 관계, 즉 국왕은 대내외 구별 없이 황제의 신하이면서 군주라는 이중적인 위상(제후국 위상)이 근본적인 변화 없이 조선 말기까지 지속됨(최종석, 2010). 가령 고려 이래로 거행되어 오던 원구제가 1412년(태종12) “天子祭天地, 諸侯祭境內山川”식의 예를 받아들이는 가운데 폐지됨.
- 특기한 점은 한중 관계의 기본 축이 되었던 책공-조공 관계에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도 포함되었던 시기. 따라서 한·중·일 동아시아 삼국 사이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책봉-조공이라는 ‘형식’과 무역과 교류라는 ‘내용’이 공존하는 시기로, 이는 16세기 이후와는 구별되는 15세기의 시대적 특징. 영파쟁공(寧波爭貢) 이후 사실상 명-일 간의 책봉-조공 관계는 파산. 하지만 한중 관계의 기본 구조는 19세기까지 지속.
- 이러한 맥락에서 한-중 관계의 특수성이라는 부분 역시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시각 : 동아시아 무대에서 조선의 호응이 없는 ‘명질서(明秩序)’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계승범, 2010)이나 원간섭기에 비하여 현저하게 약화된 명조의 책봉-조공 관계의 설정과 요구가 보다 철저하게 도모된 것은 조선의 자발적 움직임(혹은 철저한 제후국적 구현의 지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올 정도(최종석, 2016). 이러한 명조의 빈례(賓禮) 규정, 즉 예의(儀禮)의 연출 공간이 중국 본국을 넘어서 외국에까지 파급된

것은 명의 의례가 최초인데, 이는 동아시아 전역이 혼일(混一)된 상태를 경험했던 元代の 유산으로 파악이 가능하고, 따라서 이전에 고려가 번국(蕃國)이라는 ‘타자’의 조건을 마련해 주었기에 중국이 ‘중국’으로서 완성될 수 있었다는 주장(정동훈, 2016)도 마찬가지로 맥락.

- 따라서 이번 발표는 먼저 동아시아 지역 내의 여러 관계를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재구성해서 전체를 아우르는 동아시아像을 도출한 뒤, 이러한 동아시아 국제관계 속에서 연동되는 한-중 관계에 주안점을 두어 서술하려 함. 즉 한-일 관계와 중-일 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시야 속에서 한-중 관계를 재조명해보는 작업. 이는 국제관계사의 구조적 이해 속에서 일국사의 대외관계를 조망하는 방법(이익주, 2012). 이 과정에서 명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라는 보편성과 한-중 관계의 특수성 혹은 조선의 ‘창의성’을 구별하는데 유의해야 함.
- 시작점은 조선왕조가 수립된 1392년이지만, 당시는 명 건국 후 고려와 통교한지 4반세기가 지난 시점이기에, 고려말 對明관계의 연장선 상에서 朝-明 관계를 고찰하는 것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함. 즉 중원에서 원에서 명으로의 왕조 교체로부터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균열과 일국사적 변화가 대대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인식을 기반으로(이익주, 2006).

1. 14세기 후반 15세기 초반 동아시아 세계의 지각변동

1) 중국의 왕조 교체

- 1368년 朱元璋(洪武帝)이 明朝를 개창.
- 농업을 중시하며 屯田을 통한 자급자족을 지향하는 주원장이 상업을 중시하며 활발한 해외통상을 추구하던 강남의 張士誠과 方國珍 세력을 진압하며 명조 개창. 이 결과는 명조의 성격과 관련해서 시사하는 바가 큼(박원호, 2007a, p.70)
- 대도를 떠난 ‘北元’ 정권은 上都 → 和林(카라코룸) → 應昌(지금의 내몽고 자치구 커스커팅 克什克騰 서쪽)까지 전전하며 20여 년간 제위를 계승하지만(元順帝→황태자 아유시리다라(元昭宗)→동생 토구스테무르), 1388년(우왕14/홍무21) 결국 명군에 의하여 멸망. 이 20년 동안 北元은 요동 지역의 나하추 등 원 잔여세력과 연합하고, 때로는

고려와도 제후를 추구하고 捲土重來를 노렸음(오함, 2003, pp.221-225).

- 이후 胡惟庸의 變을 통해 재상직을 폐지하고 황제가 직접 六部를 총괄함. 실제 文淵閣 武英殿 文華殿의 대학사들이 각종 章奏를 관장하고 황제를 보좌하게 함.
- 藍玉 사건을 통해 건국에 공로 있던 대부분의 功臣宿將을 숙청.
- 북변 지역의 방어를 위해 諸王分封 제도를 추진. 25명의 親王이 전국의 군사적 요지에 분봉됨.(원조의 유산) 특히 몽골 세력을 방어하기 위해 만리장성을 따라 9왕이 배치됨.
- 永樂帝의 '靖難의 變'과 북경천도
 - '정난의 변'이라는 쿠데타로 황위에 오른 영락제는 이후 수도를 남경에서 북경으로 천도함. 북변방어의 강화라는 명분으로.
 - 대운하의 재정비를 통한 재개통(會通河와 淸江浦 구간).
 - 몽골 세력을 진압하여 북변 방어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5차에 걸친 漠北親征을 추진.
 - 조공 국가의 확대를 위해 대규모의 鄭和 원정단을 인도양으로 6차에 걸쳐 파견.(4차부터 분견대가 아프리카 동단의 마린디까지 진출)
 - 安南을 정복(1406년)하고 이름을 交趾로 바꾸어 직할령으로 통치.
- '仁宣之治': 仁宗과 宣宗의 치세. (『明史紀事本末』)
- 1449년(세종31/정통14) '土木堡의 變'
 - 본격적인 宦官정치의 시작.(王振에서 시작)
 - 일시적인 南京환도론의 대두.

2) 한국의 왕조 교체

- 공민왕이 주도한 反元운동은 몽골족의 쇠퇴 국면에서 가능한 일이지만, 동시에 그 성공이 원의 몰락을 가속화하는데 일조함. 고려는 중국 강남 지역 反元勢力(張士誠과 方國珍 등)들의 합종연횡에 참여했기에.
 - 1368년 주원장이 원의 大都 점령하자, 고려는 즉시 원의 至正 연호를 정지하고, 이듬해(1369년) 명의 책봉을 받아 洪武 연호 사용. 책봉-조공관계의 대상이 원에서 명으로 교체된 것. 1369년부터 고려는 기존 몽골 세력에 대해 '北元' 호칭을 사용.
- 1392년 李成桂(太祖)가 朝鮮을 개창.
- 1404년 일본 무로마치 막부의 장군과 직접 통교 시작. 즉 국교 수립.
 - 이는 원과 고려의 일본 침략 실패(1281년) 이후 원 중심의 국제질서를 의식하여 일본

과의 교섭이나 교류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 일변된 것. 즉 조선과 일본이 모두 명으로부터 책봉을 받음으로써, 명 중심의 ‘中華的 국제질서’ 속에 함께 편입되었고, 그 속에서 交隣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손승철, 1993).

3) 일본의 南北朝 통합

- 室町막부의 足利義滿이 약 60년간 계속된 南北朝의 동란을 종식시키고, 전국적인 통일 정권을 수립.
- 남북조 동란기에 한반도와 중국 연해지역을 침략했던 해적집단(전기 왜구)에 대한 막부의 단속이 시행되고 1404년 明朝와 책봉-조공 관계가 성립함. 일본이 책봉을 받은 것은 5세기 倭五王 이후 처음.
- 1404년 막부와 조선 사이에도 국교가 성립됨. 즉 日本國王, 즉 막부의 장군인 아시카가 요시미츠와 조선 사이에 직접 통교가 시작됨.
- 중국과는 감합무역의 형태로 진행된 조공무역.
- 이러한 현상을 달리 보면, 일본 국내의 정치적 혼란으로부터 파생한 倭寇가 고려와 중국 해안을 침략함으로써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붕괴와 재편을 재촉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음. 즉 왜구의 출현은 그동안 강력했던 원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동요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해석이 가능(檀上寬, 1997). 따라서 다시 왜구가 단속되었다는 것은 명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힘을 발휘했다는 증거.
- 또한 40년에 걸친 왜구의 침략은 결국 고려에서 최영, 이성계 등 무장세력의 정치적 지위가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함(박원호, 2007a, p.75).

4) 북방민족의 동향

- 北元 세력이 漠北 지역으로 도주.
- 이후 몽골에서 타타르(韃靼)부와 오이라트부가 대립하며 패권쟁탈전을 벌임.
- 에센의 유목왕국
- 요동에 원 잔여세력 가운데 나하추가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무칼리의 자손) 나하추가 명에 항복하면서 요동의 원 잔여세력은 진압되고, 이후 명은 요동경략을 본격적으로 모색함.

2. 한국과 중국 사이의 역학관계와 관계설정의 변동

1) 고려-원의 관계 (1368년 이전)

- 고려 내부의 反元 세력과 親元 세력의 대립과 갈등
- 대체로 공민왕의 對元 정책(奇轍 등 附元 세력 제거, 征東行省 理問所 폐지, 雙城總管府 수복, 至正 연호의 중지 등)을 反元 운동으로 보는 것이 기존의 관점. 하지만 그 가운데 치밀한 준비가 부족했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곧 至正 연호를 복구한 점에 유의. 즉 반원운동 전개하며 정치적 간섭에서 벗어나는 것을 추구했지만, 원 중심의 국제질서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음(이익주, 2012, p.107) 張士誠 집단은 고려에 19회 使者를 파견하고, 고려는 4회에 걸쳐 報聘함. 장사성은 고려와의 통상이 주된 목적이었고 고려는 정세 파악을 위한 정탐이 목적(박원호, 2007a, p.68). 절동 台州에 자리잡은 方國珍 집단은 7년간 5회에 걸쳐 고려에 使者 파견.
- 고려에서 반원운동이 펼쳐지던 시기, 중국은 원말의 동란 상황. 강남 蘇州에 자리잡은 張士誠이 가장 먼저 고려와 통교함.(공민왕6년부터)
- 고려가 반원운동에 성공했음에도 원과의 책봉-조공 관계를 청산하지 못한 이유. 원 중심의 국제질서를 대체할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지 않았기에 불가피했다는 해석(김경록, 2007a).

2) 고려-명의 관계 (1368년~1391년)

- 1368년 (고려 공민왕 17년 / 명 홍무원년)
 - 1369년(공민왕18/홍무2) 麗-明 관계 회복 : 홍무제가 僕斯(符寶郎)를 고려에 파견하여 명조 수립 통고. 反元 정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던 공민왕은 환영하며 1369년 '洪武' 연호를 사용. → 책봉조공 관계가 정식 성립
 - 蒙元 세력 타도라는 목표의 일치로 양국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우호적인 관계 회복.
 - 하지만 이는 고려만의 특수한 상황이라 보기는 곤란. 1369년 명은 고려뿐 아니라 安南, 占城과도 책봉-조공관계를 수립함. 고려는 기존의 책봉국이 변경된 것이지만 안남과 점성은 오래 단절되었던 책봉-조공 관계의 부활.
- 하지만 親元派와 親明派로 갈렸던 고려말의 상황 : 고려가 北元과 明朝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해 가는지는 명조에게 초미의 관심사. 이 과정에서 고려의 양면외교(명에 조공하면서 북원 세력과 협조하는 것)를 의심하며 민감하게 대응함.

- 1368년 명조의 성립 직후부터 요동의 나하추가 명에 항복하는 1387년까지 고려는 명 중심의 새로운 질서를 체감하기 힘들었음. 하지만 명초 20여년 동안 친명외교 일변도로 경도되면서, 오히려 고려의 대외정책은 경직되고, 그 결과 명에 대한 과도한 貢物 부담을 자초했다는 해석(이익주, 2012). 한편 공민왕은 北元정권과 직접 상대하지 않는 ‘主明從元’의 양면외교 정책을 펼쳤으나, 우왕 즉위 후 북원의 ‘宣光’ 연호를 잠시 사용(1377년 사용, 1378년 다시 洪武 연호로)하는 등 원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는 ‘主元從明’의 양면정책으로 전환했고, 이러한 전환이 대세를 거스르는 외교였다는 해석(박원호, 2007a)도 있음.

- 요동 지방의 원 잔여세력 = 나하추(納哈出)를 둘러싼 문제

- 명 태조는 나하추의 牛家莊 습격 사건(1372년)에 고려가 공모했다고 생각하고 고려를 비난하며 조공을 3年1使로 할 것과 사행시 요동을 경유하지 못하게 함.
- 1385년(우왕11/홍무18) 양국 관계 회복 : 명은 우왕의 襲位를 뒤늦게 인정하고 억류시켰던 고려사신 송환하고 공역도 감면해줌. 이는 당시 명조가 나하추를 토벌하기 위해 고려와 나하추 사이의 연합 가능성을 줄이고, 나하추 정벌에 필요한 戰馬를 구입하려는 배경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변화(박원호, 2002).
- 1387년(우왕13/홍무20) 나하추 평정 이후 급변하는 명조의 대고려 정책 : 의욕적으로 요동 진출 도모, 고려사신 입국 금지를 遼東都司에게 명하는 동시에 鐵嶺衛 설치를 통고. → 反明 분위기 팽배, 崔瑩이 우왕과 요동정벌 추진.

- 1388년 : 우왕 14년(홍무21) 위화도 회군 이후에 확립된 고려의 대명 정책의 틀이 사실상 조선에도 그대로 전승.

- 1388년(우왕14/홍무21) 鐵嶺衛 설치를 둘러싼 고려와 명의 마찰 : 명 중심의 국제질서 완성되는 단계에서 일어난 막바지 진통. 명은 고려가 북원과 통교하고 여진을 포섭하려는 데에 자극을 받아 성급하게 鐵嶺衛 설치. 그만큼 명태조는 집권 초기 北元 세력이 滅絶에 조급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음을 이해해야 함. 즉 당시 명조의 최대 관심은 요동 자체가 아니라 北元. 여기서 당시 고려/조선의 상황인식 및 오늘날의 평가와의 일정한 간극 존재
- 최영은 우왕을 설득하여 요동정벌을 위한 출정을 단행. 명의 주력군 15만이 藍玉의 지휘 아래 북원 정벌 위해 북진을 시작한 시점. 하지만 위화도에서 회군한 이성계 세력

은 우왕을 폐위시키고 창왕을 옹립(곧 창왕 밀어내고 공양왕을 옹립).

- 명의 철령위 설치 기도 : 고려에 정변 불러일으키고, 후일 조선왕조 개창의 길을 열어 놓는 계기.

3) 조선-명의 관계 (1392년 이후)

- 홍무제는 조선의 역성혁명과 이성계의 즉위를 승인. 태조는 鄭道傳을 사은사로 명의 남경에 파견.
 - 국호 선택에 대한 평가 : ‘和寧’(태조가 출생한 永興의 옛 지명)과 ‘朝鮮’ 사이의 선택을 홍무제에게 의뢰. 지나친 사대인가? 외교적 마찰을 회피하기 위한 명분의 양보인가?
- 여전히 남은 요동 공벌을 둘러싼 갈등 : 요동공벌을 염두에 두고 군비강화를 추진한 정도전. (정도전에게는 의례적인 사대외교와 실질적인 부국강병 정책이 서로 모순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대목)
 - 이를 간파하고 있던 명태조는 외교문서인 表箋(表文과 箋文)에 ‘조롱하고 모욕하는’ 뜻의 글자가 섞여 있다는 구실로 조선을 압박. 表箋 문제를 명태조 개인의 열등의식이 발생시킨 筆禍事件으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요동 공벌에 대한 조짐과 함께 표전 문제는 조선의 ‘生釁(생흔=분규를 일으키는 일)과 ‘侮慢(모만=모욕하는 일)’으로 간주할 수 있음(박원호, 2002). → 표전 문제는 1395년 표문에서도, 1397
- 조명 관계의 모순을 암시하는 宗系辨誣 문제
 - 1394년(태조3/홍무27) 명사 黃永奇가 조선해적사건을 힐책할 무렵 발생. 황영기가 가져온 축문(海岳山川의 신령에게 告祭하는 축문)의 내용 중 이성계를 李仁任의 아들로 간주하는 내용 담김.
 - 1402년(태종2/건문4) 성절사 趙溫이 홍무제가 제정한 <皇明祖訓> 가운데 조선국왕의 宗系가 李仁任의 후손으로 기록되었음을 발견하여 보고 → 당시 ‘정난의 변’ 국면이기에 영락제 즉위를 기다려 1403년 사은사 편에 종계를 바로잡기 위한 주본을 보냄 → 개정하라는 영락제의 지시를 전해 옴 → 조선은 해결된 것으로 생각.
 - 1518년(중종13) <大明會典>이 조선에 전래. 여기에 담긴 <황명조훈>의 구절(“조선국은 즉 고려로서 그 李仁人(任) 및 아들인 이성계 지금 이름 ㅁ이라는 자는 홍무6년부터 홍무28년까지 전후로 王氏의 네 왕을 弑害하였다.”)을 바로잡기 위한 조선의 노력.
 - 1587년(선조20/만력15) <대명회전> 중수할 때, 조선의 해명사실을 附記. 이듬해 俞泓

- 이 만력본 <대명회전>을 가지고 귀국 : 180년에 걸친 현안 문제 해결.
- 조선 태종의 등극(1401년)과 명 영락제의 등극(1403년)
 - 태종은 기민하게 ‘정난의 변’이라는 쿠데타로 황위에 오른 영락제를 예찬.
 - 하지만 요동지방의 여진족을 사이에 두고 태조와 영락제는 각축을 벌임 : 퍄都里의 몽케 테무르(童猛哥帖木兒)를 사이에 두고. → 결국 동맹가침목아는 명의 건주위에 편입되고, 이후 여진족의 성장으로 연결됨.
 - 태종은 비교적 탄력적으로 대명외교 진행 : 정난의 변 종료 후 조선으로 유입된 건문제 휘하의 수만 명에 달하는 군대를 송환문제가 양국간에 참여하게 등장할 때, 태종은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 말교역도 조-명 간에 참여한 문제인데, 태종은 명의 정세를 활용하여 탄력적으로 대응(김경록, 2015, p.286).
 - 영락 연간이 끝날 무렵, 원간섭기 이후 지속된 복잡하고 갈등이 많았던 양국 관계는 안정기에 접어들어, 대체로 16세기 후반, 즉 壬辰倭亂 직전까지 지속됨(Donald N. Clark, 1998, p.273).

3. 명조 대외 정책의 변화와 연동하는 한중 관계

1) 홍무제가 복원한 ‘중국적 세계질서’ = 명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 = ‘明秩序’

- 홍무정권의 집권 31년 : 고려 공민왕 17년에서 조선 태조 7년까지. 한국의 왕조 교체로 인한 권력구도의 급변과 명조 홍무 정권의 집권 초반기 권력 기반의 불안 및 강화 과정이 겹쳐있던 대단히 중요한 시기. 1398년은 명 태조와 조선의 태조의 집권이 동시에 끝나는 해.(주원장의 사망과 이성계의 퇴위) 조명 관계의 첫 단추가 일단락되는 시점.
- 홍무제는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왕조 교체 시기, 한국에 대한 내정불간섭 정책을 취함. (c.f. 이색과 정몽주 등은 명의 간섭을 희망)
- 가령 황제가 禮制를 매개로 중국과 蕃國들과 이루어진 새로운 방식의 華夷질서를 구현하면서, ‘自爲聲教’(성교를 스스로 하라=聲教自由)와 ‘儀從本俗 法守舊章’(儀制는 본속을 따르고 법은 옛 규정을 지키라)이라는 홍무제의 聖旨. 실제 이를 근거로 번국 내에서 거행되는 의례들과 그 의주들에 거의 간여하지 않음(최종석, 2013).

- 베트남의 사례(대외적으로 명에 대해서는 ‘奉表稱臣’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황제국 체제를 운용.) (유인선, 2012)
- 홍무제의 등장, 즉 명조의 개창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의례와 규정 (명질서의 특징)
 - 명조의 賓禮 규정, 즉 儀禮의 연출 공간이 중국 본국을 넘어서 외국에까지 파급된 것은 명의 의례가 최초. 元의 유산으로 파악하는 견해(정동훈, 2016).
 - 피책봉국의 名山大川을 중국 내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天下山川으로 간주하여 명 측의 致祭 대상에 포함시킨 것. 또한 명 황제가 사신을 보내 피책봉국의 산천에 치제함.(최종석, 2009) 이 역시 원 황제가 고려에 보낸 降香使의 존재 이야기를 통해 그 원형은 원대에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음(최종석 2016, p.287).

2) 영락제의 대외 정책과 몽골의 유산

- 영락제가 燕王 시기 조선 사신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했던 이유 : 조선 사신이 수도 남경까지 육로로 가기 위해 반드시 연왕부(=북경=北平)를 경유해야 했기 때문. (이방원과 조준 등) 後顧의 염려를 덜기 위해서라도 조선과 우호적 관계 유지.
 - 영락제의 생모가 고려 출신 가능성이 높은 碩妃라는 설과의 관련성?
 - 연왕부 시절 북평에서 燕王이 조선 사신을 접견하는 장소는?
 - 조선이 燕王에게 말을 보낸 사실에 대해 명 태조는 “私交”로 지적.
- ‘정난의 변’ 시기 : 건문제의 불안정한 통치 시기. 조선에서는 ‘왕자의 난’ 발생.
 - 건문제의 조선 회유 정책 : 당시 중국 내부의 내전 상황에서 조선이 燕王(朱棣) 세력과 결탁될 것을 우려. 戰況이 불리해질수록 조선에 대해 더욱 회유의 자세를 드러냄.
 - 李芳遠 역시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건문제로부터 誥印을 수월하게 수여받음.
- 영락제의 대외적인 팽창정책
 - 안남 정벌
 - 정화의 원정
 - 5차에 걸친 몽골 정복 전쟁 (漠北親征)
 - 女真招撫 : 요동으로의 진출은 조선과의 긴장 관계를 유발. 당시 여진 부족은 靉都里, 兀良哈, 兀狄哈. 이 가운데 靉都리는 훗날 청조 황실의 조산이 되는 부족.
- 요동의 여진 문제
 - 최초의 女真 衛所 설치 : 建州衛, 兀者衛. 향후 요동에 산재하는 여진을 招撫하는 명조

의 전초기지 역할 수행. 이후 遼東都司를 발판으로 1409년(태종9/영락7)에 흑룡강 유역에 奴兒干都司 설립하고, 약 130개의 위소를 설치함. → 이러한 여진초무의 기반 위에 본격적으로 몽골 친정에 나섬(菊池俊彦 中村和之, 2008).

- 조선과 가장 밀접한 관계는 함경북도 회령에 거주하기도 했던 靉都里 부족 : 靉都里의 추장 朮赤 테무르(童猛哥帖木兒) 등이 조선에 內朝하자 태종은 上護軍의 관직을 수여하며 환대. 하지만 결국 朮赤 테무르는 명의 건주위에 포섭되고 영락제의 막북친정에 종군하기도 함.(오도리의 수장으로서 인근의 강력한 아하추(於虛出) 세력으로부터 자신의 부족을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 조선과의 관계에만 집중할 수 없었으며 명 황제의 초무에 응하는 것이 불가피했기 때문) → 4차 막북친정 이후 朮赤 테무르는 두만강 남쪽 阿木河(會寧)에 거주하며 건주좌위에 편제됨. → 이후 건륭44년(1779)에 완성된 『滿洲實錄』에서 청황실의 肇造로 숭상된 누르하치(1559~1626)의 6대조인 먼터무(孟特穆, Mentemu).
- 명이 朮赤 테무르의 북경 방문을 집요하게 추진하고 조선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인 배경에는 두만강 일대와 그 지역의 거주민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두 국가의 팽창주의적 욕망이 놓여 있었음. 한국학계는 당시 여진 세력을 조선의 藩屏이자 그들의 ‘조선화’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관점이 강한 반면, 중국학계는 명의 招撫 대상이자 세력 확장의 대상으로 해석하려 해 왔음. 하지만 이러한 일국사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변경사의 관점에서 이 지역과 여진을 바라보면, “여진이 거주하던 조선 변경은 하나의 주권이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명 조선 여진 등 복수의 정치 세력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이곳에서 주권은 복합적 중층적으로 시행되었음”(김선민, 2015, 183-184쪽). 당시 모든 여진부족이 바라는 바는 명과 조선 가운데 양자택일하는 것보다는 양쪽에 모두 入貢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최대화하려는 정책이자 생존방식이었음.(박원호, 2002, 190-191쪽)

- 환관 등용

- 북경 천도와 몽골의 유산

3) 영락제 이후

- 선종 : 정화의 마지막 7차 원정 이후 더 이상의 해양 원정단 파견 중단.(재정적인 요인 & 해양 인식과 대륙 인식의 차이)

- 1449년 토목보의 변 이후의 변화상.
- 몽골이라는 요소의 중요성.

4. 14세기 후반-15세기 한중 관계의 쟁점 재조명

1) 조공무역과 감합무역

- 조공의 핵심 : 책봉국이 공물을 바치는 進獻과 황제가 그 답례로 내려주는 回賜라는 경제 행위. 근대적인 국제 무역과는 성격이 다르나, 국제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물자 교역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공무역으로 파악 가능.
- 특히 15세기는 조-명 간에 자유로운 사무역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고, 사무역이 시행될 때도 명에 파견된 사신단에 부수적으로 이루어져 미미한 수준. 따라서 15세기 대명 교역에서 조공 무역의 비중은 매우 컸음.
- 책봉-조공이 지닌 호혜성의 원리(the rules of reciprocity).
- 일본의 勘合 무역과 한중 사이의 조공 무역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 감합무역의 성립 이후 倭寇 문제가 표면적으로 줄어들거나 사라진 현상과의 상관관계. 이후 감합무역의 파탄이 후기왜구의 창궐 및 임진왜란에 미친 영향을 고려.
- 金銀 歲貢
 - 1429년(세종11/宣德4) : 오랜 현안이었던 金銀歲貢이 면제되고 다른 품목으로 대체됨.
 - 이러한 금은세공의 면제가 이후 중국 중심으로 형성된 동아시아 세계의 은 유통권과 조선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2) 환관외교와 정화의 원정

- 明初 宦官 외교의 특징 : 인접 국가로 보내는 사신단의 주된 인솔자였던 宦官.
- 특히 조선에 파견했던 明使 인솔자의 대부분이 宦官이라는 점. 그 가운데 고려(조선) 출신의 宦官 비중이 높았던 사실. 이에 대한 조선의 대응.
- 淸의 조선 파견 사신의 인솔자가 대부분 旗人이라는 사실과 관련해서, 명의 사신단에서 宦官의 위상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 환관 鄭和의 원정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중국적 세계질서’의 변화와 이것이 한중 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재조명.
- 환관과 또 다른 부류가 한림원(翰林院)에서 복무하던 학사(學士).
- 대표적인 이가 16세기 명사(明使)로 온 공용경(龔用卿) : 이들이 남긴 기록이 『사조선록(使朝鮮錄)』으로 편집되고 일부가 한글로 번역 출간됨. 이 자료에는 중국 사신과 한국의 접반 관원들이 교환한 창화시(唱和詩)가 많은데, 이는 시부(詩賦)의 창화를 매개로 외교적 현안 해결을 위해 서로 호응했던 것. 따라서 이를 ‘창화(唱和)외교’라 부를 수 있으며, 이는 전통시대 한중 외교관계의 독특성을 잘 보여줌(김한규, 2011, p.8).

3) 사행로 : 육로와 해로

- 대체로 육로를 이용하지만, 해로를 사용했던 시기가 있었음 : 여말 요동/요서 지역의 정세가 안정되지 못하던 시기부터 명초 영락제가 남경에서 북경으로 천도하기 이전까지. 또한 명말 요동 지역이 후금에게 장악되었을 시기.
- 해로 : 일단 요동의 여순구까지 육로로 간 다음 여기서 배를 타고 산둥반도의 登州로 건너가서 다시 육로를 이용해 남경 도달.
- 수도가 남경일 때에도 조선의 사신은 육로를 주로 이용 : 이 때에 북경(당시 北平)을 경유하게 됨. / 고려 말 權近은 육로를 통해 북경에 도달한 후, 이곳에서 배를 타고 대운하를 따라 남경에 도달.
- 陸路와 海路 사용에 대한 명조의 비중 차이. 조선의 입장 차이.

4) 책봉-조공 관계에서 고려/조선 측의 ‘주체성’(자주성) 문제

- 공민왕이 반원운동 이후 재개한 원으로의 사절 파견 : 책봉-조공관계의 형식을 유지하되 원간섭기 내내 지속된 내정간섭의 소지를 없애고, 기존에 송 및 거란과 맺던 형식적인 책봉-조공관계의 회복으로 해석. 즉 공민왕의 대원정책은 고려의 자주성을 확대하는 성과로 해석(이익주, 2012)
- 이에 대해 최근 공민왕의 대원정책이 ‘世祖舊制’의 유지를 위한 것이므로 반원개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됨(이강한, 2009). 또한 1356년 고려의 至正 연호 중지를 ‘국내정치적 목적’이라는 해석도 이루어진 바 있음(김경록, 2007a)
- 조선 초 제후국 체제의 운영을 위해 제후의 分義에 적합한 제도와 禮式의 개정이 이루어

어짐. 즉 ‘時王之制’인 ‘洪武禮制’의 기준과 준용을 둘러싼 논쟁과 의례 개정이 진행됨. 이는 원 간섭기에 이루어진 ‘피동적’인 것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조선이 제후국으로서 ‘주체적으로’ 논쟁과 개정을 진행해나갔다는 주장.(최종석, 2016)

- 조선의 입장에서 무엇이 제후국으로서의 명분을 견지하도록 ‘주체적’으로 이끄는 내적 동인이 되었나? 중화(문명)를 보편적인 것으로 여기는 세계관 속에서 이상적 중화 문명을 구현하고자 하는 열망이지만, 이러한 중화 문명이 구현되는 조선이라는 시공간적 환경 및 국가 위상(제후국) 등의 특수성이 반영되면서 나름의 해석과 독특한 제도적 변형이 발생한다는 해석. 즉 중화(문명)를 보편적인 것으로 여기는 세계관 속에서 창의적 문물제도가 창출될 수 있었다는 것(최종석, 2013 ; 최종석, 2016 ; 문중양, 2013)
- 조선의 대외 정책을 ‘事大交隣’이라 정리하곤 하는데, 과연 조선이 여진, 일본, 유구 등을 ‘交隣’이라는 표현처럼 대등하게 인식했는가(강문식, 2014, pp.44-45)?
- 『經國大典』, 『禮典』을 보면, ‘事大’ 항목은 있으나 ‘交隣’ 항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1402년 제작된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 : 실제보다 확대된 조선과 축소된 일본의 모습을 통해 당시 지도를 제작한 조선인의 일본 인식 확인 가능. 이러한 인식은 여진도 마찬가지.

맺음말을 대신하여 : 조선의 국제적 시야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 1402년 제작된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
 - 국가적 지도제작 프로젝트
 - 2가지 지도를 기초로 : 이택민(李澤民,)의 성교광피도(聖教廣被圖) & 청준(淸濬, 1328-92)의 혼일강리도(混一疆理圖). 모두 원말의 지도로 대몽골제국의 세계관을 보여줌.
 - 조선의 세계지도는 이러한 중국 지도의 ‘종합’인가? ‘합성’인가?
 - 『혼일역대국도강리지도』에서 파악할 수 있는 조선의 국제적 시야.
- 16세기 제작된 『혼일역대국도강리지도(混一歷代國都疆理之圖)』로의 전화
 -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 이를 통해 해석할 수 있는 조선의 국제적 시야의 변화.

〈참고 문헌〉

- 강문식 등 지음, 『15세기 조선의 때 이른 절정』(민음한국사), 민음사, 2014
- 계승범, 『조선시대 해외파병과 한중관계 : 조선 지배층의 중국 인식』, 푸른역사, 2009
- 구범진 역주, 『이문 역주』, 세창출판사, 2012
- 기시모토 미오 · 미야지마 히로시 지음, 김현영 · 문순실 옮김, 『조선과 중국, 근세 오백년을 가다』, 역사비평사, 2003
- 김한규, 『한중관계사』 Ⅰ, Ⅱ, 아르케, 1999
- 김한규, 『사조선록 연구 : 송 명 청 시대 조선 使行錄의 사료적 가치』, 서강대학교출판부, 2011
- 김호동, 『몽골제국과 고려』,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 김호동, 『몽골제국과 세계사의 탄생』, 돌베개, 2010
- 루크 카이버스 지음, 김성준 옮김, 『역사와 바다 : 해양력의 세계여행』, 한국해사문제연구소, 1999
- 모모키 시로 역음, 최연식 옮김, 『해역아시아사 연구 입문』, 민속원, 2012
- 미야 노리코 지음, 김유영 옮김, 『조선이 그린 세계지도 : 몽골 제국의 유산과 동아시아』, 소와당, 2010
- 박원호, 『明初朝鮮關係史研究』, 일조각, 2002
- 배우성, 『조선과 중화 : 조선이 꿈꾸고 상상한 세계와 문명』, 돌베개, 2014
- 오상학, 『조선시대 세계지도와 세계인식』, 창비, 2011
- 오함 지음, 박원호 옮김, 『주원장전』, 지식산업사, 2003
- 요나하 준(與那覇潤) 지음, 최종길 옮김, 『중국화 하는 일본 : 동아시아 '문명의 충돌' 1천년사』, 페이퍼로드, 2013
- 유인선 『베트남과 그 이웃 중국 : 양국관계의 어제와 오늘』, 창비, 2012
- 윤은숙, 『몽골제국의 만주 지배사-옷치긴 왕가의 만주 경영과 이성계의 조선 건국-』, 소나무, 2011
- 이개석, 『고려-대원 관계 연구』, 지식산업사, 2013
- 이익주 등,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의 한중관계사 - 제언과 모색』, 동북아역사재단, 2010
- 이인영, 『韓國滿洲關係史의 연구』, 을유문화사, 1984
- 전해중, 『한중관계사연구』, 일조각, 1970
- 최소자, 『明清時代 中 · 韓關係史 研究』,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7
- 토마스 바필드 지음, 윤영인 옮김, 『위태로운 변경 : 기원전 221년에서 기원후 1757년까지의 유목제국과 중원』, 동북아역사재단, 2009
- 계승범, 『15-17세기 동아시아 속의 조선』, 이익주 등,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의 한중관계사 - 제언과 모색』, 동북아역사재단, 2010

- 계승범, 「조선 속의 명나라 -大報壇을 통해서 본 조선 지배층의 중화 인식-, 『명청사연구』 35, 2011
- 권인용, 「명중기 조선의 종계변무와 대명외교 : 권벌의 『조천록』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24, 2005
- 金成奎, 「중국왕조에서의 賓禮와 연혁, 『중국사연구』 23, 2003
- 김경록, 「조선초기 대명외교와 외교절차, 『한국사론』 44, 2000
- 김경록, 「조선초기 宗系辨誣의 전개양상과 대명관계, 『국사관논총』 108, 2006
- 김경록, 「中宗反正 이후 承襲外交와 조명관계, 『한국문화』 40, 2007b
- 김경록, 「공민왕대 국제정세와 대외관계의 전개양상, 『역사와 현실』 64, 2007a
- 김경록, 「흥무제의 대외인식과 조공제도의 정비, 『명청사연구』 37, 2012
- 김경록,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封典-조선시대를 중심으로-, 권선홍 이상의 운영인 김경록 지음, 『전통시대 동아시아 국제질서』,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15
- 김구진, 「明代 女眞社會와 姓氏의 變化, 『金俊燁教授 華甲記念 中國學論叢』, 1983
- 김구진, 「明代 女眞의 中國에 대한 公貿易과 私貿易, 『東洋史學研究』 48, 1994
- 김구진, 「朝鮮前期 韓·中關係史의 試論 - 朝鮮과 明의 使行과 그 性格에 대하여 -, 『弘益史學』 4, 1990
- 문중앙, 「15세기의 '風土不同論'과 조선의 고유성, 『한국사연구』 162, 2013
- 박원호, 「고려말 조선초 대명외교의 우여곡절, 『한국사 시민강좌』 36, 일조각, 2005
- 박원호, 「근대 이전 한중관계사에 대한 시각과 논점, 『한국사 시민강좌』 40, 일조각, 2007a
- 박원호, 「鐵嶺衛 설치에 대한 새로운 관점, 『韓國史研究』 136, 2007b
- 박재우, 「고려 君主의 국제적 위상, 『한국사학보』 20, 2005
- 서병국, 「朝鮮前期 對女眞關係史, 『國史館論叢』 14, 1990
- 손승철, 「조선시대 交隣體制의 분석과 그 문제점, 『한일관계사연구』 창간호, 1993
- 신석호, 「조선왕조 개국 당시의 대명관계, 『국사상의 제문제』 제1집, 국사편찬위원회, 1959
- 윤승희, 「조선초 對日賓禮 정비와 '受隣國書幣儀', 『조선시대사학보』 70, 2014
- 윤영인, 「10-12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사의 재조명을 위한 대안적 시각과 방법론 모색, 권선홍 이상의 운영인 김경록 지음, 『전통시대 동아시아 국제질서』,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15
- 윤영인, 「10-12세기 동아시아의 다원적 국제질서와 한중관계, 이익주 등,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의 한중관계사 - 제언과 모색』, 동북아역사재단, 2010
- 윤은숙, 「나가추의 활동과 14세기말 동아시아 政勢, 『명청사연구』 28, 2007
- 이강한, 「공민왕 5년(1356) '反元改革'의 재검토, 『대동문화연구』 65, 2009
- 이성규, 「중화사상의 팽창과 축소-그 이념과 실제, 『역사학보』 186, 2005
- 이영, 「14세기의 동아시아 국제정세와 왜구-공민왕 15년(1366)의 禁倭使節의 파견을 중심으로-, 『한일관

계사연구』 26, 2007

이익주, 「14세기 후반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고려-원·명-일본 관계」, 『진단학보』 114, 2012

이익주, 「14세기 후반 원 명 교체와 한반도」, 역사학회 편,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일조각, 2006

이익주, 「고려-몽골 관계사 연구 시각의 검토 - 고려-몽골 관계사에 대한 공시적, 통시적 접근」, 『한국중세사연구』 27, 2009

이익주, 「세계질서와 고려-몽골관계」, 이익주 등,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의 한중관계사 - 제언과 모색』, 동북아역사재단, 2010

정동훈, 「高麗-明 外交文書 書式의 성립과 배경」, 『韓國史論』 56, 2010

정동훈, 「고려시대 사신 영접 의례의 변동과 국가 위상」, 박종천 편, 『조선시대 예교담론과 예제질서』, 소명출판, 2016

정동훈, 「명대 초기 외국 사절의 신분증명 방식과 국가간 체계」, 『명청사연구』 40, 2013

정동훈, 「명초 국제질서의 재편과 고려의 위상」, 『역사와 현실』 89, 2013

최종석, 「고려시대 朝賀儀 의례 구조의 변동과 국가 위상」, 『한국문화』 51, 2010

최종석, 「麗末鮮初 明의 禮制와 지방 城隍祭 재편」, 『역사와 현실』 72, 2009

최종석, 「조선 초기 국가 위상과 '聲教自由」, 『한국사연구』 162, 2013

최종석, 「조선 초기 祭天禮와 그 개설 논란에 대한 재검토-태종 세종대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67, 2013

최종석, 「중화 보편, 딜레마, 창의의 메카니즘-조선 초기 문물제도 정비 성격의 재검토-」, 박종천 편, 『조선시대 예교담론과 예제질서』, 소명출판, 2016

한상권, 「16세기 대중국 사무역의 전개 -은무역을 중심으로-」, 『김철준박사 화갑기념 사학논총』, 1983.

萬明, 『明代中外關係史論考』,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1

余又蓀, 『宋元中日關係史』,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64

李光濤, 『明清史論集』, 臺灣商務印書館, 1971

蔣非非·王小甫等著, 『中韓關係史(古代卷)』,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98

田汝康, 『中國帆船貿易與對外關係史論集』, 浙江人民出版社, 1987

中國北方民族關係史編寫組, 『中國北方民族關係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7

田中健夫·石井正敏編, 『對外關係史辭典』, 吉川弘文館, 2009

鄭樑生, 『明·日關係史の研究』, 東京, 雄山閣, 1984

佐久間重男, 『日明關係史の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1992

萩原淳平, 『明代蒙古史研究』, 京都, 同朋社, 1980

공간을 통해서 본 한성 경성 서울의 역사

• 이수일 (연세대) •

공간을 통해서 본 한성 경성 서울의 역사

이수일 (연세대)

1. 친숙하면서도 낯선 서울

서울 시민에게 ‘장충동’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나? 하고 물으면, 조건반사적으로 거의 예외 없이 ‘장충동 족발’을 첫 번째로 거론한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아마도 그러한 대답은 우리의 소중한 삶을 펼쳐가는 사회적 역사적 공간에 대한 무심함 혹은 왜곡된 공간감각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평범한 서울 사람들의 서울에 대한 공간인식 역사적 이해는 불행하게도 조선을 영구히 식민지로 지배하려고 했던 일제가 만든 경성(京城)이라는 ‘지배-수탈의 공간’ 위에서 형성, 고착되었다. 조선 왕조의 왕도(王都)로서 그리고 대한제국의 황도(皇都)로 군림했던 한성(漢城)의 역사적 의미와 기억보다는 식민지 도시 경성의 그것이 오히려 더 깊게 우리 몸속에 각인되어 있다. 해방 후 경성의 공간이 제대로 해체되지 않은 채, 그 위에 덧칠 된 형태로 서울의 현대화가 이루어졌기에, 경성이 강제한 기억과 모습이 ‘식민지 근대’라는 이름으로 서울의 근대적 공간의 의미의 기원으로 받아들였다.¹⁾

2. 조선왕조의 왕도(王都) 한성(漢城)

한성²⁾은 주자성리학의 정치 사상적 이념과 풍수지리(風水地理)라는 땅과 공간에 대한 사유구조에 바탕을 두고 계획적으로 조성된 도시이다.

1) 공간과 집단기억 그리고 역사적 경험의 문제.

2) 조선왕조 이전 서울 공간의 역사는 깊고도 오래된다. 한강을 끼고 선사시대부터 선사인의 삶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특히 1978년 경기도 연천 전곡리 유적에서 발견된 아슐리안 주먹도끼는 당시 세계 고고학계의 통설-악명 높은 미국 하버드 대학 모비우스의 ‘구석기문화 이론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첫 발견이었다. 암사동에 신석기 주거 유적이 발견되었고, 청동기 유적은 서울 강남·강북 일대에서 대거 존재한다. 역사시대에는 무엇보다 한성백제의 심장이며, 한성백제 시기는 백제 역사의 2/3를 차지한다. 고려 중기부터 남경으로 승격되어 개경·서경과 함께 3경의 하나였으며, 고려 말에는 기운이 쇠한 개성을 대신하는 도시로서 부상되기도 했다.

한성은 백두의 기운[백두산-백두대간-한북정맥-삼각산³⁾(북한산)]을 직접 받고 있으며, 한강이 흐르고 내사산(內四山)과 외사산(外四山)으로 둘러싸여 있다. 외사산은 관악산(南)·아차산(東)·덕양산(西)·삼각산(北)이고, 내사산은 목멱산(南)·낙산(東)·인왕산(西)·백악(北)이다.

《〈동국여지승람〉》에서는 한성의 지세를 “동방의 제일이요 천하의 요해지(要害地)”라 했다. 내사산을 연결한 한성의 도성(山城)은 외부로부터의 방어기능뿐 아니라 풍수길지성(風水吉地性)을 비보하면서 내외(內外)를 구분하는 이념적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⁴⁾

한성은 본질적으로 왕을 위한 공간이며, 따라서 도성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은 궁궐이다. 조선의 궁궐은 양궐 체제(法宮과 離宮)로 운영되었는데, 임난을 전후하여 다소 변화를 보였다.

- ㉠ 태조-임난 전까지는 경복궁(=北闕)이 법궁이고, 창덕궁·창경궁(=東闕)이 이궁.
- ㉡ 임난후(광해군)-고종대 경복궁 중건 전까지 창덕궁·창경궁이 법궁이고, 경희궁(=西闕)이 이궁.
- ㉢ 고종대 경복궁 중건-아관파천(1896) 직전까지 경복궁이 법궁이고, 창덕궁 창경궁이 이궁.
- ㉣ 경운궁 환궁 후 대한제국 선포(1897)-1907년 고종황제 강제퇴위까지 경운궁이 황제 궁.

한성 도성 안은 청계천(=開川)⁵⁾을 경계로 남촌과 북촌으로 이분(二分)되었고, 유교적 조영논리에 따라 주요 건물이 배치되었다.⁶⁾ 북촌에는 궁궐과 여러 국가 기관들이 배치되었고, 집권 양반관료들의 거주지이기도 했다. 그런 면에서 북촌은 중세정치 원리인 군신공치(君臣共治)의 공간이었다. 그에 비해 남촌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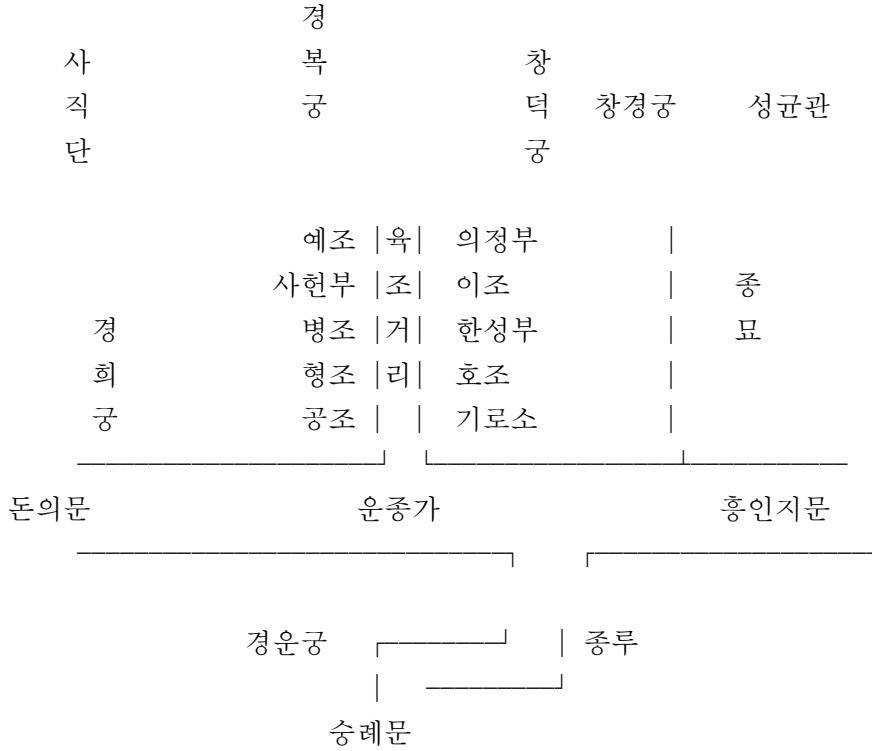
3) 삼각산(三角山)【도성 밖 정북(正北)에 있으니, 일명(一名)은 화산(華山)이다. 신라 때에는 부아악(負兒岳)이라 일컬었다.】도성(都城)의 진산(鎭山)은 백악(白岳)이다.【산정(山頂)에 사당(祠宇)이 있어서 삼각산의 신을 제사 지내는데, 백악을 붙여서 지낸다. 중사(中祀)로 한다.】(《세종실록》지리지 148)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삼각산은 인수 백운·만경의 세 봉우리가 우뚝 솟아 세 개의 뿔과 같이 생겨 붙여진 이름이며, 화산(華山)·화악(華嶽)이라고도 함.

4) 내외(內外)의 구분이나 음양(陰陽) 사상은 조선시대 공간구획이나 건축물의 조영(造營) 구조에 스며있는 기본 정신이다.

5) 백악과 남산에서 흘러내린 여러 개천 물이 청계천으로 합류하여 도성 밖 한강으로 흘러 들어갔다.

6) 유교의 조영 원리는 주례(周禮)의 고공기(考工記)에 설명되어 있다. 한성의 공간배치는 중국 당(唐)나라 수도 장안처럼 북쪽에 정궁(正宮=법궁)을 두고 남쪽에 관청·도로·시전(市廛)을 배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중앙에 법궁을 두는 북경형(北京型)과 좋은 대조를 이룸) 정궁을 북쪽에 배치하는 것은 북쪽을 중시하는 북극성 사상과 일정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북극성 사상의 기원은 적어도 청동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궁궐과 종묘사직 시가의 배치



한성 도성의 구조

肅靖門 [백악](冬 北 玄武 黑 後)

彰義門(紫霞門)

惠化門

普信閣

敦義門 [인왕산]
(秋 西 白虎 白 右)

雲從街(鐘路)

興仁之門 [낙산]
(春 東 靑龍 靑 左)

昭義門

光熙門

崇禮門 [목멱산](夏 南 朱雀 朱 前)

3. 조선후기 한성의 근대적 양상

- 17세기 국가재조기(國家再造期) 이후 한성의 인구는 급증하여 약 20만 명에 달함.⁷⁾ 상업의 발전, 사회구조의 변동과 민(民)의 자의식 확대 -> 영조·정조대에 이르면 전통적인 주자성리학의 정치원리인 군신공치(君臣共治)를 넘어선 군민공치(君民共治)의 정치실현에 노력(‘실학’)⁸⁾

- 혜정교(惠政橋)와 팽아지법(烹阿之法)

1792년(정조 16년) 정조가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근래 지방을 맡은 신하들이 자신을 살찌우기만 일삼고 백성의 아픔을 돌보지 않으면서 오직 장계(狀啓)속의 말들만 잘 꾸며 그것으로 눈앞만 미봉하고 죄를 면하는 방법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진짜 청렴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것이다. 우선 도백들부터 팽아의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법을 어디에 쓸 것인가? 암행어사를 보내어 각도의 도신 중에 가장 청렴치 못한 도백을 붙잡아 오게 한 뒤 내가 혜정교에 직접 나왔아서 한성 백성들을 불러 모아 신문하여 자백을 받은 후 형을 적용함으로써 그 도의 백성들에게 엄격히 사죄할 것이다. 성안에 혜정교가 있는 것은 바로 백성을 위해 그런 일을 하기 위한 것인데 그리하여 다리 이름도 그러한 것이다”(《정조실록》)

4. 대한제국의 황도(皇都) 한성(漢城)

대한제국은 근대적 입헌군주제를 표방했으며, 개혁의 동력으로 민의 정치적 통합력(‘동포’=‘국민’의 탄생)을 이끌어내려고 했다. 막 출범한 근대입헌국가와 황제의 권위를 드높이기 위해 중세 왕도(王都) 한성을 서양도시의 구도나 시설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황도(皇都)로 만드는 근대적 도시개조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었다. 가로가 대대적으로 정비(대로의 복원, 광장과 방사선 도로의 신설)되고 여러 근대적 공간이 새롭게 조성되었다.⁹⁾(근대입헌 체제 => ‘근대 공간’의 탄생).

7) 원칙적으로 사람들은 도성 안에 거주해야 한다. 조선 전기 한성부 인구는 대략 10만 정도로 추정되는데, 돈의문과 흥인지문 밖에 거주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이 도성 안에 거주하였다. 그러나 17세기 임난과 호란이후 농촌 지방인구가 한성부로 대거 유입되자, 성저(城底) 10리(한강변이나 서대문 동대문밖)에 집중, 인구증가로 공간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였다.

8) 상언(上言)과 격쟁(擊箏) => 민의(民意)의 직접 수용

9) 영국 왕립지리학회와 비슷한 도시개조사업 전후 2차례의 한성 방문에서 놀라움을 극적으로 표현하였다.

1) 독립문과 독립관

조선시대 영은문(迎恩門)과 모화관(慕華館)에서 왕세자가 중국 사신을 맞이했다. 사대(事大)의 공간이다. 갑오정권 김홍집 내각이 영은문과 모화관을 철거하였다. 1896년 결성된 독립협회 세력이 모화관 자리에 독립관을, 영은문 기둥 앞에 독립문을 세워 조선이 ‘만국공법’의 서구근대체제 속에서 자주독립국임을 알렸다. 중세적 사대의 공간을 근대적 자주 공간으로 전환시켰다.¹⁰⁾

이는 ‘중세적 자의식(중국 중심의 소중화 의식)→근대적 자의식’의 창출과정이다. 영은문이 소중화주의로 무장한 주자학-조선을 상징하는 중세의 문이라면, 독립문은 서구근대-자본주의를 지향 학습하려는 근대의 문이다. 이후 120여 년 동안 이 땅의 사람들은 서구근대(자본주의 기독교)를 어렵게 모방 학습 내면화하려고 노력하여 왔다.

독립협회(Independence League)의 ‘독립’은 일제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다. 독립협회의 독립은 중국 중심의 중세적 세계질서(청=중국)에서 벗어난다는 것¹¹⁾, 일체 중세적인 것 유교적 주자학적인 가치(중국 중심의 중세 질서)로부터 벗어나 근대적 주체로 거듭나는 것<근대적 계몽(중세인간/사회)→근대인간/사회>의 시대

독립문은 쌍방향 계몽의 구도(한자와 한글-독립신문과 주시경)/러시아공사관 입구의 문/1979년 금화터널과 사직터널을 연결하는 고가도로가 건설되면서 원래 위치에서 이동.

2) 환구단=원구단과 황궁우

고종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낸 곳으로, 원구단과 황궁우로 이루어져 있음. 현재는 원구단을 없애고 황궁우만 남아 있음. 1897년 10월 12일 원구단에서 고종은 천신에게 제사를 올린 후 황제로 즉위, 국호를 대한으로 고치고 자주독립국임을 선포, 자주독립을 향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곳이다.¹²⁾

천원지방(天圓地方)의 천문지리관에 의거하여 둥근 모양의 제단 건물(사직단은 정방형의 제단)¹³⁾

10) 1896년(건양 원년) 11월 28일 독립문 주조 기공식을 하고 1897년 11월 20일 완공. 개선문과 러시아공사관 입구의 문.

11) 개항 후 청의 대조선 정책은 전통적인 주종관계를 근대적인 속방관계(=식민지)로 전환시키려는 것. 리홍장과 원세개의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

12) 원단(圓壇) 천단(天壇)이라고도 함

13) 양철지봉-靜觀軒

원구단은 본시 임난 후 중국 사신을 맞이하는 영빈관 자리였으며, 영빈관=사대주의 모화 사상의 상징건물이 대한제국의 주체적 자의식을 드러내는 공간으로 전환. 고종 황제 즉위 40년이자 연세가 51세 되는 해(1902년)을 기념하기 위해 석고(石鼓)와 기념비각(교보빌딩 앞)을 세웠다.

=>> 환구단과 장충단은 근대적 입헌국가인 대한제국의 근대적 정치권위를 보장하는 공간

3) 장충단(종묘 -> 장충단/국립묘지로 이행)

장충단은 을미사변 당시 일본군 수비대와 맞서 싸우다가 순국한 훈련대 연대장 홍계훈 공내부 대신 이경식을 비롯한 충신열사 장병들의 영령을 기리기 위해 만든 근대적 입헌군 주국 대한제국의 국립묘지이다.¹⁴⁾ 초혼단 충렬사단이라고도 한다. 명성황후 사후 5년이 지난 1900년(광무 4) 9월 고종황제는 어영청 분영인 남소영 자리(지금의 신라호텔 영빈관 자리)에 단을 꾸며 그 때 죽어간 문무 열사 무명용사의 충절을 기리도록 했다.

장충단 비문에는 “고종황제가 나라를 다스리는 중에 갑오 을미 등의 사변을 만났을 때 군 인으로서 어려움을 당면하여 목숨을 잃은 사람이 많으니 슬프다. 그 서릿발 눈보라에도 늠름하고 충성과 의리를 길이 기려 제사를 지내라는 어명이 있어 단을 쌓고 비를 세워 표창하고 아울러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내노니 백세에 빛남에 보답함이로다. 그 사기, 군인들의 마음을 북돋을지니 그 아름다움은 크고도 장하도다”

장충단은 항일의 공간으로 당시 사람들에게 각인되었다. 1910년 경술국치 전후하여 애창된 <한양가>에는 “남산 밑에 지어진 장충단 저 집, 나라위해 몸 바친 신령 되시네, 태산 같은 의리에 목숨보기를 터럭같이 하도다. 장하다 그 분네들”이라고 노래 불렀다.

매년 봄 가을에 공내부주관으로 제사를 올렸고, 제사를 지낼 때 <<황성신문>>을 통해 그 날짜를 널리 알리고 관계 유족의 참여를 고지함. 장충단 제사는 일제의 주권침탈이 노골화 되던 1908년을 끝으로 중단되었으며, 1910년 8월 일제가 한국을 강점하면서 폐사되었다. 대한제국과 운명을 같이 했으며, 강점 후 일제는 장충단 파괴에 혈안이 되었다.¹⁵⁾

14) 종묘(유교왕조국가의 정치적 정통성을 드러내는 중세정치 공간)와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와 의미를 지니는 국가 사당, 대한제국의 국립묘지로서의 이념적 기능을 수행.

15) 해방 후 여러 종류의 국립묘지들이 존재 -> 국민/대중의 죽음을 반공/민족/애국/민주화의 이름 속에서 기림.

5. 공간의 식민화와 경성(京城) 그리고 서울

일상의 삶이 영위되는 사회적 공간은 그 시대의 정신과 삶의 의미, 심지어 미래 비전까지도 내포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 공간이 사람들의 삶을 지배, 규정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공간의 의미가 달라지면 그 속에서 생을 꾸려가는 사람들의 삶도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

일제 강점으로 한성은 비극적이게도 경성으로 변질 파괴되고 말았다. 일제의 한국지배의 목표는 한국을 영구히 식민지로 지배해가는 것이었다. 이에 처음부터 일제는 ‘조선(朝鮮)의 일본화(日本化)’ ‘조선인(朝鮮人)의 일본인화(日本人化)’라는 동화정책을 전면에 내걸고, 폭력적인 식민권력의 구축과 더불어 조선 질서를 일본 질서로 개조하려고 했다. 조선인의 일상적인 삶의 생활공간을 일본적 공간, 식민지배의 새로운 지배공간으로 변질, 개조시켜 가는 것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인을 일제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식민지 인간으로 만들려고 했으며 실제로 만들어 갔다.

그런 맥락에서 일제의 풍수침탈 전통적인 조선의 공간파괴는 오랫동안 내려온 조선인의 삶의 정신적 가치를 파괴하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먼저 한성의 무자비한 파괴와 식민도시 경성의 창출로 나타났다. 땅의 논리와 흐름이 사람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풍수지리의 사유방식에 비추어 볼 때, 땅의 논리와 흐름의 변질 파괴는 당연히 삶의 변질 파괴로 나타났다. 이로써 '식민지 근대'의 왜곡된 경성이 탄생되었고, 이 과정에서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고취하는 공간전도 현상이 나타났다.¹⁶⁾

1) 북촌의 파괴-정치적 중심의 해체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일제는 조선 왕조-대한제국의 정치적 정통성을 드러내는 한성 공간을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파괴하였다. 도성과 궁궐을 훼손함으로써 정치적 침략과 지배를 정당화 사실화시키는 공간의 식민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먼저 일제 통감부는 1907년 성벽처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남대문과 동대문의 좌우 성벽을 허물고, 그렇게 허문 돌을 인천 앞바다 매립공사에 사용하였

16) '한성'에서 '경성'으로 전락은 '철저한 단절과 새로운 이식'을 의미한다. 보통명사 경성은 조선왕조실록에도 간간히 사용되었지만, 일제가 한성을 대신하여 붙인 경성은 고유명사로서 식민지배의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경복궁 외조에 조선총독부건물이 완공되자, 《경성일보》에서는 '은둔의 왕국에서 문화의 대경성'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 은둔왕국이 19세기 중후반 서구 근대가 오리엔탈리즘적 관점에서 바라본 '주자학조선국가'의 표상이라면, 문화의 대경성은 그 위에 덧칠된 '일본적 오리엔탈리즘'(Japan's Orientalism)의 표상이다. 서구근대와 일본근대가 만들어낸 이중의 지배 표상이 이 땅에 깊게 각인되었다. 존재와 물(物)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가? 누가 그런 이름을 붙이는가? 이름을 통해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고 사회적 생명도 다르게 만들 수 있다. 존재는 이름을 통해 드러나고 이름은 존재의 본질을 반영한다.

다. 도성의 파괴는 조선 사람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당시 경북 안동의 어떤 양반은 한성 도성이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조선은 망했다’고 통곡했다고 한다.

성벽 파괴와 더불어 일제는 대한제국의 근대적 주권성을 파괴하기 위해 궁궐 파괴에 혈안이 되었다. 궁궐이 왕 황제의 지존성을 드러내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궁궐파괴는 조선인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감과 패배의식을 자아내게 하였다.

1909년 일제 통감부는 서궐(西闕)인 경희궁을 헐고 그 자리에 일본인이 다니는 경성중학교를 설립하였다. 경희궁 정문과 정전은 파괴의 화를 모면했는데, 정문은 박문사의 정문으로 사용되었으며, 정전인 승정전(崇政殿)은 현재 동국대학교 구내 절로 사용되고 있다. 창경궁과 창덕궁은 식물원 동물원으로 공원화 희화화되었고, 일본식으로 건물이 개조되거나 용도가 바뀐 건물도 적지 않다.

조선 왕조의 상징인 경복궁은 1915년 조선 물산공진회를 통해 왕과 왕비의 공간 및 일부 공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간을 파괴하여 전시장으로 사용하였다. 공진회가 끝난 그 다음해인 1916년 일제는 경복궁의 외조(外朝)를 뭉개고 그 자리에 일제 식민지 지배의 총본부인 조선총독부 건물을 세웠다. 그나마 남아있던 전각들은 1929년 조선박람회 때 모두 헐리고 근정전 수정전 경회루 등 극히 일부 건물만 화를 모면하였다. 1935년 지금의 청와대 자리에는 조선총독 관저를 구축하여 궁궐파괴의 절정을 이루었다. 이와 같은 일제의 경복궁 파괴 공작으로 고종 때 중건되었던 경복궁의 거의 95%가 사라졌다.

대한제국의 황제궁인 경운궁도 1930년대 벚꽃이 만발한 공원으로 개방되었다. 경운궁은 경복궁만큼이나 철저히 파괴되었는데, 그 참경(慘景)은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운 형국이다. 현재 경운궁은 1/4토막이 난 상태인데 1920년대 초반 황제의 공간인 돈덕전과 선원전을 허물고 그 자리에 길을 뚫었다. 경운궁은 이 길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두 동강 나고 말았으며, 지금은 서로 관계없는 것처럼 되어 있다. 이 돌담길을 거닐 때 마다 우리는 황제를 짓밟고 다녔던 것이다. 대한문도 일제에 의해 그리고 해방 후 우리 손에 의해 원래 자리에서 대략 16m 뒤로 물러나 있는 형국이다. 낭만적일 수 있는 이른바 ‘덕수궁 돌담길’은 일제가 침략을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 민족적 모욕과 수치로 자아내게 하는 통탄의 길이자 가짜 길이다. 그나마 축소된 채로 담장이 둘러져 있는 경운궁 경내의 파괴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다.

이처럼 일제의 궁궐 파괴와 희화화는 조선 왕조의 권위와 정통성을 철저히 부정하고 그 대신 새로운 식민지 조선의 정당성을 고취하려는 의도였다.

2) 남촌의 부상-지배의 새로운 중심

한성은 전통적으로 군신공치의 핵심인 공간인 북촌을 지배적 중심으로 삼았다. 풍수지리와 유교적 조영논리에 따라 북촌에는 궁궐을 비롯한 주요한 국가 기관이 배치되었고, 양반 관료들의 주택도 밀집해 있었다. 그에 비해 남촌은 정치적 신분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곳이었다. 도성 안에 사는 사람과 도성 바깥에 사는 사람 사이의 차별성 뿐 아니라 북촌 중심이라는 도성 안 공간적 차별성도 뚜렷하게 존재하였다.

그러나 일제 침략과 지배로 북촌의 중심성은 해체되고, 새로운 중심(일본인 거주지)으로서 남촌이 부상하고, 북촌을 제압하였다. 개항 이래 일본인들이 남산기슭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남산과 남촌은 조선 침략의 군사적 정치적 사상적 거점으로 기능하였다. 남산 기슭에 경성신사 내목신사 조선신궁이 차례로 조성되었고, 통감부-조선총독부 및 조선헌병대 사령부(지금의 남산 한옥마을), 박문사(博文寺-지금의 신라호텔 영빈관)가 자리를 잡았다.

이를 배경으로 경성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충무로 명동 을지로 일대에 새로운 지배거점을 만들어갔다. 경성의 새로운 중심으로 남촌이 대대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식민지 근대의 거점으로 부상하였다. 조선은행(지금의 한국은행)-경성우편국(지금의 중앙우체국)-미스코시 경성지점(현 신세계)의 삼각형 광장은 ‘경성의 월가’로 불릴 정도로 조선경제의 숨통을 장악했던 일본 자본과 경제 상권의 중심지였다.

당시 일본인 기자는 종로와 남촌 거리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혼마치는 경성 시가지의 한 모퉁이에 있지만 어찌 그리 활기가 충일하며 화기가 충만한가? 전후좌우의 집은 모두 이삼층으로 즐비하여 종로처럼 낮은 집이 없다. 폭주하는 물화, 형형색색의 사람이 있고 그 화려찬란함은 기자의 두 눈을 당황케 하더라. 반면 종로는 한복판에 위치하면서도 대체로 조선 구식의 가옥으로 큰 사람이 서면 천장이 닿을 정도이며 그 모습도 진부하고 조락되어 있다. 건물이 그러하니 물건도 오죽하겠는가 조선인이 만든 것은 모시 광목 등 이외에는 대부분 박래품이더라.¹⁷⁾

조선 왕조의 시전 종로상권의 지배력은 일제 강점으로 일본 자본의 본거지인 남촌의 명동과 남대문 상권에 넘겨주지 않을 수 없었고, 이후 오랫동안 ‘명동중심주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였다.

17) <<매일신보>> 1921년 2월 24일자.

3) 전도된 공간들

조선 왕조의 왕도(王都)이자 황도(皇都)였던 한성이 경성으로 전락함으로써 공간의 전도, 공간의미의 역전이 일어났다.

① 백악산-경복궁-광화문-6조거리-관악산 <=> 백악산-조선총독부관저-조선총독부-경성부청-남산(=조선신궁) [大日本の 구조]

한성은 백두의 기운(백두산-백두대간-한북정맥-삼각산-백악산)의 기운은 직접 받고 있으며, 백악을 배산(背山)으로 삼고 있는 경복궁은 백악-아미산-교태전-강령전-사정전-근정전-광화문으로 이어지는 지존의 공간 축을 형성하고 있다. 경복궁의 정문이자 조선의 얼굴인 광화문은 6조 거리-관악산을 멀리 바라보고 있다. 이것이 조선 왕조의 지배선이다. 일제는 1915년 조선 물산공진회를 경복궁에서 개최한 후, 1916년 경복궁 외조(홍례문과 금천 영역)를 허물고 그 자리에 조선총독부 건물을 세웠다. 조선총독부 건물은 의도적으로 이 조선의 지배축을 비틀어 들어섰다. 이 비틀림은 조선의 질서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그 대신 일제의 새로운 정치질서 식민지 지배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뒤틀어 들어선 조선총독부는 1926년 완공된 경성부청-남산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 즈음 남산에는 목척신사(=국사당) 대신 조선신궁이 들어서 있었다. 풍수지리상 백악산은 큰 대(字)자를 의미하는데, 조선총독부 건물이 날 일(日)자, 경성부청 건물이 근본 본(本)자의 모습으로 지어졌다. 즉 경복궁이 사라지고 ‘대일본’이 탄생한 것이다.

풍수지리상으로 보면, 조선총독부 건물은 근정전의 기운을 제압하고 있는데, 몸으로 비유하면 목이 짓눌리고 입이 비틀어진 형국이다.

조선총독부 건물이 들어설 때, 험할 위기를 겨우 모면한 광화문은 경복궁 동쪽 문인 건춘문 옆으로 옮겨졌다. 동쪽으로 철거된 광화문 왕조의 얼굴이 모욕당하고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다. 이후 광화문은 6.25 전쟁 당시 소실되어 홍예 석축만 남게 되었다. 1960년대 말 박정희 정부 때 현재 자리로 옮겨 졌는데, 본래의 축인 근정전의 축을 따르지 않고 비틀어져 있는 조선총독부 건물을 기준으로 삼았기에 광화문이 제자리가 아닌 비틀어진 상태로 놓이게 되었다. 복원된 광화문은 고종 당시 보다 약간 더 뚱뚱할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철근콘크리트로 지었다. 거기에 자랑스럽게 ‘광화문’이라는 한글 현판을 내걸었다.

② 국사당 <=> 조선신궁

조선 시대 목멱산(=남산)의 정상(지금의 팔각정 자리)에는 목멱신사(木覓神祠)=목멱사(木覓祠) [이른바 국사당(國師堂)]이 있었다. 1935년(태조 4) 12월에 목멱산의 산신(山神)을 목멱대왕으로 봉하고 목멱신사를 세워 봄 가을에 정기적으로 혹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제사를 올렸다. 가뭄이 들면 백악(백악사)와 한강(한남진 일대) 그리고 목멱산에서 기우제를 지냈고 국가 대사나 왕실에 우환이 있으면 목멱산에 가서 빌기도 했다. 1925년 일제가 조선신궁을 세우면서 목멱사를 인왕산 선바위에 강제로 철거시켰다. 목멱사가 조선 왕조의 국태안민을 기원하는 곳이라면, 목멱사를 없애고 그 자리에 조선신궁(남산식물원 자리)을 세웠다는 것은 일제의 조선 지배를 영구히 하겠다는 노골적 표현인 것이다.

③ 장충단 <=> 박문사=장충단공원

강점 후 일제는 장충단의 역사적 의미를 철저하게 파괴하였다. 일본 색으로 칠하고 공원 놀이동산으로 만들어 그 본래의 의미를 탈각시켰다. 1920년대 일제가 이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벚꽃 수천그루를 심고 연못 놀이터 산책로 등의 제 시설을 설치하여 이른바 '장충단 공원'으로 변질시켰다. 그리고 장충단 앞 일대는 유곽촌(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안에 놀이동산을 만들고 그 앞에 매춘굴을 조성하면?)을, 1932년에는 장충단을 허물고 그 자리에 조선 강점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기리는 일본절 박문사(博文寺)를 지었다. 이로써 항일의 공간은 왜색이 짙은 한국 강점을 자축하는 공간으로 변하고 말았다.

④ 남별궁 <=> 환구단(원구단+황궁우) <=> 조선총독부철도호텔 경성부청 반도호텔

대한제국은 근대적 입헌군주국가로서 고종이 천자로서 황제에 취임하였다. 종묘가 중세 군주제의 정치적 정당성을 보증하는 공간이라면, 대안문(대한문)을 바로 보고 있는 환구단은 근대적 입헌군주의 정치적 정통성을 보증해주는 정치적으로 신성한 공간이다. 환구단이 들어선 곳은 원래 남별궁 영빈관자리였다. 중국사신이 유숙하는 사대의 공간인 썸이다. 그 사대의 공간을 허물고 천자로서 하늘에 예를 올리는 신성한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사대의 공간에서 자주 독립의 공간으로 공간의미의 전환인 썸이다.

그런데 일제는 강점과 동시에 대한제국의 정통성을 드러내는 공간을 가장 우선적으로 파괴하였다. 장충단과 함께 환구단이 무참하게 파괴되고 의미가 변질되어 버린다. 1912년 일제는 천자가 하늘에 제사를 올렸던 원구단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조선총독부 철도호텔을 만들었다. 황궁우는 마치 철도호텔에 딸린 후원 정도로 간주되었다. 정치적으로 가장 신

성한 공간에 오고가는 여행객이 쉬어가는 여각으로 변한 것이다. 민족적 모욕은 말할 수 없다. 그나마 남아있는 황궁우마저 일제 지배건물에 둘러싸여 위축되지 않을 수 없었다. 제국주의자의 거대한 힘과 멸망한 옛 왕조, 식민지인의 굴종이 극명하게 대비된다. 1926년 경성부청과 1937년 반도호텔이 들어서면 황궁우는 꿈쩍달싹할 수 없게 되었다. 대한제국의 자주독립의 공간이 일제에 의해 식민지배의 공간으로 전화되었다.

⑤ 영은문 <=> 독립문 <=> 서대문형무소

조선시대 영은문과 모화관에서 왕세자가 중국사신을 맞이했다. 사대의 공간인 썸이다. 갑오정권 김홍집 내각이 영은문과 모화관을 철거하였다. 1896년 결성된 독립협회 세력이 모화관 자리에 독립관을 영은문 기둥 앞에 독립문을 세워 조선이 만국공법의 근대체제 속에서 자주독립국임을 알렸다. 독립이란 중국 중심의 중세적 세계질서에 벗어난다는 의미인 것이다. 사대의 공간을 자주의 공간으로 전환시켰다.

1908~09년 일제 침략에 반대하는 의병들이 13도창의군을 조직하여 대대적 항일전을 치루고 있었다. 강력한 무력으로 의병을 제압한 일제는 수많은 의병을 공개 처형하거나 감옥에 수감하였다. 이때 세워진 것이 독립문 뒤 경성감옥(영천감옥 서대문형무소)이다. 조선 사람들에게 독립문 보면서 독립 생각하면 가는 곳은 독립문 뒤 감옥이라는 공간적 연상을 일으키게 했다. 사대의 공간 -> 자주독립의 공간 -> 식민지배의 공간으로 변질되었다.

• 일제의 지배건물과 조선의 건물

- > 철골 콘크리트골조 화강암 유리 VS 흙 나무 짚의 대립 구조, 문명과 야만의 대립구조. 지배와 예속의 구조,
- > 일본식 서양의 고풍스런 건물외형-마치 오래 전부터 있던 것으로 착각 착시현상을 일으킴, 견고한 철근콘크리트 화강암=일제=식민지 근대의 우월성 강한 힘을 과시->조선인에게 패배의식과 위압감을 내면화

- 민족 분단은 서울과 평양이라는 완전히 상반되는 두 개의 현대도시를 만들어 냈다. 서울이 이윤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1,000만 인구의 자본주의 초거대 경제도시라면, 평양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본질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극한적 정치도시이다. 비극적인 6·25전쟁의 폐허 속에서 서울은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 평양은 인민민주주의-사회주의라는 서로 상이한 사회체제 지배원리에 입각하여 급속한 재건과 건설과정

을 밟아갔다. 1950년대 제한적인 복구기를 거쳐 서울과 평양은 1960년대 본격적인 개발과 발전 과정을 걸어갔다. 현대도시 서울과 평양은 1960-70년대 남북한 개발성장기를 주도했던 최고 권력자 박정희와 김일성의 정치경제적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건설 개발계획과 실행에 두 사람의 권력적 의지가 절대적으로 작용하였다. 남북한 체제경쟁이 본격화된 즈음에는 서울과 평양, 도시 그 자체가 체제경쟁의 무대로 기능했다. 서울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장이라면, 평양은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공간이었다. 박정희와 김일성은 상대를 완전히 압도하기 위해 서울과 평양의 개발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¹⁸⁾

18) 1950년대 이후 서울 공간의 현대화 과정은 주어진 시간 관계상 생략.

17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조일간 '통신사 외교'

• 이 훈 (한림대) •

17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조일간 ‘통신사 외교’

이 훈 (한림대)

1. 17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조선

▶ 후금과 명 사이에서

- 후금; 정묘호란과 형제지맹(교린관계)
경제적 압박(예폐, 세폐, 개시 등)→ 춘신·추신사 외교(교린문서)
1636년 후금의 교린관계 현상 변경 시도와 병자호란
용골대 등의 국서 퇴각
‘칭황제’, 연호(崇德) 사용, 국호(淸) 변경
- 명: 모문룡의 楸島
후금에 대한 공동 대응 요구

▶ 인조대의 국제관계와 국정운영

- 후금과의 긴장 고조와 군사안보 비용 증가
- 명으로부터 후금 공격에 필요한 무기 구입 요구
- 증세와 세제 개혁

▶ 1636년 통신사의 일본 파견과 교린우호

- 도쿠가와(德川) 막부와 우호 유지와 재정 절감
- 추가 군사안보 비용 無 + 예물 비용 정도, 10년만
- 국서개작사건과 이테양 윤번승제(以厶庵 輪番僧) 실시
‘조선→대마도주 소(宗)씨→도쿠가와 막부’ 루트 유지
- 명분(‘회답겸쇄환사’ 파견) 추구보다는 실리 외교 선택

2. 조일간 '통신사 외교'란?

▶ 통신사에 대한 인식

한국 : 문화사절

일본 : 조공사적 인식(일부)

조선 → 일본파견

도쿠가와 '쇼군'(將軍) 습직 축하

▶ 통신사외교란!

- 조일 양국 외교대표가 의견교환을 위해 國書 왕복

- 국왕사절단(정치사절)의 파견과 역할

- 국서를 도쿠가와 막부 '쇼군'(將軍)에게 직접 전달 및
回答書도 직접 받아가지고 옴

▶ 국서의 형태와 전달

(대중국 事大문서와 비교)

3. '왕복문서'로서의 국서

▶ 국서(國書)란!

동아시아 국제관계, 교린국(대등), 서계(書契) 양식

▶ 임진왜란 이후 국교회복기에 통신사가 지참한 국서

〈A-1〉朝鮮國王(宣祖) 國書(1607년, 제1차「回答兼刷還使」)

- ① 朝鮮國王 李昭 奉復
- ② 日本國王 殿下
- ③ 交隣有道,自古而然二百年來海波不揚,何莫非天朝之賜,而弊邦亦何負於貴國也哉,壬辰之變無故動兵,構禍極慘-----盛亮.
- ④ 萬曆三十五年正月日
- ⑤ 朝鮮國王 李昭 +
- ⑥ 印鑑

- ① 差出人(發給人) 奉復
- ② 受取人
- ③ 本文
- ④ 年紀
- ⑤ 差出人+⑥印鑑(爲政以德)

〈B-1〉도쿠가와 '쇼군'(秀忠)回答書(1607년)

- ① 日本國 源秀忠 拜復
- ② 朝鮮國王 殿下
- ③ 玉章落手,拜披薰讀,卷舒罔措,不勝歡悰,矧又呂祐吉·慶暹·丁好寬三使,不遠千里海陸,到弊邦而傳靈區之異產---不宣.
- ④ 龍集丁未夏五月 日
- ⑤ 日本國 源秀忠 +
- ⑥ 印鑑

- ▶ 발신자와 수신자 표기 → 平行
발신자와 수신자가 直接 교환하는 往復문서

- ▶ ‘日本國王’ 호칭, 對馬藩의 僞書
 - 1635년, 국서개작사건 (‘야나가와 잇켄’, 柳川一件)
 - 僞作的 대상 :
 - 국교회복기(1607 · 1617 · 1624년「回答兼刷還使」)의 양국 국서

4. 1636년 이후의 국서

- ▶ ‘국서개작사건’(柳川一件) 이후
 - ‘쇼군’의 외교칭호, ‘日本國大君’으로 변경
 - 1636년 통신사(寬永信使)의 국서부터 ‘大君’ 기재

- ▶ 〈A-2〉 朝鮮國王 國書(1655년 통신사)

- ① 朝鮮國王 李滉 奉書
- ② 日本國大君 殿下
- ③ 嚮聞, 殿下新纘令緒, 奠安海宇, 克綿洪祚, 其在交好, 寔切欣幸, 茲遣使臣, 顙備賀儀, 此實兩國同慶之義也, 土宜---不宣.
- ④ 乙未年四月 日
- ⑤ 朝鮮國王 李滉 +
- ⑥ 印鑑

- ▶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있어서 교린(交隣)문서의 특징
 - 朝鮮國王과 德川幕府 將軍이 서로를 대등한 외교상대로 여겨
 - 直接, 文書往復하는 시스템

5. 대중국 사대문서와의 비교

〈가-1〉 朝鮮國王(孝宗)→ 中國(淸)皇帝에게 보내는 奏文(1654년)

- (A) 朝鮮國王〈臣〉李〈諱〉謹奏, 爲 恭承聖旨惶恐罔措略陳情因冀蒙矜恕(a) 事
(B) 本年七月十五日「臣」欽奉勅諭
(中略)
「臣」欽此欽遵, 奉讀未終, 毛髮先竦, 驚惶踧足+昔, 無地自容,
恭惟太宗皇帝, 德優包荒, 恩深斷絕-----爲此謹具奏聞, 右謹奏聞, 伏侯聖旨.
(C) 順治十一年九月二十日 朝鮮國王〈臣〉李〈諱〉

▶ 發信者: 朝鮮國王〈臣〉李〈諱〉 受信者: 記載 없음

→ 「朝鮮國王李〈諱〉」가 中國皇帝의 〈臣下〉의 입장에서 話者가 되어 報告(上達)하는 문서형식

→ 명분상, ‘臣子關係’를 바탕으로 하는 對中國 事大關係에서 外交는 존재하지 않는다

6. 국서의 전달

▶ 國書 전달 자체를 위한 外交儀禮 있음

→ 쇼군이 있는 에도쵸(江戶城) 안에서 ‘伝命儀’ 通信使가 쇼군을 對面하여 直接 전달

▶ 儀禮 장소(宴享 등)~에도(江戶) 체류중

通信使와 幕府側과의 접촉~의사소통 기회가 있음

例) 將軍 답서의 文言 修正.

被虜人 刷還

日光山 遊覽(1636)

7. 대중국 사대문서와의 비교

〈가-2〉 中國 禮部 앞으로 작성된 咨文

- (A) 朝鮮國王, 爲 恭承聖旨惶恐罔措略陳情因冀蒙矜恕(a)事
- (B) 云云(---見上原奏)爲此另具奏文, 專差等(使臣의 姓名), 前赴京師進另外, 合行移咨前去,
- (C) 煩乞貴部轉奏天聰施行, 須至咨者, --- 右咨禮部.
- (D) 順治十一年九月二十日

(『同文彙考』原編, 41卷, 飭諭「陳誤請收用奏」에 관련된「右奏進呈咨」)

- ▶ 朝鮮國王의 <奏文>과 별도로 中國 禮部 앞으로 보내는 <咨文> 필요.
 - 중국 예부, 국내 보고양식 절차(行移)에 따라 再作成
 - 이 경우, 朝鮮國王의 <奏文>은 添付文書 역할
 - 중국황제의 답서는 <勅諭> 형태(下達)

- ▶ 朝鮮國王의 <奏文>을 中國皇帝에게 전달하기 위한
 - 외교의례, 없음
 - 외교사절 역할, 없음
 - 의례 불참 사례도 있음

8. 通信使 外交란 !

- 근대 이전 동아시아 국제관계, 대등한 입장에서 조일간 정상외교
- 의사전달 측면, 전달력(효율)이 좋은 직접통교 루트
- 조일간 외교에 있어서 대마번 통제 효과(외교참사 방지)

근현대 중국의 변경인식과 동아시아

• 박장배 (동북아역사재단) •

근현대 중국의 변경인식과 동아시아

박장배 (동북아역사재단)

1. 머리말

- 최근 동아시아에서 역사갈등이 이렇게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상의 배경에는 동아시아의 부상, 그중에서도 중국의 급부상과 일본의 중국 견제 등이 복합적으로 깔려 있다. 한마디로 중국의 부상이 역사갈등의 배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해 기존의 관계가 달라짐
- 역사인식에서 현재가 화려하면 과거도 덩달아 화려해지는 경향이 농후하다.(그 역은 완전히 거짓) 그 반대의 서사, 즉 현재가 초라해도 과거가 화려하거나 과거를 실제보다 화려하게 꾸미는 것은 우스꽝스럽게 간주되기 십상이다. 예컨대 중국의 경우 전통적인 역사 인식만으로도 역사가 충분히 화려한데, 현재의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과 ‘중화민족 다원일체론’과 같은 현재적 관점에 따라, 전통시대에 농경세력과 유목세력의 각축과 융합이라는 이중성을 드러내기보다는 ‘중화민족’의 역사 속에 한족 이외의 소수민족의 역사를 무리하게 통합함으로써 과거를 민족융합의 역사라는 측면으로 과도한 일반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여기서 주목해야 봐야 할 것은 중국의 현대역사학의 형성과 변용에 전통시대의 유산과 서구에서 직접 수용한 시각과 방법 뿐만 아니라 일본의 근대역사학의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이다. 시라토리 쿠라키치(白鳥 庫吉)(1865-1942) 등은 일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사를 재구성한 ‘동양사’ 개념을 만들어냈다. 일본의 사학자들은 일본민족의 우수성과 우월성을 강조하고 여타 민족을 타자화하고 열등하게 배치하는 일본중심사관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사관은 아시아주의에 기반을 둔 ‘동양평화’ 명분을 내세우고 한국, 만주 등에 대한 역사적 연고권을 견강부회하여 일본의 팽창을 합리화하였다. 이에 반발하는 한국과 중국의 지식인들은 자민족 중심주의적 역사기술로 대응하였다.

- 중국의 근현대 역사학은 일본의 제국주의 역사관에 한편으로 저항하고 한편으로 수용하였다. 중국 근대역사학의 출발점을 이루는 량치차오(梁啓超)는 일본 학계의 일본사와 동양사의 서술 체계를 모방하여 청 제국의 존재를 전제로 한 중국사를 만들어갔다. 구제강(顧頡剛)과 푸쓰넨(傅斯年) 등은 일본인들의 만선사관(만한분리론)과 만몽사관 등에 대응하여 중국 주변의 이민족의 역사를 중국사에 적극적으로 통합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1931년 만주사변과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일본제국주의 세력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거대한 하나의 ‘중화민족’이 강조되었다. 국민당측이 소수민족들의 동화를 강조한다는 점과 공산당측이 소수민족의 민족자결과 연방제 논리를 강조했다는 점에 차이가 있었지만, ‘중화민족’에 대한 강조는 공통적인 것이었다.

-구제강 : “중화민족은 하나다!” 일본민족의 자리에 중화민족

- 중국의 역사서술 논리는 ‘통일적 다민족국가(다민족 통일 국가)론’이다. 그것은 현재 중국에 존재하는 한족과 55개 소수민족이 통일된 다민족국가를 구성한다는 ‘대국’ 논리다. ‘통일적 다민족국가’라는 용어는 1954년에 중국 헌법에 규정된 이후 정치적 법적 개념에서 역사적 학술적 용어로 확장되었다. 특히 1988년 중국의 유명 사회학자 페이샤오통(費孝通)은 ‘중화민족 다원일체 구조’론을 제시함으로써 중화민족론을 사실상 완성하였다.

-역사서술의 논리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음. 대만학자 두정승 : ‘동심원 이론’

- 중국은 1978년 말 개혁개방 정책의 추진을 결정하고 동시에 변경문제와 민족문제에 대한 연구를 대폭 강화하였다. 1983년 중국사회과학원 산하에 변경사지(邊疆史地)연구중심을 설치하고 변경지역의 역사와 지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1990년대 장쩌민 주석 시절에는 ‘애국주의’ 교육이 대폭 강화되고 중국중심적 역사서술이 부쩍 강화되었다. 1994년 착공한 댜샤댐 건설공사, 1999년 시작한 ‘서부대개발 전략’ 추진, 2003년 공식 입안된 ‘동북진흥전략’ 등 대규모 건설공사 개발정책과 함께 학술분야에도 대규모 ‘공정’들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1996년 5월부터 시작하여 2000년 9월까지 ‘하상주(夏商周) 단대공정(斷代工程)’을 필두로 하여 ‘중화문명 탐원공정’(2003년 개시), 동북공정(2002-2007), 청사공정(國家清史纂修工程, 2002-) 등 굵직한 연구프로젝트들이 추진되었다.
 - 중국 변강의 역사갈등을 이해하는 창구의 하나는 이들 중국의 대규모 연구사업들을 분석해 보는 것이다. 이들 연구사업들은 소수민족 통합 문제와 관련이 있음
- 긴 시야에서 보면 동시에 대외전략의 정지작업으로 평가될 수 있음

2. 중국의 변경지역 연구 현황

‘도식적 사고’를 극구 피해야 함_ 서북공정? 도식적 사고가 실제 분석을 대체하는 것을 방지해서는 안 됨

- 중국은 현재 14개 국가와 육지 국경을 맞대고 있고, 6개 국가와 해양경계를 나누고 있다. 또한 중국의 55개 소수민족은 대부분 중국에서 ‘변강’이라고 일컫는 변경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 발전전략과 미래 구상에서 변강과 민족문제는 소홀히 할 수 없는 핵심적인 문제다. 중국 학계에서는 변경 문제에 대한 국책 연구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변강학’이라는 학문 분야를 설정하여 그것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 2002년 ‘동북공정’의 개시 이래 중국에서 추진된 중국 변강연구학계의 중대 연구 프로젝트는 5개로 ‘동북공정’과 ‘신장항목’, 서남변강항목, 시짱항목, 북강항목 등이다. 동북공정은 중국 동북지역을, 신장항목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을, 서남변강항목은 윈난과 구이저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서남지역을, 시짱항목은 티베트를, 북강항목은 내몽골을 중심으로 한 북부 변경지역을 다룬다.
 - 5개의 중대 변강 연구사업은 약간의 시차를 두고 추진되었다. 2004년 무렵부터 양두 체제로 진행되었던 변강 연구사업은 2008년 이후 서남, 티베트, 북부변강까지 확대되었다. 이들 변경(육지변경) 연구사업군은 변강 소수민족 지구를 안정시키고 국경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학술적 만리장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변강=변경지역+주권+강역

번호	약칭	사업기간	사업비	출판
1	동북공정	2002-07	매년 300만 위안	* 자료집 출간 * 〈중국변강연구문고〉 출판 등
2	신장항목	2004-09	매년 600만 위안	
3	서남변강항목	2008-12	매년 400만 위안	
4	시짱항목	2009-13	매년 400만 위안	
5	북강항목	2010-14	유사한 규모로 추정	
(6)	(남해변강연구항목)	(2008 계획수립)	(규모 확대 예상)	

- 중국의 변강 연구사업들은 국가 차원의 5개년 계획으로 편성되어 추진되었으나 이 반드시 일사분란하게 추진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10차 5개년 계획 기간(2001~2005년)에 시작되었고 한국사와 관련이 깊은 ‘동북공정’ 체계는 이후의 대형 변강 연구사업의 모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동북공정에서 설정한 5대 항목의 사업분류는 기초연구류, 당안문헌류, 번역류,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보급용 서적 집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체로 이런 사업체계는 신장항목 등에 계승된다. 이들 동북공정과 신장항목은 중국 학계의 대표적 논리인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을 보강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중국 ‘변강학’ 체계 구축의 모체이자 실험실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최종 목표는 일반인의 인식 확장

- 중국에서는 연구와 함께 출판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대형 변강 역사지리 연구총서인 ‘중국변강연구문고’는 2012년부터 헤이룽장교육출판사에서 출간되기 시작하였다. 각각 50권씩인 초편과 2편은 초편이 ‘중국변강연구문고 초편-근대 희귀 변강 명저 점교와 해제’, 2편이 ‘중국변강연구문고’으로 구성되었다. 초편과 2편은 각각 동북변강권, 북부변강권, 서북변강권, 서남변강권, 해상강역[海疆]권, 종합권 등 6권으로 편성되었다.
- 중국의 대형 변강연구사업들은 중국의 백년대계, 동아시아 및 유라시아 전략, 나아가 세계전략과 무관할 수 없다. 흔히 언급되는 중국의 비전은 중국공산당 창립 100주년인 2021년까지 중국 부상 기반 구축을 완료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00주년인 2049년까지 명실상부한 세계국가로서의 위상을 정립한다는 것이다.
- 중국의 변강 연구사업들은 여전히 중국 내부적 정리에 초점이 있다는 인상을 주는데, 이 책의 연구 범위에는 속하지 않지만 ‘해상 강역’과 관련한 연구사업들은 중국 판도를 넘어 영향권을 분석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최근 맹렬히 언급되는 ‘일대일로(一帶一路)’는 중국의 본격적인 유라시아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티베트, 신장위구르를 둘러싼 변경인식

1) 티베트에 대한 역사 인식

- 13억 중국 인구 중에서 티베트인의 인구는 600백만 정도지만, 티베트인이 터잡고 살아온 넓은 티베트 고원만큼이나 티베트 민족문제의 비중은 크다. 당연히 티베트 민족

문제는 대외적인 측면과 대내적인 측면을 모두 갖고 있다.

- 대내적으로 티베트인들은 19세기 후반 티베트 불교문명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티베트 고원의 불교국가’라는 정체성과 프레임을 바탕으로 20세기에 적응하고자 했다. 티베트 고원의 불교국가라는 정체성은 종교적 측면과 함께 지리적 측면을 갖고 있다. 티베트 고대민족의 형성에는 7세기초에 수립되어 9세기 중반에 해체된 토번 제국의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그 경험은 티베트인들의 지리적 정체성의 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리고 11~12세기에 일어난 티베트 사회의 불교화는 티베트인들의 정신적 정체성 형성에 핵심적인 의미를 가진다. 티베트인들은 이후 자신들의 국가를 티베트 고원의 불교국가로 유지하고자 하는 강한 지향을 보였다.
- 대외적으로 티베트는 토번 제국의 해체 이래 대체로 주변 강국의 군사적 보호 속에서 연명한 역사를 경험했다. 그러나 티베트가 단순한 점령지였던 것은 아니다. 몽골제국이나 청 제국에 복속되었을 때 티베트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제국 체제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상당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시기에 실시된 민족구역 자치제는 명칭상 전통시대의 기미주, 토사 등과 유사한 어감을 띠지만 실제로는 중국 내지의 성과 현과 큰 차이를 갖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19세기말 20세기초에 티베트가 20세기 국가를 만들려고 했을 때 그 지도자였던 13대 달라이 라마는 교단의 이익을 국익보다 중요하게 인식하는 티베트인들의 인식과 당대 이래, 특히 원대 이래 중원과 내륙아시아를 차지한 강국들에 의존해온 역사적 유산의 힘을 절감해야 했다. 13대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 고원을 통치하는 ‘큰 티베트 독립국’을 완성하고자 했으나, 이러한 꿈은 부분적인 성공으로 끝났다. 티베트 사회는 현대적 개혁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전통세력의 지지 위에 있는 달라이 라마도 적극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기는 힘들었다. 티베트에 큰 이해관계를 가진 영국은 일부 티베트 독립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중화민국의 형식적인 종주권을 인정하면서 티베트를 완충국으로 유지하고자 했다.
- 량치차오와 쑨원과 같은 중국의 지도자들은 19세기말 이래 ‘하나의 중국’ 개념을 고안하여 티베트를 ‘하나의 중국’의 일부, 즉 중화민족의 일원, 통일국가의 일원으로 명실상부하게 편입시키고자 시도했다. 이러한 ‘하나의 중국’ 개념은 중화인민공화국 시기에는 ‘통일적 다민족국가’라는 하나의 국가, 중화민족이라는 하나의 민족으로 설정되어 ‘민족구역자치’ 정책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현재 중국측은 ‘민족구역자치’ 제도를

“유일하게 정확한 선택”으로 인식하고 있다. ‘성’ 제도와 민족구역자치와 고도자치와 분리독립 등 다양한 정책적 해법이 제시된 것은 민족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티베트의 역사를 중국 역사의 일부로 인식하는 경우라도 티베트 역사와 문화가 뚜렷한 개성과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민족구역자치’ 제도가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과 함께 미국의 티베트 정책도 티베트 민족문제의 국제화를 야기한 주요 요인이다. 특히 1980년대 이래 미국의 인권정책은 그 국제화에 큰 역할을 했다. 이처럼 티베트 민족문제는 국제정치에 의해 굴절되는 측면이 크다. 이런 조건 속에서 티베트인들은 비폭력 노선 등 자신들의 처지와 세계관에 맞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왔다. 2008년 3월의 티베트 시위는 티베트 민족문제의 이런 단면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

2) 신장위구르를 둘러싼 역사갈등

- 판즈핑(潘志平)과 왕밍예(王鳴野), 스옌(石巖) 등은 『‘동돌(東突)’의 역사와 현황』(민족출판사, 2008)에서 동투르키스탄 독립과 위구리스탄 해방 주장을 혹독하게 비판함
- 20세기 초에 범투르크주의와 범이슬람주의의 영향(쌍범)을 받아 ‘동돌’분자들이 ‘위구리스탄 역사’를 다시 ‘발견’하는 과정에서 민족 분열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
- ‘투르키스탄(투르크인의 땅)’이라는 명칭은 19세기에 들어와 영국과 러시아가 중앙아시아를 놓고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각축을 벌이는 과정에서 널리 사용됨
- ‘신강(新疆)’은 원래 ‘서역’이라 칭해지던 곳. 18세기 중엽 청군이 준가르부와 대소 호자 반란을 평정할 때 청조의 관방 문서에 ‘신강’ 개념이 출현. 건륭 24년(1759)에 ‘신강’ 개념을 공식적으로 사용. 광서 10년(1884) ‘신강성’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신강이 널리 통용됨.
- 신장위구르자치구는 1955년 10월 1일 성립됨
- 청의 신장 정복 과정에 대해서는 국적에 따라 극명한 관점의 차이를 보인다. 중국학계에서는 그 과정을 ‘통일 과정’으로 파악한다. 반면에 중국 이외의 학계에서는 많은 역사가들이 ‘정복과정’으로 파악한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레오니도비치 티흐빈스키(Сергей Леонидович Тихвинский)는 ‘예로부터 신장은 중국 영토였다’는 중국학계의 주장에 대해 한대의 지배가 짧고 한정적이었고 그 지배도 700년 동안 단절되었으며 청조

는 독립된 준가르국에 대해 피의 정복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중국 변경의 여러 소수민족이 중화민족의 구성부분이라는 점을 부인하고 만주족, 몽골족, 티베트족, 신장의 여러 민족을 비중국민족이라고 하였다. 17~18세기 아시아 최대의 침략자는 만청제국이었다. 따라서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 형성사에 대한 이해도 크게 달랐다. 그에 의하면, 청은 1769년의 카흐타 조약으로 인해 러시아는 청에게 40년 동안 개척한 토지를 잃었다. 이렇게 티흐빈스키의 인식은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 형성사에 대해서도 중국 학계의 인식과는 매우 달랐다.

- 티흐빈스키와 유사하게, 피터 C. 퍼듀는 18세기 “청-준가르의 갈등을 국가 건설 경쟁 과정으로 분석했다.
- 저자는 신장의 역사를 유라시아의 교차로로 파악한다기보다는 사실상 일종의 식민지의 역사로 파악한다고 볼 수 있다. 전통시대의 지배 패턴은 북쪽 지방의 유목세력이 남쪽 오아시스들을 지배하는 형태였으나, 18세기 청 제국의 신장 정복 이후에는 중국 북부에서 신장을 통제 하는 형태였다. 18세기 이후 중국 북부에 기반을 둔 국가는 러시아나 영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면서 이슬람적 정체성을 가진 신장 사회를 통제하거나 통제하려고 노력했다고 할 수 있다.
- 오늘날 위구르(Uyгур)라는 말은 타림분지의 오아시스 주변에 거주하면서 이슬람을 믿고 투르크계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구소련이나 중국 정부에 의해 위구르라는 민족 명칭이 사용되기 이전에, 이들은 범투르크와 범이슬람이라는 정체성 이외에 위구르라는 독특한 집단적 유대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소련이 해체되어 여러 국가가 독립할 때 범이슬람주의나 범투르크주의가 대세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구소련 시기의 지역구분에 따라 독립국들이 수립되었다.
- 소수민족의 지역화 전략은 중국에서도 강력히 추진되었다. 1953년 시작된 민족자치 지방의 설립으로 위구르족의 집거지인 남서부의 호탄, 카스, 악수 지구와 동북부의 하미, 투르판 지구가 위구르족이 아닌 다른 소수민족 자치구역에 의해 중간이 단절되었다. 이는 위구르족의 이웃 동족 지역이나 외부와의 연계를 통제한 공간전략이었다.
- 관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청의 신장 정복의 중요성이나 신장 정복이 국가 형성에 미친 영향의 지대함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신장에서 한족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이미 청대에 시작된 것이며, 1884년 11월 신장성의 설치는 그러한 변화를 반영한 측면도 있었다. 신장성의 설치는 신장이 군사적 점령지로서 새로 편입된 영토(新疆)에서 내지와 동일한 行省 지역으로 편입시킨 조치였고, 이는 지역 개념도 그

렇게 변화시킨 것이다. 이후 신장의 역사에서 지역의 내실을 채우기 위한 신장 지역 개발은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 1884년 11월 신장 건성 후에 변경의 도시가 된 이리는 신장의 정치, 경제, 군사의 중심지가 되지 못하고, 디화(迪化; 지금의 烏魯木齊)가 중심이 되었다. 우룸치는 중화인민공화국 시기에도 신장의 중심도시이다. 사실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경내의 다른 소수민족의 자치주와 자치현이 모두 성립되고 난 후에 성립되었다. 성립 당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자치구역의 명칭 문제였다. 명칭에서 위구르인들의 독립성이나 국가적 실체를 연상시키는 용어를 피하면서 현재와 같이 '신장위구르자치구'가 되었다.
-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전 신장 지역에 진주한 중국인민해방군은 신장을 개발하고 도로 등을 기반시설을 건설하였다. 신중국 정부는 1954년부터 집중적인 하방 캠페인을 통해 한족들을 대대적으로 신장으로 이주시켰다. 1955년 9월에 신장위구르자치구가 수립되었다. 1959년에는 51만여 명에 달하기도 했다. 신장에 대한 한족 이주는 1954~1959년, 1964~1969년 등 두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앞의 시기는 중앙 정부가 강소, 안휘, 호북, 하남의 근 30여만 명의 청년들을 가족들과 함께 이주시킨 결과였다. 두 번째 시기는 주로 문화대혁명의 혼란 속에서 자발적으로 한족들이 신장으로 이주한 것에 따른 현상이었다. 이러한 인구이동은 통해 1949년 당시에 6.7%에 불과하던 신장지역의 한족 인구는 1990년에는 37.58%로 높아지게 되었다. 신장의 인구는 1949년 433.34만 명에서 2005년에는 2010.35만 명으로 연평균 2.79%로 늘었다. 이것은 1년에 28.16만 명이 늘었고 비율로는 2.79%가 늘어난 것이다.

=위구르인은 어머니가 낳지만 한족은 기차가 낳는다_

- 인구수와 구성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여기에서는 1950~60년대 신장에 대한 행정구역 정비, 인도이동, 지역개발 사이의 연동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장위구르자치구의 가장 큰 특징은 신장위구르자치구와 동급의 신장생산건설병단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1954년 10월 설립되었다가 1975년 3월에 폐지되었지만, 1981년 12월 신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생산건설병단을 다시 설치하였다. 이 생산건설병단은 일반 행정체계와는 독립된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분산된 개간구역 분포를 보여주고 있었다. 신장에 생산건설병단이 설치되고 오늘날까지 존속하게 된 이유는 이전의 소련과의 갈등, 그리고 현재 동투르크스탄 지지세력의 존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신장의 민족지역이라는 측면과 함께 변경지대라는 요인도 충분히 검토하여 지역성의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4. 맺음말

- (균형 발전) 중국의 변경연구사업들은 새로운 공간이해와 공간설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설계는 변경연구사업 뿐만 아니라 외교전략에서도 드러난다. 중국은 1996년 ‘신안보개념’을 발표하고 1997년에는 ‘상하이협력기구’를 창설하였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G2라는 국제적 위상을 확보해 가고 있다. 주변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아시아평화공동체 형성이라는 과제 속에서 상호 이해를 넓혀갈 필요가 있다.

= 중국의 부상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음

현대 한일관계의 성립(국교수립)과 과제, 향후 전망

• 이원덕 (국민대) •

현대 한일관계의 성립(국교수립)과 과제, 향후 전망

이원덕 (국민대)

1. 한일회담의 의의

1951년 10월20일 역사적인 제1차 한일국교정상화 교섭(한일회담)이 개최된 날, 한국 측 수석대표인 양유찬(梁裕燦)이 한일 간의 불행한 역사적 경위를 설명한 후, <이제 화해합시다(Let us bury the hatchet)>라고 발언하자 일본 측 수석대표인 이구치 사다오(井口貞夫)는 <도대체 무엇을 화해하자는 말입니까?(What is bury the hatchet?)>라고 반론했다고 한다.¹⁾ 이후 파란과 우여곡절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한일회담을 예고해 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다. 한일회담이 14년간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난항할 수밖에 없었던 최대의 이유는 과거 일제 35년간의 식민지배에 대한 양국의 역사인식이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데 있었다. 간단히 말하면, 일본정부는 35년간의 조선지배가 병합조약에 의한 합법 통치라는 인식에서 있었던 데 반해, 한국정부는 일제의 무력에 의한 강점으로 원천적으로 불법 무효라는 기본 인식 하에 회담에 응했던 것이다. 이 과거사 인식의 괴리 문제는 비단 한일 회담에 그치지 않고 전후 한일관계를 줄곧 마찰과 대립의 악 순환으로 끌여가는 최대 아킬레스 건으로 여전히 남아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한일회담은 세 가지 점에서 대단히 복잡한 교섭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이 회담은 세계 외교사에서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교섭이 장기화되어 타결되기까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14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14년간의 마라톤 교섭기간 중 1500 여회를 넘는 각종 회담이 개최되었다. 둘째, 한일회담은 교섭개시 이래 타결을 이루기까지 미국이 지속적으로 깊숙이 관여한, 말하자면 한미일 3자회담의 성격을 띤 교섭이었다. 미국은 냉전기 대공산권 봉쇄전략의 일환으로 한일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해, 때로는 배후에서 간접적으로 회담촉진을 위한 압력을 행사하였고, 때로는 표면에 나서서 직접적으로 회담타결을 이끌었다.

1) 유진오, "남기고 싶은 이야기 : 한일회담(23)", 『중앙일보』연재, 1983.9.26

셋째, 한일회담에서는 여러 가지의 의제가 동시에 다루어졌다. 즉, 한일회담에서는 기본관계, 청구권 문제, 어업-평화선 문제,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문제 등 굵직굵직한 중대 현안이 동시에 다루어졌다.

이 중에서 한국 정부는 무엇보다도 과거사 청산과 직결되는 기본관계와 청구권 문제를 유리하게 해결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기본관계가 과거 정신적인 청산과 관련된 의제라면 청구권 문제는 물질적인 보상, 배상을 다루는 내용이다. 기본관계의 핵심 주제는 1910년 한국병합 조약의 해석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다. 즉, 일본의 식민통치를 가능케 했던 구한말의 조약의 정당성 문제, 나아가 식민통치에 대한 평가 및 해석과 결부된 문제가 과거사 인식과 직결되는 기본관계의 핵심 내용이다. 이에 반해 청구권 문제는 식민지 과거사와 관련된 물질적인 차원의 보상과 관련되는 의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정부는 과거사 청산에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대신 이승만 대통령이 선포한 평화선의 철폐와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를 확정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즉, 일본은 한국의 과거사 청산 요구가 과도하다는 인식 하에 이를 국제법과 증거 논쟁으로 적절히 억제하고 그 대신 평화선 철폐를 통한 일본어민의 안정적인 어업권 확대를 꾀하고 일본사회의 골치 덩어리로 간주되는 재일교포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대의 관심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일 양국은 미국으로부터 회담의 조기타결을 통한 국교수립의 압력을 동시에 받고 있었다.

2. 박정희 정권 이전의 한일 회담

1) 이승만 정권 하의 대일회담- 역청구권과 <구보다 망언>의 회오리²⁾

이승만 정부는 정부수립 직후부터 대일 강화조약에 한국이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여한다는 기본입장 하에 대일 배상요구를 강력하게 제기해왔다. 이 결과 작성된 것이 1949년 완성된 『대일 배상 요구조서』이다. 이 조서는 한국이 강화조약의 정식 서명국이 된다는 전제 하에 작성된 것으로서 전쟁 배상적인 성격을 띤 대일 요구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서에는 현물의 반환요구 외에 확정채권, 중일전쟁 및 태평양전쟁에 기인하는 인적 물적 피해 그리고 일본의 저가수탈에 의한 손해보상 및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2) 이승만 정권기의 한일회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이원덕 『한일과거사 처리의 원점』 pp17-77을 참조.

그러나 이러한 이승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화조약에서 한국의 정식 서명국으로의 참가는 좌절되고 말았다.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은 한국을 대일 전승국의 일원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승만 정부는 대일회담에서 막대한 대일 배상을 요구하려던 애초의 계획을 철회하고 그 대신 강화조약 제4조에 입각한 재산, 청구권 요구를 제기하였다. 이른바 8개 항목의 청구권 요구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의 청구권 요구에 대해 일본은 이른바 역 청구권의 논리를 제기하면서 한국에 맞섰다. 즉 일본은, 한국이 일본에 청구할 권리가 있다면 일본 측으로서도 식민지 시대 재한 일본인 재산에 대하여 그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한국은 일본 측의 예상외의 역 청구권 주장에 대하여 경악과 충격을 금치 못했다. 이승만 정부 하에서 열린 초기 한일회담은 이 처럼 역 청구권 논쟁에 휩싸여 좌초하고 말았다.

이후 1년 반 만에 가까스로 재개된 한일회담은 이번엔 「구보다 발언」이 몰고 온 회오리 속에 휩싸여 또다시 결렬되고 만다. 「구보다 발언」이라는 것은 제3차 회담 석상에서 일본 측 수석대표인 구보다(久保田貫一郎)가 행한 발언이다. 당시의 논쟁상황을 재연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흥진기 대표는 “본래대로 하자면 한국은 일본지배 하에서 한국민족이 받은 피해—예를 들면 애국자의 투옥 학살, 한국인의 기본적 인권 박탈, 식량의 강제 공출, 노동력의 착취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한국 측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 순수한 법률적 청구권만을 제출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구보다 수석대표는 “그렇다면 일본 측도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일본은 36년간 벌거숭이 산을 푸르게 바꾸었다든가, 철도를 건설한 것, 水田이 상당히 늘어난 것 등 많은 이익을 한국인에게 주었다”고 반론하였다. 이에 흥 대표가 “마치 일본이 점령하지 않았더라면 한국인은 잠만 자고 있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말하고 있으나 일본에 점령당하지 않았더라면 한국인은 스스로 근대국가를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하자 구보다는 “사견으로 말 하건데 나의 외교사연구에 의하면 일본이 진출하지 않았더라면 한국은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점령되어 더욱 비참한 상태에 놓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흥 대표가 “그렇다면 왜 카이로선언에는 〈한국의 노예상태〉라고 말하고 있는가? 왜 일본은 카이로선언을 받아 들였는가?”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구보다 대표는 “카이로선언은 전쟁 중의 흥분상태의 표현에 다름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흥 대표는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에 의해 취해진 전후의 처리, 예를 들면 한국의 노예상태로부터의 해방, 독립의 즉시승인, 60만 일본거류민의 본국 송

환, 총독의 보호 하에 축적된 일본인재산의 몰수는 노예상태로부터의 한국인의 해방이라는 새로운 보다 높은 이상 하에 행해진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구보다 대표는 이에 대하여 “사건으로 말 하건데 원칙적으로 보아 국제법에 부합한다고는 말할 수 없지 않은가? 사유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더욱 위반이라고 생각한다. 나로서는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싶지는 않으며 위반으로 해석하지는 않았다. 만약 위반했다손 치더라도 일본이 미국에 대한 청구권은 포기하였다”고 대답하였다.

한국 대표단은 구보다 발언을 회담의 기본정신을 망각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언으로 규정하여 회담을 중단하고 발언의 진의를 추궁하였다. 즉 한국은 구보다 발언의 해명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구보다는 발언의 정당성을 강변하였을 뿐 조금도 물러설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또 이 발언에 대해 일본의 오카자키 외상도 “구보다 발언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말한 것뿐이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여 이 발언이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대한 정책과 일치하고 있음을 강변하였다. 일본내부에서 이 발언에 대해 여당은 물론 야당조차도 이론을 제기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발언을 지지하는 것이 대세였다. 이로써 한일회담은 4년 반 동안 개최조차 되지 못한 채 중단상태가 지속되었다. 1950년대 말에 이르러 마침내 일본 측이 역청구권과 구보다 발언을 공식 철회함으로써 회담이 재개되었으나 때마침 발생한 재일교포의 복송문제가 이승만 정부를 자극 하면서 한일관계는 또다시 파국을 맞이하고 따라서 한일회담은 또 다시 좌초되고 말았다.

2) 장면 정권 하의 대일 회담-청구권 실질토의

1960년대에 들어와 한일양국에는 신 정권이 탄생하여 한일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그간 강경한 반일정책을 고수해왔던 이승만 정권이 학생혁명에 의해 붕괴되고 적극적인 대일 정책의 추진을 천명하는 장면 정권이 수립되자 한일관계는 회담의 조기타결을 서두르는 분위기로 전환되었다. 이 변화에 때를 맞추기라도 하듯이 일본에서도 안보투쟁의 소란 속에서 퇴진한 기시의 뒤를 이어 이케다(池田勇人)가 수상에 취임하여 한일문제에 의욕을 보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60년 9월에는 고사카(小坂善太郎) 외상의 방한이 이루어졌고 이어서 10월 25일부터는 제5차 회담이 개최되었다. 다음해 5.16 군사정변으로 회담이 중단되기까지 7개월 간 진행된 이 회담은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양국의 국내 정치적 제약과 양국 간의 현격한 입장차이 때문에 급속한 진전을 보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제5차 회담은 50

년대의 회담과 비교할 때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5차 회담의 성과로서 주목되는 것은 청구권 문제에 관한 실질토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과거 10년 간 네 차례에 걸친 회담에서 청구권문제가 한 번도 실질적인 내용의 토의에 들어가지 못한 채 법이론 논쟁으로만 매달렸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5차 회담에서는 공식 비공식 회의를 포함하여 청구권위원회가 32회나 개최되어 각 항목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괄목할 만한 진전이라 하겠다.

즉, 청구권 위원회에서는 5,16군사정변으로 회담이 중단되기까지 한국 측이 제출한 일반 청구권 8개 항목과 선박, 문화재의 반환에 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이중 청구권의 중추를 구성하고 있는 일반청구권에 관한 토의내용을 살펴보자.

먼저 일반청구권 제1항 地銀 地金の 반환에 대하여 한국 측은 지금, 지은의 양을 각각 67,541,771그램, 269,633,199그램으로 제시하고 그 반환을 요구하였다.³⁾ 그러나 일본 측은 지금과 지은은 일본이 이미 그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온 것으로 법률적으로 반환의무를 갖지 않는다고 강변하고 한국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묵살하는 태도를 취하였다.⁴⁾

다음으로 8개 항목 중 청구권 적용의 시기적인 범위와 직접관련이 있는 제2항, 제3항, 제4항 {(2) 1945년 8월 9일 현재, 일본정부의 대 조선총독부 채무를 변제할 것, 3) 1945년 8월 9일 이후 한국으로부터 이체 또는 송금된 금원의 반환할 것 4)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에 본사(점) 또는 主 사무소가 있는 법인의 在日 재산의 반환할 것}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은 근본적인 대립을 보였다. 즉, 한국 측은 일본재산의 미군정예의 귀속을 규정한 미군정령 33호에서 정하고 있는 시점인 1945년 8월 9일을 기점으로 하여 8월 9일 이후의 재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소유권이 한국에 있으며 따라서 그 이후 일본 측이 반출한 전 재산은 한국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 측은 이러한 한국의 주장을 거부하고, 한국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미군정령 33호가 공포된 1945년 12월 6일 이후의 것에 한한다는 견해를 표시했다. 즉, 재한 일본재산의 소유권에 대하여 한국 측은 8월 9일로 소급하여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반하여, 일본 측은 12월 6일 이후의 것에만 그 권리를 인정한다는 주장을 개진하였던 것이다.⁵⁾

3) 제1차회담시 재산, 청구권위원회에서 한국이 제기했던 8개 항목 중 제1항목은 지금, 지은을 비롯하여 고서적, 미술품, 골동품, 지도원판 등의 현물반환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5차 회담에서는 재산청구권 위원회가 일반청구권, 선박위원회, 문화재위원회의 3개 소위원회로 나뉘어져 개최되었기 때문에 地金, 地銀의 반환 요구만이 일반청구권위원회에서 다루어졌고 나머지 항목은 선박위원회와 문화재 위원회의 토의로 이관되었다.

4) 한국외무부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회의록 : 일반청구권위원회, 선박위원회, 문화재위원회』 pp.26-72

5) Ibid. pp.175-178 및 大藏省理財局外債課, 『日韓請求權問題參考資料』, (未定稿, 第二分冊), p.8. 이 자료에는 한국 측이 일본 측의 요구로 제출했던 "8항목의 청구권 요강"의 각 항목에 관한 일본정부의 견해와 그 법률적인 근거, 그리고 한일 교섭에 있어서의 한일쌍방의 청구권을 둘러싼 입장 차이에 대한 상세한 해설이 쓰여 있다. 이 자료(二分冊)는 총341쪽으로 되어 있고, "8개 항목의 청구권 요강" 전체에 대한 양국의 주장과 그 논거에 대한 記述이 기재 되어 있다. 그리고 第二分冊에는 제1항목부터 제4항목까지의 참고자료가 게재되어 있고, 제5항목부터 제8항목까지는 第三分冊에 다뤄져 있다. 필자가 입수한 것은 제2분 책뿐이다.

셋째로 청구권 위원회에서 양국이 격돌했던 또 하나의 문제는 제5항의 문제였다. 즉 제5항에서는 “한국법인 또는 자연인의 일본국 및 일본국민에 대한 일본국채 공채 일본은행권 피 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및 기타 청구권을 변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일본 측도 원칙적으로 “일단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권 토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항목”⁶⁾으로 분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수 있었다.

제5항과 관련하여 한국 측은 1961년 5월 처음으로 개인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을 청구권이라는 형태로 일본 측에 요구했다. 그것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요구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점에 있어서도 한일간의 토의가 평행선을 달리기는 마찬가지였다. 일본 측은, 청구권 교섭에서 한국 측이 개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였다. 즉, 일본은 이 주장을 막기 위하여, 한국 측에 대해 철저한 근거의 제시를 요구하는 이른바 증거논쟁으로 논의를 끌고 갔다.⁷⁾

철저한 증거의 제시를 요구하는 일본 측의 태도에 대하여, 한국 측의 대표를 역임한 한국 주일대표부의 문철순(文哲淳)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징병 등은 명백한 사실이며, 정확한 인원수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수만 명의 인원이 연행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도 일본은 한국 측에 구체적인 인원수나 증거자료를 요구하였다. 그것은 한국 측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한국에는 그런 자료가 없다. 일본 측이야말로 증거가 될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 따라서 일본 측에 보상하려는 의지가 정말 있다면, 한국 측에 증거를 내놓으라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⁸⁾

한편, 당시 외무성의 북동아시아 과원으로 한일회담에 관계하고 있던 야나기야(柳谷謙介)는 일본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지불하는 것은) 외교당국, 교섭당국 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다. 예산조치를 취하려면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하므로, 그럴만한 근거가 필요하다. 결국 청구권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증거나 법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여러 가지의미에서 상당히 불명확한 채로 청구권으로 지불하는 것은 일본 측의 법령상, 제도상 하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한다.⁹⁾

6) 『日韓請求權問題參考資料』, pp.2-5.

7) 『제5차회담 한일회담 예비회담 회의록 : 일반청구권위원회, 선박위원회, 문화재위원회』, pp.205-236

8) NHK調査報告, 『アジアからの訴え—問われる日本の戦後』, (1992年8月放映, NHKスペシャル)에서의 증언.

9) Ibid.

이상의 고찰에서 알 수 있듯이 제5차 회담의 청구권 위원회에서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회담이 중단된 1961년 5월까지, 8개 항목 요구 중 제1항목부터 제5항목의 일부까지의 내용에 관한 실질적인 토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토의에서 한일 양국은, 地金 地銀의 반환문제, 재한 일본 재산의 한국 귀속에 대한 시기적인 범위 문제 등에 관해서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였을 뿐, 실질적인 의견접근을 이루는 데는 실패하였다. 일본 측에 의해 원칙적으로 법적 근거가 인정된 개인피해의 보상 문제에 대해서조차 그 토의가 증거논쟁에 집중된 나머지 구체적인 보상금액의 산정에까지는 전혀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처럼 제5차 회담에서는 청구권 각 항목에 관한 실질적인 토의가 상당히 깊숙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의견접근은 성립하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이 회담에서 얻은 소득이라면 청구권 금액이 사무적인 토의에 기반한 산정작업을 거쳐 합의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양 정부가 명백히 인식하게 된 점이었다고 생각된다. 이 사실은 제6차 회담에서 양국이 청구권문제에의 접근을 사무적인 해결이 아닌 정치적인 타결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3. 박정희 정권 하의 대일회담

1) 청구권 문제 타결과정

5.16 군사정변으로 민주당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권 획득에 성공한 박정희 장군은 정권의 최대목표인 경제재건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일 관계를 타결하여 일본으로부터 자금과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확신하였다. 따라서 군사정권은 과거 어느 정권보다도 한일회담에 강한 열의를 보였다. 한편 당초 군사정권의 불투명한 장래에 대해서 관망의 자세를 보이고 있었던 이케다 정권은 1961년 6월의 케네디-이케다 수뇌회담을 계기로 군사정권의 회담재개요구에 응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8월에는 외무성의 마에다(前田利一) 북동아과장이 방한하여 군사정변이후의 한국정세를 시찰한 후 군사정권의 안정성과 대일 회담에의 의욕을 일본정부에 보고하는 등 회담재개를 향한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1961년 가을 제6차 회담의 개최가 합의되자 군사정부는 일본에 김유택 경제기획원장을 특사로 파견하여 청구권문제를 일거에 정치적으로 타결하기 위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편 대체적인 청구권금액의 윤곽을 탐색코자 하였다. 김 원장의 방일을 맞아 자민당의 소위 친

한파(우파) 지도자들은 정치적 해결의 원칙에 일부 동의하였으나 외무성을 비롯한 정부수뇌부는 성급한 정치적 절충과 더불어 실무적 교섭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하였다. 이때 청구권 금액의 타결 선에 대해서, 김 특사는 8억 달러를, 일본 측이 5,000달러를 제시하여 양국의 엄청난 금액 차이가 드러났다.¹⁰⁾

6차회담에서 분과위원회 별로 실무적 토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회담의 중심은 고위급 정치회담으로 점차 옮겨져 가고 있었다. 1961년 11월에는 박정희 의장이 케네디 대통령의 초청으로 방미하는 길에 동경에 기착하여 이케다 수상과의 정상회담을 갖고 회담의 조기타결에 돌파구를 열었다. 박 의장은 이 회담에서 일본이 성의를 갖고 청구권 문제에 임한다면 한국은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청구권만을 요구하고 정치적인 배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¹¹⁾

일본정부수뇌와 자민당의 지도자들은 박 의장의 전격적인 방일과 대일 양보의 자세에 고무되어 회담촉진의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와는 별도로 청구권문제의 실무교섭에서는 5차 회담 이래 표면화된 양국의 상이한 입장이 조금도 좁혀지지 못한 채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조기타결을 서두르고 있던 군사정부는 실무적 교섭에 의한 타결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아래 고위급 정치회담을 열어 일거에 청구권문제를 정치적으로 타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무렵 이케다 정권은 청구권문제의 해결책으로 한국에 「경제협력방식」을 제시할 것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었다. 「경제협력방식」이란 경제적 곤란과 개발자금의 부족으로 고뇌하고 있는 한국의 군사정권에 일정액에 해당하는 일본의 자본재와 役務를 유상, 무상의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한국이 주장하는 청구권 요구를 포기시킨다는 일종의 우회전략이었다. 즉, 이케다 정권이 구상하고 있던 시나리오는 청구권의 실무교섭에서는 철저한 법률론과 증거 논쟁으로 한국의 요구를 묵살하는 한편 정치적 절충에서 일본이 공업제품의 형태로 한국에 일정액을 제공하는 형태로 청구권협상을 타결한다는 것이었다.

1962년 3월의 한일외상회담부터 11월의 김종필-오히라(大平)회담에 이르기까지의 청구권을 둘러싼 양국의 정치적 절충과정은 이케다 정권의 상기 시나리오를 한국에 수용시키는 일련의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후의 정치회담에서는 청구권 개별항목에 대한 실무 레벨에서의 토의는 유보되고 그 대신 청구권 자금의 총액과 명목에 관해서 일괄적인 타결을 꾀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3월의 외상회담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이케다 정부는 청구권금액의 총액을 산정하기 위해 査定작업에 착수하게 되는데, 이때 청구권의

10) 외무부 정무국 아주과 『한일회담의 개관 및 제문제』 p.9

11) 『朝日新聞』 1961.11.13

총액으로서 대장성은 1,700만 달러 그리고 외무성은 7,000만 달러를 각각 산정하여 이케다 수상에 제출하였을 뿐 최종적인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¹²⁾ 이 금액은 당시 박정희 의장이 최저액으로 상정하고 있었던 5억 달러 안과 비교해 볼 때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³⁾

1962년 3월에 개최된 최덕신-고사카(小坂善太郎) 외상회담은 한국 측의 기대와는 달리 청구권 금액의 조정에 들어가기는커녕 법률론과 원칙론에 대한 쌍방의 공방만이 전개된 채 불발로 끝나고 말았다. 아직까지도 일본정부는 청구권금액의 최종적인 액수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조정과정에 있는 액수를 보더라도 한국이 요구하는 액수와는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이케다 수상은 7월의 참의원 선거에의 악영향을 고려하여 조급한 청구권타결에는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다만 이 회담의 성과라면 한일 양 외상이 청구권금액으로서 7억 달러와 7천 달러를 각각 공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것이었다.¹⁴⁾

1962년 7월 참의원선거를 승리로 이끌어 수상 재선에 성공한 이케다 수상은 한일회담의 조기타결에의 의욕을 가다듬고 새로운 외상에 오히라(大平正芳)를 등용하였다. 오히라 외상은 취임직후부터 외무성관료는 물론 자민당 수뇌부, 대장성 등과의 의견조정을 거쳐 청구권 처리에 대한 일본 측의 최종적인 복안 작성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등장한 오히라 구상의 골격은 청구권으로는 개인의 청구권에 엄밀하게 한정한다는 종래의 일본정부의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다만 이것에 무상공여, 유상의 경제협력을 추가함으로써 총액에서 한국의 요구에 접근하는 대신 청구권명목은 포기시킨다는 것이었다. 8월부터는 차기 정치회담을 위한 예비절충이 마련되어 스기 수석대표, 이세키 외무성 아시아국국장장과 배의환 수석대표, 최영택 주일한국대대표부 참사관의 4명만이 참석하는 절충작업이 진행되었다. 이 절충 역시 청구권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유보한 채 총액과 명목에 대해서만 논의의 대상으로 하였음은 물론이었다.

이 절충의 첫 회담에서 일본 측은 외상회담에서 양국이 제시한 7억 달러 대 7000만 달러의 금액 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국 측이 청구권 명목을 포기할 것을 제안하였다.¹⁵⁾ 이에 대해 한국은 일보 후퇴하여 「청구권의 테두리 안에서의 순수변제 3억 달러 플러스 무상 3억 달러」안을 일본 측에 제시하였다.¹⁶⁾

12) 『日韓請求權問題參考資料集』 p.71

13) 배의환 『보리고개는 넘었지만: 배의환 회고록』(코리아헤럴드, 1992), p.168

14) 외무부 정무국,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회의록』, pp. 28-29

15)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회의록』, pp. 28-29

16) Ibid. pp. 42-46

그러나 일본은 청구권의 명목이 사용되는 한 7000만 달러를 넘을 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무렵 배의환 수석대표는 박 의장에게 「비공식 접촉의 결과 일본은 무상 3억 달러에 낙찰할 의사가 있는 것 같다. 다만 명칭은 미정이며 예비절충 중에는 이 금액과 1억 달러의 간격을 유지할 것 같다」고 일본 측의 진의를 분석하여 보고한 후 「만약 일본이 무상 3억 유상 2억 달러를 제안하면 이 선에서 낙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생각 한다」고 건의하였다.¹⁷⁾ 이후의 정치 절충에서는 명목에 관한 논의가 유보된 채 금액 차의 축소에 중심이 모아졌다.

결국 이 예비절충에서 양국의 제시액은 5억 달러 대 1억 7000만 달러까지 좁혀졌으나 더 이상은 축소되지 않았다. 예비절충에서 양국의 입장이 명확히 드러남에 따라 최종적인 답판은 고위 수준의 정치회담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채택되었고 여기서 마련된 것이 김종필 정보부장과 오히라 외상 간의 회담이었다.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두 사람 만의 단독회담에서는 예비절충에서 제시된 양국의 입장을 상호조정하고 청구권문제의 최종적인 합의를 끌어내는데 중점이 놓여졌다. 10월 21일의 첫 회담에서 오히라 외상은, 이케다 수상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전제로 3억 불을 일본 측이 제공할 수 있는 최대치로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김 부장은 이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액수이며 한국은 적어도 6억불을 상정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명목에 대해서는 오히라 외상은 일본의 국회와 국민을 납득시키기 위해 독립 축하금 또는 경제자립을 위한 원조금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고 김 부장은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협의할 것을 주장하였다.¹⁸⁾ 첫 회담에서 양국의 복안이 제시되었으나 최종적인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제2차 김-오히라 회담은 김 부장이 미국방문을 마치고 동경에 돌아온 직후인 11월 12일에 개최되었다. 이에 앞서 박 의장은 김 부장에게 긴급훈령을 보내어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다.

청구권 명목을 독립 축하금 또는 경제협력으로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어디까지나 우리국민이 청구권에 대한 변제 또는 배상으로서 지불 받는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는 표현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 지불금액에 있어서는 순 변제와 무상의 합계가 차관액보다 많아야 하며 이의 총액이 6억불이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양보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 오히라 외상이 시사했던 무상공여 3억불은 과거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논의의 대상이

17) "배의환 대사로부터 박의장에게 보고" 1962.8.30 『한국정부 외교문서』

18) "1962년 10월21일에 있었던 김 부장과 오히라 외상 회담에서 논의된 문제점과 그 내용" 『한국정부 외교문서』

될 수 있는 선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이것이 회담촉진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할 것.¹⁹⁾

이 훈령을 검토한 후 김 부장은 오히라 외상과의 두 번째 회담에 들어가 청구권의 명목과 금액에 관한 최종적인 답판을 벌였다. 세 시간 반에 걸친 이 단독회담에서 청구권문제는 최종적인 타결에 도달하였고 이 결과를 기록한 것이 김-오히라 메모이다. 이 메모의 작성은 “단독회담 후 생길 수 있는 해석의 차이를 방지하기 위해 메모를 남기도록 하자”는 김 부장의 제안을 오히라 외상이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진 것이었다.²⁰⁾ 김-오히라 메모는 다음과 같이 간결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 1) 무상 : 한국 측 3억5천만 달러(오픈 어카운트 포함), 일본 측 2억5천만 달러(오픈어카운트 불 포함)/ 이것을 양자가 3억 달러(오픈 어카운트 포함)로 10년 기간의 조기제공 가능조건으로 양 수뇌에게 건의한다.
- 2) 유상(해외경제협력기금) : 한국 측 2억5천 달러(이자율 3%이하, 7년 거치, 20-30년 상환) 일본 측 1억 달러(이자율 3.5%, 5년 거치, 20년 상환)/ 이것을 양자가 2억 달러(10년 기간조기제공 가능조건, 이자율 3.5%, 거치 7년, 20년 상환)로 양 수뇌에게 건의한다.
- 3) 수출입은행 차관에 대해서 : 한국 측은 별개의 취급을 희망, 일본 측은 1억 달러 이상을 프로젝트에 의해 신장가능. 이것을 양자가 합의하여 국교정상화 이전이라도 협력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양 수뇌에게 건의한다.²¹⁾

이 메모는 일본 측이 한국에 제공할 금액으로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차관 1억 달러 이상」이라는 총액의 대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금제공의 명목에 관해서 이 메모는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즉 이 메모는 명목에 관한 표기를 유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 메모에서 명목을 명기하지 않았던 것은 한일 양 정부가 대내적으로 이 금액의 명목을 편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포석이었다.

이후에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한국정부는 이 금액을 「청구권자금」 또는 「사실상의 배상」으로 설명하였고 일본정부는 「경제협력자금」 혹은 「독립 축하금」으로 해석하였던 것이다.

19) 「대일절충에 관한 박의장의 김 부장에게 훈령」, 1962년 11월 8일 「한국정부 외교문서」.

20)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회의록」, pp.231-234

21) 「동아일보」, 1992년 6월 22일자에 「김-오히라 메모」의 원문이 게재되었다.

추가실무접촉에 의해 확정된 합의문서에는 「일본의 무상유상자금의 제공의 수반적인 결과로서 청구권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규정이 채택됨으로써 한국 측이 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10여년의 한일회담의 최대 초점이었던 청구권 문제는 이처럼 한일 간의 역사 청산이라는 본질과는 괴리된 채 「경제협력」이라는 왜곡된 형태로 결착을 보게 된 것이다.

2) 기본관계의 타결과정

김-오히라 메모 이후의 한일회담은 군사정권내부의 혼란과 한국국내의 회담반대 운동의 격화라는 사태에 봉착하여 2년간의 정체상황을 면치 못하였다. 결국 한일회담의 최종적인 마무리는 1964년 11월에 재개된 제 7차 회담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 회담의 초점은 기본관계문서의 작성에 맞춰졌다. 기본관계를 둘러싼 한일 간의 대립 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과거조약의 무효시점에 관해서 한국 측은 1910년의 한일합방조약 및 그 이전의 협약이 원천적으로 무효(null and void)라는 입장을 관철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합방조약은 일본의 패전 혹은 대한민국의 성립까지는 유효하며 일본의 한국 통치가 합법적이었다는 관점에 서서 have become null and void 라는 표현을 주장하였다. 둘째로 한국의 관할권의 범위에 관해서 한국 측은 한국이 한반도전역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규정을 두고자 의도하였다. 그러나 일본 측은 북한정권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한국의 관할권이 한반도 전역에 미친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표현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유엔결의 195(3)에 명시된 바와 같은 합법정부라는 표현을 주장하였다. 유엔결의 195(3)에는 한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한국의 사실상의 관할지역이 남한에 제한됨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주장이었다.²²⁾

실무교섭에서 이 두 가지의 대립사항은 평행선을 그으며 접근되지 못하였다. 결국 이 문제는 청구권문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상회담에 의한 정치적 해결에 맡겨지게 되었다. 이동원 외무장관과 시이나(椎名悦三郎) 외상 간의 회담에서는 두 가지의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타협안이 채택되었다. 구 조약의 무효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무효이다; are already null and void」라는 문구가, 그리고 유일합법성문제에 관해서는 「유엔총회결의 195(3)에서 명시된 바와 같은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 the only lawful

22) 「기본관계 문제에 관한 훈령」, 1965.1.25 ; 「김 대사의 외무장관과의 제5차 수석대표 회담결과 보고」, 1965.2.12 「한국정부 외교문서」 참조.

Government in Korea as specified in the Resolution 195(3)」라는 문구가 채택되었다.²³⁾

이 문구는 쌍방의 주장을 절묘하게 타협시킨 것으로서 양국의 어느 쪽도 유리한 방향으로 편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특히 정신적인 면에서의 양국의 과거청산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구 조약의 무효시점을 「이미 무효」라고 애매하게 규정한 것은 식민지 지배의 합법성을 강변하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수용한 것에 다름 아니었다. 즉 한국정부가 「이미」라는 시점을 구 조약의 체결시점부터 해석한 것과는 달리 일본정부는 식민통치가 종결된 일본의 패전이후로 해석하였던 것이다. 이는 양국의 전후처리의 핵심내용인 역사인식의 괴리를 조약문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한 결과를 초래하여 이후에도 끊임없는 양국 간에 역사해석논쟁이 반복될 소지를 제공한 것이었다.

기본관계의 타결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의 식민지 시대에 대한 인식은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을 뿐 근본적인 태도전환은 어디서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예로서 다카스키발언을 들 수 있다. 다카스키(高杉晉一)는 재계출신으로 사토수상에 의해 제7차 회담의 수석대표에 임명된 인물인데 그는 외무성 기자 클럽에서의 회견에서 1965년 1월 7일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행하여 일대파문을 일으켰다. 그 일부를 옮겨보자.

일본이 조선에 대한 과거의 통치에 대해 사과하라는 이야기도 있다지만 일본으로서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분명히 조선을 지배했다. 그러나 일본은 좋은 일을 하려고, 조선을 보다 낮게 하려고 한 일이었다. 지금 한국에는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다고 한다. 이런 것은 조선이 한국으로부터 떨어진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20년쯤 더 일본과 상충했다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일본의 노력은 결국 전쟁으로 좌절되었지만 20년쯤 더 조선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대만의 경우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²⁴⁾

결국 이 발언은 일본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赤旗)에 의해 보도되어 한일양국에 엄청난 회오리를 불러일으킬 뻔하였으나 한일회담에의 악영향을 고려하여 진화 작업에 나선 외무성과 한국대표단의 노력에 의해 일단 수습되었다. 즉 다카스키는 자신의 발언내용이 공산당에 의해 허위보도 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나섬으로써 사태를 봉합하였던 것이다. 이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1965년의 시점에서 일본의 과거문제에 대한 태도는 구보다 발언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23) 기본관계타결을 둘러싼 교섭경위에 대해서는 「한일 간 기본관계조약에 관한 교섭경위」 1965.2.20 「한국정부 외교문서」; 椎名悦三郎追悼刊行會, 『記録 椎名悦三郎(下巻)』, pp.74-76; 이동원 「대통령을 그리며」(고려원, 1992) pp.225-231 참조.

24) 김동조 「회상 30년 한일회담」(중앙일보사, 1986) pp.269-270

형식적으로나마 일본의 조선통치에 대해 사죄의 의미를 최초로 표명한 시이나 외상의 한국도착 성명도 따지고 보면 일본의 과거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자세 전환은 아니었다. 시이나는 1965년 1월 17일 김포공항에서 「양국간의 긴 역사 중에 불행한 기간이 있었던 것은 매우 유감 된 일이며 깊이 반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낭독하였다. 이 한마디도 일본의 자발적인 의사 표명 이라기보다는 한국정부의 막후에서의 至難한 노력의 결과였다.²⁵⁾ 즉 한국정부는 국민의 반일감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일본에게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내용을 담은 발언을 집요하게 요구하였고 시이나 로서도 회담의 타결을 서두르기 위한 방편으로 이 발언을 행하였던 것이다.

이 성명에서 일본정부가 의도했던 점은 「불행한 기간」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를 말하는 것인지 또 「깊이 반성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이 성명의 법률적 함축을 최소화하려고 했다는 것이었다.²⁶⁾ 결국 이 성명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대일 감정을 일시적으로 누그러트려 당면의 최대과제인 기본조약 가 조인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해진 외교 기술로서 편의적 표현에 불과한 것이었다. 즉 시이나 외상의 반성 표명은 결코 종래의 일본 정부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기본인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4. 한일회담의 타결논리와 한계

한일회담은 양국간에 존재하는 과거사 인식의 깊은 괴리를 극복하고 새로운 우호협력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교섭이었다. 그러나 14년간의 마라톤 교섭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과거사 인식의 근본적인 차이는 좁혀질 수가 없었다. 36년간의 식민통치를 원천적으로 불법, 부당한 것으로 보는 한국 측의 인식과 그것을 적법하고 합당한 것으로 보는 일본 측의 인식이 외교협상을 통해 근접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이처럼 과거 일본의 조선통치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현격한 인식 차로 말미암아 이 교섭은 심각한 갈등과 대립을 겪은 후에야 타결될 수밖에 없었다.

14년간의 회담 전개과정에는 다음의 두 가지의 상반된 힘이 지속적으로 작용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즉, 회담을 타결로 이끌어 가는 힘은 안보 논리와 경제 논리에 의해 주어졌다.

25) 시이나 외상의 도착성명을 둘러싼 한일 간의 교섭과정에 관해서는 椎名悦三郎追悼録刊行會, op.cit. pp.44-45; 「前駐韓國大使 前田利一氏に聞く (上) 日韓國交正常化前 實情」 『經濟と外交』 1985.7 참조.

26) 椎名悦三郎追悼録刊行會, op.cit. p.52

안보 논리와 경제 논리가 한일관계의 구심력으로 작용하여 교섭의 타결을 촉진시켰다. 반면 과거사 청산 논리는 회담을 대립과 갈등으로 끌고 가는 힘으로 작용하였다. 교섭을 결렬의 방향으로 끌고 가는 원심적인 힘의 원천은 과거사 청산의 논리에 의해 주어졌다.

냉전체제와 연계된 안보논리는 한편으로 전후 냉전체제하에서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라는 형태로 작용해 왔다. 즉, 미국은 회담의 개시 단계에부터 타결 시점에 이르기까지 한일 회담의 타결을 위해 끊임없이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애당초 한일 양국을 회담의 테이블에 앉힌 것이 다름 아닌 미국이었으며 나아가 반복되는 회담의 중단과 결렬사태를 회담재개와 타결로 이끌어가기 위해 때로는 배후에서, 때로는 표면적인 압력을 가한 것도 미국이었다. 일본 측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회담타결의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 것은 안보적 고려였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조선은 일본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비수”라는 인식은 명치유신 이래 일본의 한반도 정책에 흐르고 있는 일관된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박 정권 또한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국이 희구하는 한일국교 정상화를 달성할 필요성을 느꼈다.

안보논리와 더불어 두 번째의 에너지 공급원은 경제논리였다고 생각된다. 경제논리가 회담타결의 주요한 추진력으로 작용했다는 점은 1950년대에 담보를 면치 못하던 한일교섭이 1960년대 들어서 급격하게 타협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사실을 보아도 명백하다. 사실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일 경제관계는 미국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것에 불과했으며 상대를 경제적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만큼 긴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양국의 경제적 여건은 크게 달라졌다. 특히 한국의 경우 50년대 말부터 미국으로부터의 원조가 양적으로 크게 삭감되는 한편 질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되면서 그로 인한 경제적 침체와 불황이 심각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미국은 전후 대소전략의 일환으로 천문학적인 숫자의 경제 원조를 서유럽을 비롯한 동맹국에 쏟아 넣은 결과 달러의 과도한 방출로 인한 후유증에 직면하게 되었다. 미국은 50년대 말부터 달러방위라는 명목 하에 동맹국에 대한 경제 원조를 대폭으로 감축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도 그 예외는 아니었다. 또 케네디 정권이 들어선 이후부터는 원조의 성격이 소비재 위주의 무상 원조방식에서 개발을 지원하는 차관 형 원조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되자 한국으로서는 대미 의존 형 경제체질을 탈피하여 자립적인 산업화의 기반을 구축하여 본격적인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때마침 1961년 5월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한 박 정희는 정권의 제일목표로서 조국의 근대화와 경제개발을 내걸고 야심 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박정희 군사정권은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본과 기술의 부족에 직면하여 고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곤경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박 정권이 구상한 것이 다름 아닌 대일 관계의 타결노선이었다. 박 정권은 만약 대일회담이 타결된다면 상당한 액수의 청구권 자금이 들어올 것이고 더 나아가 일본과의 경제관계가 정상화된다면 다량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경제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고 계산한 것이다.

더욱이 미국은 박 정권에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스스로의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도록 권유하는 한편, 대일회담의 타결을 통해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일본으로부터 도입하도록 강력한 압력을 행사하였다. 미국은 박 정권이 대일회담의 타결에 나서지 않을 경우 경제 원조를 중단 내지 삭감할 것이라는 압박을 가했다.

한편 일본의 경우도 회담타결의 기운이 무르익기 시작한 60년대로 접어들면서 한일관계를 경제적인 각도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입장과 다를 바가 없었다. 안보투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물러난 기시 정권의 뒤를 이어 등장한 이케다 정권은 될 수 있으면 국내의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안보 정치적 쟁점을 회피하고 그 대신 정치의 중심축을 경제로 옮겨놓는 쪽으로 정치노선을 설정했다. 이케다 수상은 야심적인 정책으로 내놓은 ‘소득배증계획’ 이야말로 이케다 정치노선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한일회담의 최대 난제였던 재산청구권 문제가 이케다 정권하에서 경제협력방식에 의해 타결되었다는 점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이케다 수상은 한일회담의 본질을 경제문제라고 인식하고 대한관계를 경제외교의 일환으로 풀어 나가려고 시도하였다. 즉, 이케다 정권은 청구권 문제의 본질이 과거사의 청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제적 이해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이케다 정권이 청구권의 해결방안으로 고안해낸 것이 경제협력 방식이었다. 경제협력 방식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한국의 청구권 요구를 명목과 지불의 둘로 나누어 지불 액수에서는 한국의 요구에 최대한 접근하고 명목에 관해서는 사죄와 보상의 의미를 배제하는 대신 경제협력의 의미를 부여한다. 둘째, 한국에 일본의 공업제품과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장래 한국에 대한 경제 진출의 토대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경제협력방식의 요체는 지불의 방식을 자본이 아닌 공업제품과 용역으로 한다는데 있었다. 경제협력방식은 전후 일본이 인도네시아, 버마, 필리핀,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전후처리에도 적용했던 방식이었다. 일본은 이러한 전후처리의 방식을 오히

러 동남아시아에 대한 경제 진출을 적극화하는 토대로 활용해 왔다. 일본은 한국에게도 이 방식을 적용시키고자 의도했던 것이다. 경제협력방식이 채용된다면 일본으로서도 결코 경제적으로 손해 볼 것이 없으며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일본의 계산이었다.²⁷⁾

이처럼 한일회담의 타결은 냉전적 상황과 그에 기반을 둔 안보논리 및 경제논리에 의해서 촉진되었을 뿐 정작 회담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사 청산의 논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한일회담의 타결과 한일조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정상적인 한일관계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남아있는 것은 회담타결에 있어서 과거사 처리문제가 유보된 채 안보와 경제논리에 입각한 편의적인 해결만이 도모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지루하고도 긴 교섭을 통해 양국 정부가 도달한 해법은 과거사 청산 문제에 대한 정면 돌파를 회피하고 유보하는 선에서 타협을 모색한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타협은 한일기본조약의 비준국회에서 가장 극명하게 표출되었다. 즉, 한일 양국 정부는 비준국회에서 한일회담의 최대 초점이 되었던 청구권 문제와 과거인식 문제에 관해서 전혀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다.

한국병합 조약에 관해서 한국정부는 「이미 무효이다」라는 규정을 「당초부터 원천적으로 무효였다」라고 해석한데 대하여 일본정부는 「지금은 무효이나 당시는 유효하고 합법적이었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일본이 한국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유상, 무상의 자금의 지불명목에 대해 한국정부는 「과거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서 해석한 데 반해서, 일본정부는 어디까지나 청구권과는 관계없이 「한국의 경제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협력」이라고 해석하였다. 과거 청산이라는 핵심문제에 관해서 한일 양국의 이와 같은 상반된 해석은 한일조약이 얼마나 본래의 모습과 괴리된 일그러진 전후 처리였는가를 스스로 말해주고 있다 할 것이다.²⁸⁾

27) 경제협력방식의 청안자로 알려진 나카가와 조약국장의 다음과 같은 증언은 주목할 만하다. “나는 일본의 돈이 아니고 일본의 물품, 기계 혹은 일본인의 서비스, 역무로 지불된다면 이것은 장래 일본의 경제발전에 오히려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하였다. 상대국에 공장이 생겨나고 기계가 간다면 수선을 위해서 일본으로부터 부품이 수출된다. 공장을 확장할 때는 같은 종류의 기계가 일본에서 수출되게 된다. 따라서 경제협력의 형태라면 그것은 결코 일본의 손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NHK 調査報告 『アジアからの訴え：問われる日本の戦後』(1992년 8월 放送)

28) 한일기본조약의 체결로부터 40년이 경과한 오늘에 있어서도 과거사 청산문제는 여전히 한일관계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최근 한국 측의 한일협정 관련 외교문서의 일부공개를 계기로 한일 과거사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계기로 일제 시대에 강제로 징용, 징병되었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중대한 정치이슈로 등장함에 따라 한일 과거사 인식 및 청산 문제가 다시금 새삼스럽게 조명을 받고 있다

5. 박정희 정권의 대일회담 평가

1) 동남아 배상과의 비교²⁹⁾

한일 간의 전후처리는 이처럼 청구권과 경제협력이라는 애매한 명목으로 타결을 보게 되었다. 그렇다면 일본이 점령했던 기타 아시아 제국과의 전후처리는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먼저 대만과 중국의 경우는 여타 연합국의 경우와 같이 각각 일본과의 양자조약을 통해 배상 청구권을 포기하였다. 일본이 일으킨 전쟁의 최대피해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는 것은 일본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이 전후 줄곧 중국에게 막대한 규모의 정부개발 원조를 제공한 것은 이 배상청구권 포기 조치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동남아 4개국에 대해서는 강화조약 제14조에 입각하여 개별교섭과 배상협정을 통해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였다. 정식으로 배상을 받은 4개국이란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인데 미얀마에 2억 달러, 필리핀에 5.5억 달러, 인도네시아에 2.2억 그리고 베트남에 4000만 달러가 각각 지불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차관의 형태로 경제협력 자금이 제공되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기타 동남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준 배상적 조치로 다소간의 경제협력이 제공되었다. 현재 일본과 미수교 상태에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전후처리가 미결상태로 남아있다. 일본은 장차 북일 국교정상화가 달성된다면 1965년 당시 한국에게 제공했던 금액에 상당하는 청구권 자금을 북한에게도 지불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 하고 있다.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일본의 대 아시아 전후처리는 한반도의 남북한에 대해서는 강화조약 제4조에 입각한 재산, 청구권의 틀로 해결을 보았고 중국-대만에 대해서는 배상 청구권의 포기라는 방식으로 그리고 동남아 제국에 대해서는 강화조약 제14조의 틀에 입각하여 배상 및 준 배상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종결되었다. 일본이 배상, 준 배상, 청구권, 경제협력 등의 명목으로 아시아 국가들에게 지불한 금액은 역사상 패전국이 지불한 배상금에 비한다면 아주 가벼운 것이었다. 또한 일본이 지불한 전후처리 비용은 철저하게 현금의 형태가 아닌 현물과 역무의 방식으로 지불됨으로써 이후 이 지역에 대한 일본경제 진출의 토대가 되었다.

29) 일본의 대동남아 전후처리와의 비교에 관한 연구로서는 이원덕 "일본의 전후처리외교 연구 : 대아시아 전후 배상정책의 구조와 함의" 『일본학 연구』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제22집 2007.9 참조.

이렇게 일본이 유리한 조건에서 전후처리를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전후 냉전체제의 도래 때문이었다. 미국은 새로운 적국으로 등장한 공산 소련과 중국에 맞서기 위해 패전국 일본의 배상 책임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고 그 대신 경제 및 산업재건을 후원하는 전략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전후 냉전체제의 급속한 확산과 이에 따른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전환으로 말미암아 패전국 일본은 전쟁 배상의 막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오히려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던 것이다.

2) 박 정권의 대일회담 평가

한일회담에 대한 균형 잡힌 해석과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그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다음의 두 가지 조건 속에서 한국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외교교섭을 벌였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첫째, 한일회담의 출발점은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조약이었다는 사실이다. 한국정부는 이 강화조약에서 전승국의 지위를 획득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펼쳤지만 최종적으로는 좌절하고 말았다. 그 결과 일본에게 막대한 배상, 보상을 요구하려던 애초의 계획은 재조정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이 배상 권리를 향유하는 제14조국에서 탈락함으로써 한일 간 전후처리는 제4조에서 규정한 대로 재산 청구권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점은 한일회담 내내 한국의 대일 협상력을 제약하는 변수로 작용했다.

둘째, 당시 한일의 국력차를 고려해야 한다. 외교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경제력으로 보면 1960년대 중반 한국은 일인당 국민소득 100불이 안 되는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고 일본은 이미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해 있었다. 또한 한국은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 위에서 수립된 허약한 신생국가에 불과했으나 일본은 명치유신 이래 탄탄하게 정비된 막강한 관료조직을 지닌 강대국이었다. 이 상황에서 일본은 철저한 법률론과 증거론을 내세워 한국의 과거사 청산요구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한국정부는 14년간 일본과 ‘외교전쟁’을 벌인 것이다. 박 정부는 대일교섭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과거사 청산과 개발자금의 획득 그리고 서측 진영의 결속을 통한 안전보장의 확보를 추구하려 했다. 박 정부는 이 세 가지 목표 중 경제적 이익의 확보와 안보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였다. 빈곤과 안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일본과의 국교수립을 통해 경제개발 자금을 도입하고 미국으로부터 안보 공약을 공고히 하는 것이 우선적 국익이라고 박 정부는 판단했던 것이다. 박 정부의 이러한

전략적 선택이 이후 한국의 고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점은 1950년대 배상자금을 성공적인 경제개발로 연결시키지 못한 동남아의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경제와 안보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과정에서 과거사 청산과제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된 점은 한일회담의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일제하 강제연행 피해자, 종군위안부의 보상 문제 등 미해결의 과거사 청산 문제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한일관계를 짓누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것이 한일회담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경위를 고려할 때, 현재 일제하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국내조치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사 청산문제는 당시의 한국정부 못지않게 일본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보면 일본정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정 국제법이나 형식논리에만 집착하지 말고 종군위안부 등 미해결 과거사 현안의 해결에 적극 나섬으로써 한국과의 역사적 화해에 동참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일본의 우경화와 역사논쟁

• 한혜인 (성균관대) •

일본의 우경화와 역사논쟁

한혜인 (성균관대)

머리말

일본의 변화가 가시화되었다. 이제 완전한 ‘보통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아베정권은 헌법9조를 해석개헌으로 무력화하고, 7월1일 일본 각의는 ‘집단적자위권’선포 결정을 내렸다.¹⁾ 이와 같은 변화의 한축은 전후청산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 선포는 또 한편으로는 전후체제를 청산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일본이 완전한 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유엔헌장> 53조의 전범국 조항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 즉 국제사회가 인정할 만한 전후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전제였다. 따라서 일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더불어 시작한 일련의 전쟁배상, 전후배상(준배상)의 완결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²⁾

이러한 아베의 폭주는 안타깝게도 일본 내부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다.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반대여론도 ‘집단적 자위권’이 가지는 국내법적 위헌성과 국제법적 미완결성(한국과 중국이 전범국가인 일본의 전후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인식)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절차 상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읽을 수 있다.

이런 움직임은 위안부 문제를 취급하는 방법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아베정권에 들어와 ‘고노담화 검증’이라는 프레임으로 그동안 해결을 위한 노력의 문제로 남아있던 위안부의 문제를 ‘미해결의 종결’로 이끌어 가고 있다.

사실 1990년 이후 한 일 간의 과거사 문제는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그것도 ‘일본군관헌이 위안부를 강제연행 했다는 자료의 유무’가 대립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포괄적 강제성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본질

1) 集团的自衛權の行使を認めた閣議決定(全文, 2014年7月1日20時12分, 朝日新聞デジタル, <http://www.asahi.com/articles/ASG713DQGG71UTFK00J.html>)

2) 國會圖書館外交防衛課「調査と情報 第228号 戦後補償問題 總論(1)」

이라는 것은 뒤로 하고, 강제연행의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의 위안부 논의 자체를 흔들고 있다.

이렇게 과거사 문제를 문제의 본질보다 단순한 ‘사실’의 문제로 하게 한 것은 1990년대 시작된 역사수정주의자들이다. 즉, 일본의 자유주의사관은 일본 전후역사학 중 전쟁책임론을 사실이 아닌 전쟁사실을 가지고 일본을 악으로하는 ‘자학사관’이라고 비판하면서, 중국에 관해서는 ‘남경대학살의 문제’로 한국을 향해서는 ‘위안부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공격 프레임을 짰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 그 내용에 대한 분석은 여기에서 더 거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은 연구를 축적하고 있다.³⁾

역사학계에서는 그들의 비역사성으로 인해 더 이상 역사적 논쟁이 불가능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 또한 정치사회적으로는 일본의 우익의 득세와 우경화에 따른 신민족주의 움직임이라는 것으로 분석했다. 교과서 운동 역시, 한국과 일본의 불채택운동으로 인해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 교과서는 그다지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거기에 지금은 후지오카 노부카쓰(藤岡信勝)를 비롯한 새역모 그룹이 내부 분열 등을 보이기도 했다. 일견 자유주의사관 운동은 사그러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역사학자들이 이러한 자유주의사관의 본질을 ‘허상의 일본사’⁴⁾라고 규정 지었지만, 자유주의사관 운동조직 자체는 사그러 들었지만, 놀랍게도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집단적 자위권 획득 및 전후체제에서의 탈피, 즉 ‘자학을 벗어난’ ‘강한 일본’이라는 자유주의사관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본 글에서는 자유주의사관 운동 그 자체가 그들이 가시적인 헤게모니를 갖지는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을 움직이는 역사관으로 작용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를 위해 전후 역사인식 논쟁을 살펴면서 그들이 일본의 역사인식의 어떤 ‘결핍’에 영합하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역사인식을 구축해 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자유주의 사관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을 한 연구로는, 개번 맥코맥, 일본자유주의 사관의 정체(창작과 비평, 1997년 가을), 정재정, 일본의 논리(현음사, 1998), 김봉식, 자유주의사관에 대한 일고찰(일본학논총, 2000)와 이신철, 한일 근현대 역사논쟁(선인 2007)과 이규수의 일련의 논문이 있다. (이규수, 일본중학교 교과서의 보통일본인 만들기, 아시아연구 8-2 2006, 이규수, 일본의 신민족주의 역사학과 강요된 애국심 만들기, 한국고대사연구 52(2008.12), 이규수, 일본의 전쟁책임문제와 네오내셔널리즘, 아시아문화연구 2013). 자유주의 사관을 둘러싼 움직임에 대하여 일본의 우익분류의 움직임과의 관계 새로운 민족주의 움직임으로 판단하고 있는 연구로는 정진성, 일본의 신민족주의 운동, (국제지역연구, 1998 가을호) 한상일, 일본사회의 우경화(일본우익연구 중심, 2000년) 최영호, 전후일본 우익의 동향과 자유주의 사관의 태동(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5집) 등이 있다.

4) 部落問題研究所, 『自由主義史觀の本質』, 部落問題研究所, 1997.

1. 전후역사학의 균열

일본 전후역사학의 성립은 마르크스주의와 근대시민주의를 축으로 ‘황국사관’을 비판하면서 성립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GHQ에 의한 점령 이후 GHQ의 간부이면서 지일파였던 하버트 노만의 일본근대사연구에 크게 영향을 받고 진행되었다고 전해진다. 노만의 사고방식은 전전의 강좌파 마르크스주의 사학과 공통점이 많아 천황제 파시즘에 저항하고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반대하는 사상을 중요한 핵으로, 황국사관을 철저히 비판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왔다.⁵⁾

이러한 전후역사학의 황국사관 비판이 주는 맹점을 고지타 야스나오(小路田泰直)는 “전후역사학이 ‘황국사관’을 비판하는 것으로 황국사관의 핵이었던 ‘국체’자체를 심정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부인하게 되었고, 그러는 사이에 다른 국가나 사회와 구별되는 ‘일본’이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을 방기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즉, 아시아태평양 전쟁의 책임을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천황이나 군부, 혹은 전전 일본인 전체로 확산하는 등, 그 범주를 둘러싼 보혁 논쟁이 어떤 의미에서는 책임주체를 모호하게 해왔던 것도 그 일환이라고 지적했다.⁶⁾

1980년대 이란-이라크전쟁, 1990년 냉전이 붕괴와 일본의 고도성장의 쇠퇴 등으로 세계가 바뀌면서 일본 내에서 결론을 보류했던 보혁 논의가 힘을 잃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질서에 대응할 수 있는 ‘일본’의 모습, 즉 국민의 역사의식이나 역사관을 만들지 못했다고 반성한다. 이 사이를 자유주의사관이 차지하게 된 것이라고 고지다는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주의사관론자는 그간 지탱해왔던 전후역사학을 “일본인 자신의 역사의식을 잃어버리게 하는 미소양대국의 역사관 즉, 도쿄재판사관 코민테른사관”이라고 비판하면서 “냉전이 붕괴된 현재, 이러한 역사관을 극복하고 자국의 정사(正史)를 회복해서 일본의 차세대에 자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양식 있는 역사교과서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운동을 시작했다. 이 자유주의사관은 전후역사학이 결여했던 ‘주체’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자유주의사관은 ‘황국 사관’의 비판으로 인해, ‘천황=국가’가 부인되어 전후 공백으로 있었던 ‘국민의 역사의식’을 직접 거론하면서, 대중들에게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다.⁷⁾

5) 小路田泰直, 藤岡問題とはなにか, 奈良歴史研究会編, 戦後歴史學と自由主義史觀, 青木書店, 1997.

6) 布川弘, 自由主義史觀の提唱と近現代史研究の課題, 奈良歴史研究会編, 戦後歴史學と自由主義史觀, 青木書店, 1997.

7) 1990년대 중반 일반국민을 상대로 조사한 일본의 전쟁책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군국주의 교육과 정보에 속아 비참한 일을 당한 피해자여서 국민에게는 책임이 없다’가 36%를 차지했고, ‘그 전쟁은 일본의 자위와 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했던 전쟁으로 군국주의라든가 피해자다, 가해자다라는 문제가 아니다’가 18%를 차지했다. 즉, 54%이상이 전쟁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布川弘, 위의 글)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이란-이라크 전쟁, 냉전의 붕괴, 일본의 고도성장의 쇠퇴라는 외부적 요인도 물론 존재하지만, 전후역사학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패전 이후 제기되어 왔던 것들이 전후역사학에 조금씩 균열을 가지고 왔던 것도 사실이다. 즉, 전후역사학이 1994년에 들어서 갑자기 ‘자학사관’이나 ‘도쿄재판사관’, ‘코민테른 사관’이라고 비판받기 시작한 것은 아니다. 이 자유주의사관 논쟁 이전에도 몇차례 중요한 논쟁이 있었다. 그 논쟁들이 전후역사학의 어떤 점을 지적하고 있는지, 그런 균열은 자유주의사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인간’ 회복으로서의 『쇼와사(昭和史)』 논쟁

우선 1955년의 『쇼와사』 논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야마 시게루(遠山茂樹), 이마이 세이이치(今井清一), 후지와라 아키라(藤原彰)의 공저로 『昭和史』가 이와나미 서점에서 출판되어, 전후 역사 붐을 일으키는 문제작이 되었다. 이 책은 1926년부터 1955년까지의 역사를 서술한 것으로, 15년전쟁(만주사변~태평양전쟁)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저자 면면이 마르크스주의자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을 바탕⁸⁾으로 1950년대 당시 역코스 즉,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가 정권을 잡게 된 것을 비판하면서 나온 책이다.

논쟁은 이 책에 대하여 당시 문예비평가였던 가메이 가쓰이치로(亀井勝一郎)⁹⁾가 <문예춘추> 1956년 3월호에 비판 기사를 실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가메이는 유물사관(마르크스주의 역사학)에 관해서 “전전의 역사(황국사관)에서는 인민의 역사가 숨겨졌고, 왜곡되어 왔었던 것에 대해 유물사관은 그 숨겨지고 왜곡되어 있었던 면을 발견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야를 가져다주었다”라고 평가하면서도 그들의 역사서술에는 “인간이 없고”, 역사를 “계급투쟁”의 산물로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¹⁰⁾ 즉, 가메이는 좌파에게도 우파에게도 그 시대 전체를 관통하는 감동이 있고, 그 안에 “인간과 심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 한 예로 중일전쟁을 평가하는 방법을 들었다. “유물론자는 일본의 중국침략의 원인을 자본침투라고 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일본인이 서양에 대한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인을 열등민족 시 했기 때문에 침략이 가능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 것과 같이 ‘인간과 심리’가 없이 단순히 정파성에 의해 인물과 사실을 판단한다면 그 평가가 크게 달라진다고 했다. 또한 그런 사실들을 구사하는 문체가 재판관의 문체와 같아 도저히 공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8) 천황, 원로 군의 상층부 당시 재벌이 전쟁주도자로 전쟁책임의 당사자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피지배계급(그 전위로서 일본공산당)이 그 전쟁주도자에게 속아서 전쟁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논지.

9) 가메이는 프롤레타리아 문학에 경도되었다가 중일전쟁기인 1942년에는 일본문학보국회의 평론부회 간사를 맡아 전쟁협력자가 되기도 한다.

10) 竹縄亮一, 「自由主義史觀と過去の歴史觀論争との關わり」, 1999, <http://nagaikazu.la.cococan.jp/2semi/takenawa.html>

이에 대해 『쇼와사』의 저자들은 보다 심도있게 토의하지 않고 역사와 문학은 다른 것이라는 대답으로 일갈했다. 그러나 이 논쟁은 역사의 기술과 역사인식의 구도가 다음과 같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역사학자들에게 심어주는 역할을 했다.¹¹⁾

『쇼와사』 논쟁에서의 역사인식의 구조

구분	쇼와사(마르크스주의역사학)	가메이
등장인물	국민(대중과 그 전위로서의 일본공산당)	전형적인 인간
역사의 장의 구조	하부구조(자본, 경제적인 권력구조)	해후, 경험의 무대
설명의 방법	기계적, 과학적 논증	상황의 중요성을 주장

『쇼와사』 논쟁은 전후역사학의 일색이었던 역사인식 및 서술방식에 일정한 균열을 가지고 왔다. 가메이의 역사비판은 마르크스주의 역사가인 이로카와 다이키치(色川大吉)의 민중사 기술에도, 이후 대중적으로 크게 인기를 얻게 되고 또한 자유주의사관에도 깊게 연관되어 있는 시바료타로(司馬遼太郎)의 역사 기술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즉 역사에 ‘인간’과 ‘인간적 요소 및 심리’가 기술되게 되었다는 것과 그런 기술로 인해 역사에 ‘공감’이 가능해지고, 그로 인해 역사의 대중화라는 측면에서 가메이의 문제제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전후역사학에 대한 쇼와사 논쟁은 일본사람들에게 일본의 근현대사를 ‘국민(공산주의자)와 지배층의 대립관계’로 인식하던 것에서 국민이든 지배층이든 하나의 인간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세계를 하부구조적 인식을 ‘상황’이라는 것으로 일상화 할 수 있으며, 과학적 언어가 아닌 일상적 언어로 역사를 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준 것이다. 이것은 후에 자유주의사관론자들이 주장하는 근현대사는 실증을 토대로 하는 인간학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토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메이의 비판으로 인해 생긴 공간은 황국사관 비판에서 생긴 ‘국체’의 공동화 부분에 ‘인간’을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을 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계급대립의 관계가 아닌, ‘소박하게 국가를 믿었던 일본인’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이다.

이러한 균열은 후에 자유주의사관론자가 전후역사학을 국민과 지배층을 단순하게 대립관계로 보고 지배층을 단죄하는 ‘도쿄재판사관’이라고 비판할 수 있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전후역사학이 지배층의 ‘인간적 면모, 당시 상황의 중요성’을 파악하지 않고 단죄하는 ‘자학사관’이라고 비판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11) Tristan BRUNET(パリ第7大學生,東京外國語大學大學生), 「昭和史論争の問題点—メタヒストリ 的な分析—」, 2009.12. 第4回 國際日本學コンソシアム「日本學研究 はだれのものか?」歴史學部會.

2) '일본' 근대화론을 둘러싼 논쟁

『쇼와사』논쟁이후에 중요한 논쟁으로 일본 '근대화론'을 둘러싼 논쟁을 들 수 있다. 1961년 미국의 일본사학자 에드윈 라이샤워(Edwin O. Reischauer)에 의해 제기된 일본 '근대화론'은 일본 역사학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 라이샤워는 일본사학자로 하버드대학 교수로 있다가 1961년 주일 미대사로 와 강연 등에서 일본 근대화론을 펼쳤다. 라이샤워는 근대사에 있어서 비서양제국 중 근대화를 성립한 나라는 일본 뿐이고, 그것도 서양에서는 수세기가 필요했던 것이 일본은 메이지와 쇼와시대에 걸쳐 단기간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¹²⁾ 그럴 수 있었던 역사적 이유를 4가지 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화문명과의 접촉경험이 외국문화 유입에 용이한 토양이 되었다. 둘째, 중앙정부의 강제력이 약한 봉건제를 근본으로 하고 있어 강한 막부가 스스로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서양문명을 받아들였다. 셋째, 신분제도로 직업을 고정시켰기 때문에 기업 내의 질 높은 목표지향형 사고방식이 정착했다는 점, 넷째, 상공업에 대한 부담이 비교적 적고 기업활동 발전에 유리한 기업정신이 길러져 있었다.¹³⁾

이들 특징은 사실 상 일본 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일본만의 특징으로 여겨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다른 경제성장에 대한 '특별한 역사적 우월감'을 가질 수 있었다.

라이샤워는 특히 메이지의 정치, 문화 지도자와 민간 기업가의 성공을 또한 높이 평가했다. 그는 '전전의 일본사 전체가 암흑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 사관에 기반해서 메이지 초기에서 절대주의를 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제2차대전의 패배는 메이지 이후 지도자가 공동의 목적의식이 결여되었던 것이 주된 책임이지, 메이지체 제의 불완전성이 직접적 결과는 아니다. 따라서 메이지 정치지도자에게 파국의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라이샤워의 일본 근대화 평가는 일본의 독과점 자본가 및 전시경제체제의 수탈 등에도 면죄부를 주는 평가였다.

또한 근대화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관해서도 라이샤워는 '민주주의는 근대화의 부산물이지만 근대화 요소에 민주주의를 포함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와 같이 급격한 근대화가 일어난 나라에서는 역으로 전체주의 국가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즉, 일본의 천황제 전체주의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발언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라이샤워의 견해에 대해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이 '농민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12) 竹口亮一, 앞의 글.

13) 에드윈·O·라이샤워, 『라이샤워의見た日本』 徳間書店, 1967년.

인민에 관한 문제제기가 결여되어 있다'라든지, '근대의 역사적 진보성과 동시에 역사적 한계인 인민과 타민족 억압, 침략적 식민주의의 측면을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비판했지만, 당시의 마르크스역사학자들의 비판이 일본 전반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¹⁴⁾

라이샤워의 논지는 일본의 아시아 침략을 경제적 진출로 해석하여 정당화할 수 있게 했다. 동시대에 등장하는 대동아전쟁긍정론의 밑바탕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후지오카가 한일합방을 조선 근대화를 위한 것으로 보는 것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라이샤워가 메이지 유신 자체 또한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자유주의사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3) '대동아'전쟁긍정론을 둘러싼 논쟁

라이샤워의 근대화 논쟁과 거의 비슷한 시기인 1963년 9월부터 1965년 6월까지 잡지〈중앙공론〉에 하야시 후사오(林房雄)는 「대동아전쟁긍정론」을 연재했다. 전후역사학이 가지고 있었던 '폐쇄적 역사인식'과 딱딱한 문체를 벗어난 형태의 글로 연재되었고, 매우 반향이 큰 글이었다.

하야시는 이 글에서 전후역사학이 정한 명칭인 '태평양전쟁'을 '대동아전쟁'이라고 일부로 바꾸고 이것을 '동아백년전쟁'이라고 부를 것을 제안했다. 아시아에 진출한 서양과 일본이 접한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다른 아시아국들이 대부분 무저항으로 식민지화 되는 과정에서, 일본은 아시아를 식민화하려는 서양제국에 저항하는 백년전쟁을 계속해왔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한론, 청일전쟁, 러일전쟁,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은 서양에 대한 반격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야시는 이러한 논의를 전개하면서 메이지 유신 지사들을 미화했다. 정한론으로부터 시작된 100년 전쟁은 서양에 대항하여 동양을 지키는 성전이었으므로 천황이 중심이 된 전쟁이었다는 논지로, 도쿄재판사관과는 또 다른 천황 전쟁책임론을 구사했다.¹⁵⁾

이러한 하야시 논지에 대해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대사를 전쟁사의 관점에서 밖에 보지 않는다, 내셔널리즘과 확장주의는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다, 일본만이 서양에 저항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아시아제국이 강경한 저항에 의해서 일본은 침략을 벗어났다, 외압사관이고 국내 제 계급 문제를 무시하고 있다, 원인이나 의도와 결과의 자의적으로 상황주의적으로 역사적 사항이 선택 되고 있다, 실증적 논리적 역사연

14) 竹口亮一, 앞의 글.

15) 竹口亮一, 앞의 글, 林房雄『大東亞戰爭肯定論』夏目書房, 2001.

구라기보다는 울분을 토해내는 성격을 가진 주정적 평론에 지나지 않는다.¹⁶⁾

학계에서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편의 학자들과 일반대중에게는 또다른 논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바로 일본인들의 전쟁체험으로서 받아들이는 방법이다. 즉, 겉으로 표현할 수 없었던, 스스로 입었던 피해에 대한 의미부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해 준 것으로 인식한 것이다. 일본은 전쟁으로 2백수십만명의 인명을 잃었다. 그들이 죽은 이유가 무엇이고 그들의 죽음과 막대한 손실은 정말 아무 의미없다고 생각해도 좋은가, 라는 의문에 대한 그들의 죽음의 의미를 알려주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억압되었던 일본인 자신들의 희생에 대한 ‘의미’를 갖게 해준 것이다. 따라서 일본 대중에게는 이성적으로는 최대의 우익논리라고 배척하더라도 감성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중성을 띠게 했다.

후지오카 등 자유주의사관론자들은 이 대동아전쟁긍정론을 가장 우익적 사관의 대표로 보고 좌익이데올로기 사관인 도쿄재판사관과 같이 배척해야 할 대상이라고 선언했다. 본인들의 사관을 우익에도 좌익에도 속하지 않는 ‘자유주의’사관이라고 칭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았을 때는 대동아전쟁긍정론 보다 치밀하다.

야야시가 대동아전쟁긍정론을 전개할 때, 가장 힘을 기울여 설득한 말이 “좌익도 우익도 없다. 진실만이 진실이다. 대동아전쟁의 해석에 관해서도 과장되게 추하게 묘사하지도 말고, 과장되게 미화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썼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대동아전쟁을 비난하는 자는 일본의 자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¹⁷⁾

자유주의사관론자 역시 역사적 상황을 “사실 그대로 묘사한다”는 중립적 입장을 자임하면서도 반대편이라고 생각되는 역사관은 단순화하여 편협하게 왜곡하여 “좌익적 역사가들에 의해 자학적으로 기록되고 왜곡된 일본역사의 해석에는 단호하게 저항한다.”고 선언한다. 예를들면 메이지 유신에 관련해서는 “좌익 학자들이 쓴 메이지유신사를 읽으면, 유신의 인물과 사건을 되도록 추악하게 묘사하는 것이 ‘진실의 탐구’라고 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들은 공산혁명이라는 정치목적 위해 일본인의 역사에 진흙을 뿌리는 것이 학문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논조로 비판과 같은 것이다.

대동아전쟁긍정론과 자유주의사관은 위와 같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이점 또한 존재한다. 그것은 러일전쟁에 대한 해석과 내셔널리즘에 관한 정의이다. 대동아전쟁긍정론은 근대의 일본의 전쟁을 모두 서양제국의 아시아(일본 포함)식민지화에 대한 반격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조선과 만주의 점령은 서양열강과의 결전에 준비한 국력신장을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러일전쟁은 러시아의 아시아 진출을 퇴치한다는 측면에서 ‘방

16) 竹口亮一, 앞의 글.

17) 林房雄, 위의 글.

위전쟁'임과 동시에 조선지배권 싸움이라고 인정한다. 그리고 한국병합의 동기는 일본이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자유주의사관론자는 러일전쟁은 순연한 방위전쟁이고, 한일병합은 한국의 이익, 즉 한국의 근대화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석한다.

일본의 확장정책의 원동력이 제국주의가 아니라, 내셔널리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대동아전쟁공정론이나 자유주의사관론이나 같지만, 대동아전쟁공정론은 “내셔널리즘은 태생이 발톱을 가지고 있어, 대외확장주의로 전화할 위험성을 본원적으로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해, 자유주의사관은 “선한 내셔널리즘”을 주장한다.

자유주의사관은 전체적인 구도 즉 대외침략론을 긍정한다는 점에 대동아전쟁공정론과 큰 공통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동아전쟁공정론을 우익사관이라고 지칭하면서 본인들을 중도의 위치에 넣어 대중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취했다.

2. '건강한' 내셔널리즘의 탄생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자유주의사관은 사회적 요인인 일본의 우경화라는 외적요인 외에도 역사학 속에서의 역사인식의 논쟁 속에서도 '탄생'의 맥락을 보았다. 전후역사학이 황국사관 비판을 과제로 하는 것으로 인해, 전전의 '국체'론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거부하면서,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일본이라는 공동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 무엇이 공동화되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누노가와 히로시(布川弘)는 실제로 미군정으로부터의 독립, 전후청산 등 새로운 국가로 탈바꿈해 갈 때도, 소련의 붕괴로 인해 더 이상 보혁 논쟁이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는데도 새롭게 역사를 재해석할 새로운 역사관을 갖지 못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비판한다. 그에 덧붙여 1990년대 그 시기의 역사학계는 '체계적인 역사인식을 형성하기는커녕, 체계성이나 역사인식, 역사관을 묻지 않았다. 더더욱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역사관이라는 차원 이전에 역사인식방법조차 묻지 않았고, 역사 연구회 석상에서 방법적 문제제기 자체를 싫어하고 “선입관을 가지지 말고 사료를 그대로 보라”라는 등의 무의미한 이야기들을 했다¹⁸⁾고 반성했다.

이렇게 역사학계가 무력화되었던 배경에는 전후 역할을 해오던 혁신과 보수, 호헌과 개

18) 布川弘 앞의 글.

현 등의 구조가 전후 50년 이상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한 채로 풍화되어 갔지만, 그 상태를 이데올로기 비판으로 그 공간을 메꾸어 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는 그 이데올로기 비판이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상태 속에서, 달리 대안을 발견하지 못한 채, 전후역사학은 ‘자학사관’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전후역사학 속에서 무화되었던 ‘국체’가 ‘자학’이라는 말로 비판되면서, 역설적으로 일반 대중들에게는 그간 무화되었던 ‘자=일본’이라는 국가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계기를 주었다고 생각한다. 자유주의사관은 이러한 방식으로 대중에 침투되어 갔다고 보인다.

후지오카 등 자유주의사관론자는 ‘자=국가’의 문제로 ‘근현대사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국민과 국가의 내력 이야기’로, 국가나 국민을 대결로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호 작용 속에서 구성된 이야기로 보았다. 더욱이 그 ‘근현대사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국의 생존권과 국익추구의 권리를 확실히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¹⁹⁾ 무엇보다도 일본의 생존권, 일본의 국익추구를 위해 근현대사가 재구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후지오카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생존권과 국익추구의 권리를 인정할 실체적 ‘국가’는 어떤 것을 말하는가? 후지오카는 그 국가의 원형을 ‘메이지 유신이 만들어 놓은 국가’를 상정한다. 근대 국가로서 아시아유일 독립국가로서의 일본이라고 평가한다. 전후역사학이 구축했던 메이지유신관은 자학사관이라고 비판하면서 근대국가의 형성기인 메이지유신을 “하나의 탄환도 없이 한 방울 피도 흘리지 않고” 봉건제도를 철폐하고 세계사적으로 예가 없는 위대한 혁명적 변혁으로서 묘사하고 있다. 폐번치현도 “일본 국내가 번으로 분열되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른 아시아 제국과 같이 일본도 구미의 식민지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일본은 서둘러 중앙집권적 통일국가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국가의 독립을 지킨 위대한 혁명이었다고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다.²⁰⁾

후지오카는 대중적 역사소설가인 시바료타로(司馬遼太郎)의 소설을 시바사관으로 칭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사실 사바 자신은 자신의 소설을 ‘사관’으로 칭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만, 후지오카는 “시바사관은 일본근현대사의 가장 구체적인 이미지로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에게 넓게 공유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근현대사 교육의 개혁”이라고 주장한다. “도쿄재판=코민테른 사관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은 사람들을 설득하기에

19) 波田永實, 日本近代における「滿州」認識, 奈良歴史研究会編, 戦後歴史學と自由主義史觀, 青木書店, 1997.

20) 小路田泰直, 明治維新觀について, 奈良歴史研究会編, 戦後歴史學と自由主義史觀, 青木書店, 1997.

는 이것 이상 방법은 없다고 생각할 정도”라고 평가했다. 후지오카는 시바사관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²¹⁾

- 건강한 내셔널리즘
- 리얼리즘
- 이데올로기에서의 자유
- 관료주의 비판

후지오카는 현재 일본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건강한’ 내셔널리즘이라고 주장한다. 그가 말하는 ‘건강한’ 내셔널리즘이란 무엇인가? 후지오카는 시바료타로의 소설 〈구름 위의 언덕〉의 한 장면을 들어 설명한다. 일반민중이 연합함대를 예상 외로 빠른 속도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의 모습을 보고 “그 노동자의 마음가짐을 ‘국가’라는 개념을 근원적으로 빼앗긴 전후의 일본인은 솔직하게 바라볼 수 없게 되었다, 일본인이 소박하게 국가를 믿었던 시기가 있었고, 건강한 내셔널리즘이 넘쳤던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없게 되었다”고 평했다.²²⁾

즉, 후지오카에 있어서는 전후역사학이 잃어버리게 한 ‘건강한’ 내셔널리즘은 “소박하게 국가를 믿고, 국가를 위해 땀 흘리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러일전쟁 당시 군함 등에서 노동하게 되는 노동자에게는 황국의 신민이기를 강요당했던 사실을 후지오카는 말하지 않는다. 전후역사학이 황국의 신민에서 탈피해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한 것을 다시 자학의 국민으로 되돌리고 있다는 것을 후지오카는 인식하지 못한다.

또한 후지오카는 시바료타로에 힘입어, 역사의 리얼리즘을 강조한다. 후지오카는 “역사는 사회과학이 아니다, 실증적인 사실에 근거한 인간학이다. (사회과학적 성과는 역사 개개의 부분의 설명에 원용하는데 지나지 않는다.)”²³⁾라고 주장한다. 전후역사학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유주의사관의 역사에서는 개개의 부분을 설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역사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사실’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은 자유주의사관 역사서 전반에 나타나, 역사학자들이 역사적 사실관계에 대

21) 波田永實, 앞의 글.

22) 波田永實, 앞의 글.

23) 波田永實, 앞의 글.

한 논증이 의미없는 작업이라고 인식하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은 ‘남경대학살’의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둘러싼 역사서술 및 인식이다.

자유주의사관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끈질기게 대립해온 것은 ‘남경대학살’과 일본군 ‘위안부’문제이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는 자유주의사관론자들이 위안부 논란에 가담하면서 위안부의 문제는 ‘강제연행 여부’에만 집중되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과는 달리, 현재까지도 ‘강제연행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시기 노무보국대 동원부장이었던 요시다 세이지(吉田清治)가 제주도에서 위안부를 강제연행했다는 증언이 사실 확인을 해보니 거짓이었다는 것을 가지고, 일본군 위안부 실태 그 자체를 무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 허구론은 산케이신문, 후지오카씨 등에 이르기까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 그 자체의 허구성의 증명으로 최대한 이용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군 위안부의 전쟁책임에 관계되는 문제성과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의 부정론이 그후 여러 인물들에 의해 여러방법으로 여러 신문 잡지 등에 다수 실렸다. 이후 일본군 위안부 논란은 위안부 제도의 전모와는 관련없이 요시다 세이지가 증언한 ‘일본 군관현에 의해 강제연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위안부 피해자 증언도 무력화하면서 위안부 피해실태 자체를 무화시켜갔다. 이러한 논쟁은 위안부 문제 자체를 ‘일본 군관현에 의해 강제연행’되었다는 사료가 없다는 것, 그것을 발견해야지만 위안부 문제가 ‘사실’이 되는 것처럼 전개되었다. 한국에서도 역시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에서는 일본군관현이 위안부를 강제연행했다는 자료를 찾기에 급급해지게 되었다.

고노담화의 무력화 또한 이 프레임 속에서 일어났다. 고노담화의 본질은 사실 상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했던 것이 아니라, 위안부 제도 자체의 총체적 강제성을 인정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연행 관련 사료의 유무, 증언의 확인불능 등을 들어, 강제성을 인정했던 것은 사실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이었다고 결론지었다.

결국 현재 한일간의 위안부 문제는 일본군관현이 강제연행을 했다는 자료를 발굴하지 않으면, 역사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들었다. 이는 자유주의사관론자들이 위안부 문제에 개입하면서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다.

자유주의 사관은 종래의 역사관을 도쿄재판=고민테른사관이라고 단정하고, 그런 역사관은 미국과 소련의 압력에 의해 생긴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자유주의사관 자체는 그런 외국의 압력이 아니라, 스스로 일본사를 구축하려는 의도라고 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식민지, 혹은 외국이라는 시점을 완전히 배제한 자국사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 그들은 마치 내적인 자국사만이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만든 역사는 공동적 언어로 말하고 있지만, 자기의 아이덴티티의 일관성이 상쳐받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

메이지 유신의 성공적인 아시아 유일의 국가인 일본이 ‘근대화’의 기치를 들고 대만과 한국 등을 근대화시키면서 서양에 대하여 동양을 지키기 위한 방위전쟁에 선두에 나서는 ‘일본’은 무오류이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아직 메이지, 쇼와 일본군이 오류로 남아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남경학살 사건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배제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이 문제는 실증적인 사실에 근거한 인간학이 될 수 없는 요소인 것이다. 따라서 후지오카의 ‘건강한’ 내셔널리즘이라는 것은 선별적일 수 밖에 없고, 그 선별에 의해 생기는 건강함은 외부로 소외시키거나 배제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3. 맺음말

‘자유주의사관’이라는 역사수정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고개를 들고 활동하게 되는 시기가 일본 무라야마 내각에서의 ‘전후50결의’라는 일본의 전쟁책임 인정이라는 분위기에서 생겨났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일본이 보통국가로 되기 위해서는 ‘전후청산’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즉, 일본이 전후청산을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마무리한다는 것은, 보통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동북아 안보 정책은 과거청산 정책과 늘 한쌍으로 움직여지게 되어 있다.

전후청산이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 이후 점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일본의 ‘자유주의사관’과 같은 우익논리가 갑자기 구성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글은 이 자유주의사관이 어떠한 방식으로 완성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후역사학이 황국사관을 비판하면서 ‘국체’라는 부분을 공동화해 갔던 것에서부터 그 가능성은 열려있었다고 보인다. 전후의 역사학은 사상의 사유를 얻고 난후 전전 역사학이 생각할 수 없었던 많은 역사의 길을 획득했다. 그런 반면에 일본이 다른 국가와 사회와 구별할 수 있는, 그 원리는 무엇인가 하는 역사관, 역사인식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그다지 섬세하게 되어오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사학계에서는 역사인식 논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우선 1950년대의 쇼와사 논쟁, 1960년대의 일본 근대화 논쟁, 그리고 1960년대 중반의 대동아 전쟁공정론 등이 전후역사학의 일관된 생각에 균열을 주는 역사인식 논쟁이었다. 쇼와사

논쟁에서는 역사 속에서 계급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역사서술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 지적이 황국사관 비판으로 ‘국체’가 차지했던 부분을 공동화하고 있었던 것에 ‘인간’ 혹은 ‘일본’을 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문체에 대한 지적은 민중사 등에도 영향을 주어 보다 대중적 역사서술을 문제삼게 되었다. 이후 ‘근대화’논쟁은 동양 유일의 성공한 독립국가, 성공한 근대화 국가라는 인식을 만들어 결국 ‘대동아전쟁공정론’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았다.

자유주의사관은 이렇게 전후역사학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긴 사안들을 받아들이면서 ‘자유’라는 중도적 언어로 메이지유신으로부터 시작한 ‘강한 일본’을 다시 꿈꾸는 위험한 내셔널리즘을 표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동북아 평화와 역사문제

• 김정현 (동북아역사재단) •

동북아 평화와 역사문제

김정현 (동북아역사재단)

1. 역사와 정치 : 왜 역사가 문제인가?

냉전기의 집단적 이념대립이 끝나고 국가 간의 개별적인 경쟁과 각축이 일반화됨에 따라, 각 국가 민족의 전통문화와 역사관도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동북아시아에는 교역이 활발하고 문화적 인적 교류도 긴밀하지만 오히려 정치적 대립은 심화되는 ‘아시아 패러독스’라는 용어까지 나타났다.

정보전달이 말이 달리는 속도에 의존하고 기록과 기억의 수요자가 소수의 통치계급에 국한되던 전통왕조 시대에는 역사는 통치를 위한 교훈 정도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정보가 빛의 속도로 대중에게 전파되는 현대사회에서는 역사문제가 쉽게 대중의 관심사가 된다. 한 사회가 민주화될수록, 경제가 발전될수록, 역사는 현재의 정치현상에 더 강렬하게 투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식인들은 더 넓은, 더 깊은 연구를 통해서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과거의 사실을 발굴하고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논쟁의 재료를 생산한다. 일반 사람들은 향상된 권리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민원(grievances)과 정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다. 또한 역사인식의 대중화를 통하여 국민들 간에 더 강한 집단적 동류의식을 형성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배타적인 내셔널리즘을 증폭출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 즉 역사인식문제가 평화와 협력, 공동번영에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다. 왜냐하면 역사는 현재와 미래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2. 동북아정세와 역사문제 : ‘아시안 패러독스’의 실체

아시안 패러독스(Asian Paradox)는 원래는 흡연률과 관련된 의학적인 역설이었다. 그

런데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후보 시절인 2012년 10월 “동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협력과 상호의존의 수준에 비해 정치와 안보 차원에서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을 또 다른 의미의 '아시안 패러독스'로 논했다. 패러독스는 역사문제가 갈등의 요인으로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언급되었다.

오늘날 한·중·일 삼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역사 갈등 문제는 제국주의 일본이 19세기말 이래 한국·중국·아시아에서 저지른 제국주의적 침략역사와 전쟁범죄, 인도적 범죄에 관해 과거 일본정부가 인정한 기존 입장을 번복하거나 그 범죄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도①에서 비롯되어 역사교육 문제에 관한 갈등②으로 확대되었다. 2003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동북공정”③도 역사 갈등을 심화시켰다. 동북공정은 고구려사를 중심으로 한 한국과 중국의 치열한 역사논쟁을 초래하였다.

동북아시아 정치관계에 투영되는 역사와 관련된 갈등 문제는 주로 일본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의 네 가지 분야의 갈등으로 관찰된다. 우선, 근대유럽 역사학의 프레임을 최초로 도입한 일본에 의해 수립된 일본우월적인 동양사 개념과 이에 의해 왜곡된 역사기술로 인한 역사 갈등이 있다. 일본의 한국사왜곡과 한국인혐하④가 대표적인 예이다.

두 번째로는 1945년 이후의 현대사에 얽힌 갈등이 있다. 여기에는 한·일 국교정상화 협정과 같은 전후처리 또는 식민지 청산⑤에 관한 상이한 해석, 역사교과서 문제②, 일본군 ‘위안부’문제⑥,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⑦, 식민지시기 전시강제동원 보상 문제⑧ 등이 있다. 남경학살⑨에 대한 일본정치인들의 학살숫자 줄이거나 냉소적인 부인은 중국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이 동경전범재판⑩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결과적으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정체제를 부인하려는 움직임⑪이 있다.

세 번째는 이웃국가간의 수백 년 이상 된 오래된 교류와 갈등의 역사가 국민들의 감정 속에 녹아있고, 그것이 다른 갈등을 증폭시키고 첨예화하는 역할을 한다. 임진왜란⑫이 한국민의 집단적 기억 속에 일본에 대한 나쁜 기억으로 남아 있다.

마지막으로는 현상(status quo)의 변화와 관련된 정치적 갈등이다. 중국은 과거 중국중심 천하의 지위를 회복하려고 하고, 일본이나 미국은 이를 견제하는 데 따른 정치적 대립의 양상이 그것이다. 이는 미국의 아시아회기정책과 미·일동맹 강화와 관련하여 현재적인 안보 갈등 요인이다.

동북아시아지역에서는 이러한 역사인식 문제와 관련된 대립을 포함한 다양한 대립전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한반도에는 여전히 남북 분단으로 냉전적 대립전선이 계속된다. 지역 헤게모니와 관련한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전선도 있다. 한편, 북한핵 문제와 관련된 비

핵화/비확산 대립전선도 형성하고 있다. 영토문제와 관련된 중·일, 러·일간의 대립, 그리고 동남아 국가 및 미일의 중국에 대한 대립전선도 있다. 이러한 복잡한 대립구도가 얽혀 있는 환경에서 삼국간의 이해관계도 작용한다. 한·중·일 정상회담 체제에서 어떤 경우에는 산국의 협력보다 누가 누구의 편인가 하는 점이 부각된다. 한·미·중 관계나, 한·미·일 관계 프레임도 그렇다.

유럽에서는 1차 세계대전 100주년을 전후하여 대두하는 새로운 안보위기에 관한 많은 우려와 논의가 소개되었다. 동북아시아의 역사 갈등이 당장의 안보문제는 아니겠지만, “역사는 그대로 되풀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은 계속 던져지고 있다.

3. 동아시아 역사 논쟁과 갈등의 기원

동아시아의 역사문제가 논쟁을 넘어 풀기 어려운 갈등(intractable conflict)의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유럽과는 전혀 다른 다음의 세 요인에 기인한다.

1) 왜곡되어 도입된 근대 유럽역사학의 영향

◎ 유럽의 근대역사학의 전파 : 제국주의적 역사학

유럽의 근대 역사학은 독일의 레오폴드 폰 랑케(Leopold von Ranke)에 의해서 확립되었다. 그러나 유럽의 근대 역사학은 유럽우월적인 제국주의적 식민지 침략을 역사의 흐름으로 합리화 하였다. 특히 독일의 역사학은 독일통일을 전후하여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독일의 발전은 신의 섭리에 따른 것이라는 독일 우월적 배타적 역사관으로 변질되었다.

◎ 일본중심의 우월적 역사관

한·중·일 삼국간에 얽힌 역사갈등은 일본의 근대역사학이 미친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19세기 후반 일본의 사학자 시라토리 등은 이러한 독일중심적 역사학을 모방하여 일본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여타 민족을 타자화하여 열등화하는 “동양사” 프레임¹³⁾을 완성하였다. 일본중심사관에서 신의 섭리는 천황의 신성과 신도로 구현되었다. 나아가 ‘아시아주의’와 ‘동양평화’라는 명분아래 영토적 팽창을 부추기는 데 활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의 역사가 왜곡 기술됨에 따라 이에 반발하는 민족주의적 역사기술 전통이 한국과 중국에서도 출현하게 되었다.

◎ 중국의 중화민족 역사관

중국의 근대역사학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적 역사관에 대한 저항과 모방이라는 모순적 양면성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근대사학의 아버지로 평가되는 량치차오(梁啓超)는 일본식 동양사와 일본사의 기술방식을 모방하여 중국사를 기술하였으며, 구지에강(顧頡剛), 푸쓰니엔(傅斯年)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은 일본의 만한분리사관, 만몽사관에 저항하여, 중국 주변의 이민족사를 중국사에 포함시키는 중화민족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중화민족론을 발전시킨 것이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⑭이다.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은 1954년 헌법에 규정된 이래 1988년 페이샤오통(費孝通)의 ‘중화민족 다원일체’론으로 정교화 되었다. 이는 내부적으로는 한족과 55개 소수민족을 문화를 매개로 한족으로 통합하는 한편, 한족이 주변민족들을 동화하여 중화민족으로 확대한다는 제국주의적 역사관이다. 인근 민족의 역사를 현재의 영토 논리에 따라 무리하게 자국사로 편입하는 정치적 역사인식은 이미 중국의 근대역사학의 형성과정에 내포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대 이래 한반도가 자국의 판도였으며, 한국민족(韓種)을 중화민족의 일원이라고 강변하였다.

중국은 이러한 역사논리를 보강하기 위해 1983년 중국사회과학원 산하에 중국변강사지 연구중심을 설립하고, 변경지역에 대한 대규모의 역사공정^⑮을 추진하여 왔다. 예를 들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추진된 동북공정은 한국인의 역사적 정체성의 상징인 고조선, 고구려, 발해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키려 함으로써 한국 국민들의 강한 반발을 초래하였다.

◎ 한국역사의 시련

한국은 19세기 이후 거의 100년간 근대사학의 방법론으로 자국의 역사를 스스로 기술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였다. 한국의 역사는 일본의 식민지병합 과정에서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왜곡된 역사 기술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역사는 상고사와 고대사부터 축소 왜곡되고^⑯ 한국민족의 자립적 발전론이 부정되었다. 중국의 동북공정마저 감안한다면,

결국 한국의 역사 기술 권리는 일본과 중국 양쪽으로부터 동시에 공격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일본과의 역사문제는 이웃 국가간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 문제, 식민지 시기 일본 군‘위안부’ 문제, 강제동원문제,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 등 주로 20세기의 역사문제에 관한 인식의 갈등으로 현재화되는 정치문제로 부각되어 있다. 반면 중국의 동북공정류의 한국사 왜곡은 잠재적인 마찰 요인으로 남아있다.

한편, 한국의 초기 사학자들은 일본의 2세대 역사학자들에 의해 교육되었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한국사학계에서는 식민지사관 논쟁이 진행 중이다.

2) 고대 사료에서 중국의 압도적, 독점적 지위

동아시아 3국 관계에 관한 역사연구는『사기』, 『삼국지』, 『위지동이전』, 『후한서』같은 중국의 사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중국왕조 중심의 사료나 중국인의 관점에서 이민족에 관하여 언급된 기록들의 객관성에 관해서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유럽에서는 로마가 사라졌기 때문에 로마의 유산은 유럽인들이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중국 역사의 유산은 중국인의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오히려 민족주의로 무장한 중국의 역사관은 주변국의 역사와 충돌하고 있다.

3) 중국어 : 문자와 언어학적 특성 문제

표의문자인 한자는 긴 시간 속에서 그 형태는 물론 발음도 변해왔다. 대략 2000년 전의 한나라 시대의 발음을 유추한 상고음이나 1000년 전 당송시대의 발음으로서 현재 광둥어로 남아있는 중고음, 그리고 만주족이나 몽고족의 발음(일명 胡語)의 영향으로 변질된 현재의 보통화 발음은 전혀 다르다. 이러한 차이를 감안하지 않으면 이민족에 대해 기록된 중국의 사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외국의 지명이나 민족명, 인물의 이름들은 모두 발음을 표시하는 가차의 방식으로 기록되었으므로 그 당대의 발음을 유추해야 보다 사실에 가까운 역사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돌궐은 오늘날의 토이기인가?, 동호, 숙신, 말갈, 여진, 거란 등 민족은 서로 어디가 다르고 같은가? 오늘날 캐나다(加拿大)는 왜 “자나다”로 읽는가? 만약 다른 기록이 안 남는다면 지우진산(舊金山)이 샌프란시스코의 현재 중국어 명칭(수십년 전에는 桑港 이었다)이라는 것을 수백 년 뒤의 사람들은 어떻

게 알 수 있을 것인가? 지우진산(舊金山)과 상강(桑港)이 같은 도시이고, 뉴욕에시바오(紐約時報)가 뉴욕타임즈이고, 시라리(希拉里)와 터랑푸(特朗普)가 2016년 미국 대선의 대통령 후보였다는 것이 사실인지 논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4) 한·중·일 3국의 근대 서구화 과정의 역사 complex

개인의 콤플렉스는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타협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 하나의 민족이 집단적인 피해의식이 있다면 이는 국가정책 차원의 콤플렉스로 반영되고 타국과의 갈등을 야기하거나 타협을 어렵게 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한국과 중국, 일본 모두 그러한 집단적 콤플렉스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역사 갈등 문제가 더욱 꼬이는 이유이다. 중국은 근대 19세기 아편전쟁 이래 외세의 침략, 특히 일본에 의해서 침략을 받은 데 대한 수치심이 남아있다. 그들 스스로 150년 간의 치욕이라고 부른다. 일본은 근대화 과정에서 역사왜곡과 패전국이자 전쟁범죄국이라는 콤플렉스를 안고 있다. 한국은 20세기 초에 이웃국가이던 일본에 의해 36년간 식민지 지배를 받았고, 자신의 역사가 왜곡되었다는 피해의식이 강하게 남아있다. 이러한 삼국 공통의 콤플렉스가 유럽의 사례와 같은 개방적 역사 인식을 어렵게 하고 있다.

5) 역사인식에 대한 전후 냉전구조의 영향

2차 대전 종료 후 냉전시대에는 역사문제에 관한 원망(grievance)보다는 이데올로기 가치가 우선하는 시대가 70년 이상 지속되었다. 그러나 포스트 냉전시대에 와서 프란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의 ‘역사의 종언’과는 정반대로, 억제되어 왔던 역사 갈등이 표면에 분출하였다. 오히려 사무엘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적인 문명대립 전선이 추가되었다.

6) 한·중·일의 민주주의 수준과 성격

유럽의 역사 화해는 유럽국가들이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데 힘입은 바가 클 것이다. 동아시아에서도 민주주의의 발전은 제한적으로나마 역사갈등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중·일 삼국은 각기 다른 수준, 다른 형태, 다른 내용의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체제를 유지하고, 일본은 입헌군주제 하의 내각

책임제 형태의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민주주의 체제이나 삼국중 가장 ‘시끄럽고’ 다이나믹한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도 각기 그 범위와 사회적인 성격이 다르다. 이러한 차이도 역사 갈등을 조장하거나, 역사 갈등 해소 노력을 좌절시키기도 한다.

7)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공통인식 부재

유럽의 보편적인 사상은 공통의 종교인 기독교적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인도주의나 박애주의, 자유와 평등주의가 공통의 정치적 명분으로 정착하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삼국은 그러한 공통적 사상이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다, 중국은 종교를 정치적으로 통제하고, 일본은 신도(神道)가 종교를 대신하고 있다. 한국의 종교는 불교와 기독교가 거의 양분하고 있으며, 삼국 중 유일하게 기독교 신앙과 가치가 널리 퍼져 있다. 보편적 가치를 공감하지 못할 때 역사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는 그만큼 어려워진다.

8) 주변국의 감시기능 부재 : 모두가 당사자

수십 개의 나라와 민족이 공존해 온 유럽에서는 양국 간의 역사 갈등을 지켜보는 많은 제삼자가 있어 갈등의 객관적 타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전쟁의 참화와 홀로코스트 등, 극단의 재앙을 경험한 교훈을 바탕으로 역사를 반성하고 갈등을 봉합하여 미래 평화지향적 해결을 하는 데 대한 콘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 삼국은 서로가 당사자이면서 양자관계가 얽혀 있어 이러한 건설적인 콘센서스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9) 지역통합 부재

동북아시아는 아직 EU와 같은 공동체는 물론 공동의 안보인식도 공유하기 어려운 정세에 있다. 한·중·일 삼국 간의 역사갈등 해소를 위해서 EU의 사례와 같은 공동의 정치적 지원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10) 자국 역사기술 중심 교육

한·중·일 삼국은 아직도 자국 중심의 국사를 역사교육의 중심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유럽은 개별 국가사 보다는 지역사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애국적 내셔널리즘이 국사에 반영될수록 역사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더 커진다. 한국은 매년 일본의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가 나올 때마다 문제가 되는 내용을 지적하고, 수정하라는 요구를 해오고 있다. 한국과 일본 간 역사교과서 관련 마찰은 연례행사가 되었다.

11)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

중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은 중국의 애국적 역사 기술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 중국의 역사문제는 앞에서 이미 상술한 바 있다. 특히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재균형 정책에 따른 지역질서의 변동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역사 갈등은 향후 더욱 심각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12) 한반도 분단 상태의 지속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분단이 지속되는 한 주변국들 간의 역사인식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의 관점에서는 분단된 한반도가, 그리고 북한이라는 존재가 여전히 미국과 일본 같은 해양세력의 접근에 대한 유용한 방파제이다.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을 때 정치적 대립 전선은 더욱 첨예화된다. 북한문제를 둘러싸고 역사문제는 아주 쉽게 정치적 이해관계나 갈등으로 반전될 수 있다.

4. 왜 역사에 대한 반성과 기억이 필요한가?

헤로도토스(Herodotos)는『역사』첫머리에 “일어났던 일들이 시간에 의해 지워지지 않고 묻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다”고 했다. 그것이 역사이다. 역사는 왜 지워져서는 안 되는 것일까? 아시아에서 왕이나 정치가들은 중국의 고대 이래의 역사를 통치의 교훈으로서 연구하고 기억하였다. 잘못된 역사적 사례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경계하

고, 좋은 사례는 적극 권장하였다. 이에 역행하는 자는 왕위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역사가 현재와 미래의 거울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된 상식이다.

나쁜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그 상식의 핵심이다. 국가나 사회는 그 일을 기억하는 행사를 하고, 사죄를 함으로써, 국민이나 이웃 국가들에게 나쁜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다.

피해자는 그러한 행위를 보상으로 인정하고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것은 평화가 되고 신뢰가 된다. 그러나 그 나쁜 일의 행위자나 후손이 그러한 보상행위를 회피하거나 부정한다면, 이미 표출된 역사 반성의 정책과 정신을 다음 정부가 훼손하거나 부정한다면, 신뢰는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평화의 기초는 손상된다. 평화를 저해할 수 있는 심리적 불신이 상존하게 된다. 현재 동북아지역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노새가 버틸 수 있는 무게의 마지막 지푸라기가 너무 무거워지고 있다.

역사는 기억과 기록으로 만들어진다. 수천 년 동안 이웃으로 살아온 한국, 중국, 일본 간에는 아직도 정산하기 어려운 역사의 상처들이 남아있다. 역사를 자신의 직접적인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직 살아 있다.

아마도 근대 역사에 대한 한국인들의 가장 큰 관심은 그러한 양태가 다시 되풀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일 것이다. 오늘날 동북아지역에서는 마치 중국이 과거의 소련을 대체하는 새로운 냉전구도가 형성되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은 미일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고자 한다. 일본은 미·중 대립구도에서 자신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려 한다. 과거 영일동맹을 연상시킨다. 물론 한국과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기본적인 안보구도는 100년 전과는 전혀 다르다.

한국은 19세기 말 이래 36년간의 식민지 지배, 1950-53년의 한국전쟁, 절대빈곤과 민주주의 혁명을 모두 경험하고,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룩하였다. 한국인은 침략을 위한 역사기술을 한 적이 없다. 정치공학적 역사왜곡을 한 적도 없다.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국주의적 침략과 배신의 최대 희생자였던 한국인들은 과거 역사의 교훈이 간과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한국이 지역사 개념의 동아시아사 교육을 선도하는 이 유도 여기에 있다.

5. 역사 갈등 치유 노력과 그 한계

1) 각국 정부의 노력

한국, 중국, 일본 각 정부 차원의 노력은 주로 특정 역사적 갈등이 악화될 때마다 정부가 이를 봉합하는 형태로 간헐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대체로 일본의 정치인들이 과거 행위에 대해 사죄하는 정부의 기존 입장이나 천황의 사죄 발언을 부인^①하거나 훼손하는 발언으로 야기되고, 이에 대해 한국이나 중국이 반발하는 형태가 되풀이 되고 있다. 이런 경우 역사 문제가 외교적 마찰로 발전하곤 했다.

예를 들면 2001년 일본의 우익단체가 제작한 역사교과서 문제로 한일간에는 2002년에서 2009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역사공동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동 위원회는 2010년 2월에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양국 역사학자가 처음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공식기구를 통해 공동연구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중·일 간에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역사공동위원회가 가동되었다. 중·일역사공동위원회는 2006년 8월 당시 고이즈미(小泉)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서 비롯된 중일 양국의 외교적 대립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한·중 간에는 최근에 와서 정상 간의 합의에 따라 차관급 인문교류공동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다.

2) 한·중·일 NGO 등 시민사회의 노력

2001년 일본에서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노골적으로 정당화한 『새로운 역사교과서』(후소야 판)가 동아시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일본에서는 역사·평화·인권 운동을 전개하는 시민단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동 대응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정부에 대한 시민단체의 영향력은 미미한 편이다. 2001년 이후 점차 중국에서도 시민단체들이 생겨났고, 개별 연구자와 교사들이 지속적인 교류 활동이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시민단체의 경우, 아직 정부의 엄격한 통제아래 있다. 한국에서는 90여개의 역사관련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를 설립하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적극적·공세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의 다이내믹한 민주주의 환경 속에서 한국의 시민사회는 정부에 대해서도 공세적이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한·중·일 시민단체들은 국제적 네트워크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3국공동의 역사

부교재를 출간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간의 양자 간 공동 노력도 긴밀히 추진되어 여러 공동 역사교재들이 발간되었다.

3) 동아시아사 기술

2009년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에서 동아시아사 공동 서술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삼국 중 처음으로 2012년부터 동아시아사를 정식으로 고교 교육과정에 포함시켰다. 현재까지 삼국 중 유일하게 한국이 동아시아사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역사인식을 둘러싸고 한·중·일 삼국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아직 많다. 시민단체들이 주도하여『미래를 위한 동아시아사』, 한일 공동 부교재 개발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유럽과 비교하면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4) 역사학계간 교류

오늘날 학자들간의 자유로운 교류는 당연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한·중·일 간 역사 분야의 학술교류는 정치적·사회적 제약에서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 역사학계는 역사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 일본·중국 학계와의 역사연구 교류에 적극적이지만, 공산당과 정부의 엄격한 통제 하에 있는 중국 학계는 동북공정과 관련하여 한국과의 고대사 관련 학술교류는 피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역사학계는 일본사회의 우경화가 진행되면서 보다 리버럴한 역사인식하의 대외교류가 심리적으로 견제를 받고 있다.

6. 평화와 협력을 위한 역사적 과제

1) 개방된 역사인식

유럽의 사례, 유네스코 등의 노력을 교훈으로 각국의 정부나 정치권, 학계의 지도계층이 인근국과의 역사문제에 보다 계몽되고 개방적일 수 있다면 지역정치에서의 역사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개명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유럽인들의 말처럼 더 큰 재앙을 겪어야 가능할까?

2) 역사 서술 상의 신뢰 구축 조치(CBM principle in historiography)

서로 다른 역사인식이 상호 간의 신뢰를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사 서술 상 최소한의 '신뢰 구축 조치'가 필요하다. 물론 학술분야에서는 안보상의 신뢰구축조치와 같은 합의할 수 있는 룰이나 원칙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인문학적 양심에 의존할 뿐이다. 그러나, 예를 들면, 안보상의 신뢰구축 초기 조치와 마찬가지로, 교과서 검정 등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일정한 시간 전에 관련국에 통보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접수하고, 회답하는 선의의 원칙(comity)을 정부 상호간에 확립할 수는 있을 것이다. 관련 정부는 민간학계 간의 교류와 공동연구를 적극 권장 지원할 수도 있다. 정부나 정치권, 학계의 지도계층이 역사인식에서 국제적인 수준으로 계몽되고 개방되어 있다면 어려운 과제는 아닐 것이다.

3) 정부의 적극적 의지와 역할

정부는 민간학계 간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 독일과 폴란드 간의 공동 교과서의 제작의 예에서 보듯이, 다양한 차원의 역사 대화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에는 정부당국의 정치적 결단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역사교육적 관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역사교육은 과거 역사를 교훈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미래에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작업이다. 역사대화와 공동연구를 계속해 나간다면 서로가 공감하는 양국관계사나 지역사에 관한 다양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양자간, 삼국간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내용이 합의되어 그 추진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한중 정부가 주도하는 양국 간 인문교류는 인문학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정치권도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입법과 예산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4) 학술분야의 자율성과 민주화 확대

자유로운 학문적 토론이 어렵다면 이제까지 언급해온 모든 노력이 쓸모없게 된다. 학문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이나 사회적인 압박이 심한 정치사회적 조건 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 결국 아시아에서의 역사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우선 국제학술교류 분야에서 정치권력의 규제나 개입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언론도 국제적인 역사대화와 학술교류를 장려해 주어야 한다.

5) 각 분야 교류의 확대를 통한 국민간의 이해 증진

한·중·일 간에는 관광과 학문 교류 목적의 교류는 대규모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역사 분야에서는 한·일 간의 ‘조선통신사’나, 한·중 간의 ‘연행사’ 등 교류와 관련된 대표적인 역사유산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동아시아의 역사문헌에 대한 공동 연구를 장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공통된 역사인식을 함양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다. 역사유적을 공동으로 발굴·조사하는 것도 공통된 역사인식을 함양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다. 아울러 청소년 세대의 교류 확대는 상호간 역사문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6) EU, UNESCO 등 아웃사이더의 모델 활용

유럽과 동북아시아의 역사환경은 전혀 다르지만, 유럽의 성과는 동아시아의 역사문제의 해소에도 유용한 모델이 될 것이다. 유럽에서도 역사교과서 문제는 국가간 교섭 대상이 되어 왔다. 유럽인들은 역사인식 문제는 향후 국제평화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파멸적인 전쟁을 겪으면서 뼈저리게 경험해 왔기 때문이다. 에릭 홉스봄(Eric Hobsbawm)은 동유럽의 민족 전쟁의 한 원인이 역사기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역사학은 핵물리학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다”고 탄식한 바 있다.

카(E. H Carr)는 그의 저서『역사란 무엇인가?』의 서두에 역사 기술의 객관성에 관한 액튼 경(Lord Acton)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액튼 경은 케임브리지 근대사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집필을 맡은 역사가들에게 “우리의 위털루(에 관한 역사는)는 프랑스와 영국, 독일과 네덜란드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마찬가지로 독일과 프랑스, 독일과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교과서대화는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비판하고, 민족 간 평화를 지향하였다. 프랑스 역사교과서의 저자인 이삭(J. Isaac)은 프랑스 역사교과서에 대한 독일인의 비판을, 타자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며, 자신이 편찬한 교과서에 독일인의 입장을 병기했다. 숙적인 독일의 관점도 고려한 “두 가지 시각(deux points de vue)” 이론은 상대방의 입장을 좀 더 깊이 이해하

려는 ‘역지사지’의 방법론이다. 이는 또한 유럽적 정체성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를 만들고 유럽공동체의 등장을 더욱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독일에서는 에케르트(G. Eckert)가 중심이 되어 이삭의 문제의식을 발전시켰다. 제2차 대전 후 설립된 게오르크-에케르트 국제 역사교과서연구소는 유럽의 교과서협력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역사교과서협력과 그 성과를 통해 독일과 프랑스의 학생들은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유럽이라는 공동의 터전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있다. 독일과 폴란드도 1972년 시작하여 30년 이상 공동역사교과서 간행을 위해 노력하였다. EU는 회원국 역사교사들의 협력단체인 ERO-CLIO의 역사교육협력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유네스코 역시 인접국가, 또는 특정국가에 대해 혐오와 편견을 조장하는 부정적인 서술은 상호 교섭을 통해 해결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독일·프랑스 등 전쟁당사국간의 역사대화를 주도하여 유럽지역의 역사화해에 기여하였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동아시아지역의 역사화해를 위한 노력으로 1997년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 국제포럼’을 개최하였고, 2007-2010년 동북아역사재단과 함께 주변국과의 역사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동아시아 역사화해 국제포럼’을 개최하였다.

7) 동아시아사 기술 개념 전파

동북아시아 세계에서 자국중심주의의 뿌리는 자못 깊다. 자국 중심의 역사 기술을 지양하고 ‘타자’의 시각을 수용하는 개방된 역사인식은 동일한 삶의 공간인 지역을 아우르는 보통 사람들의 삶의 역사를 기술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동아시아사 연구 및 서술은 역사갈등을 해소하고 동아시아 평화기반을 구축하는 장기적이고 국제적인 역사프로젝트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사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학술적으로 논의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도 페르낭 브로델(Fernand Braudel)의 지중해사와 같은 지역사가 가능할 것인가?

한국의 고등학교에서는 2012년부터 ‘동아시아사’를 정규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다. 동아시아를 하나의 단위로서 사유함으로써 국가 중심의 편협한 역사 인식을 넘어서서, 지역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을 양성하려는 교육적 목적에 따른 것이다. 이는 동아시아의 평화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 학계가 고민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한국 학계의 시도는 이미 중국과 일본의 일부 진취적인 연구자 및 교사, 시민운동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앞으로 한·중·일 삼국은 물론 세계의 학자들이 참여하는 공동연구로 확대 발전될 것으로 기

대된다. 동북아역사재단은 학계와 교사, 시민단체들의 동아시아사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8) 미국의 역할 : 역사문제에서 소프트파워를 발휘하라

오늘날 아시아에서 미일 동맹 vs 중러 협력, 해양세력 vs 대륙세력 구도 하에서, 미중 간의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는 G-2체제가 구체화되고 있다. 마치 중국이 과거의 소련을 대신하여 새로운 냉전구도가 형성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미일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고자 한다. 또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대중 견제망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미국의 아시아 회기정책(Asian Pivot), 또는 중국 포위 전략이라고도 한다. 일본은 이러한 미국의 대중포위견제 전략에 편승하고 있다. 일본은 19세기말과 20세기 초 영미와 러시아 간의 동북아시아에서 대립 구도 속에서 일본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던 것처럼, 오늘날 미·중 대립구도에서 스스로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려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미·일 동맹이 과거의 영·일 동맹이 되지 않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이 19세말의 조선과 청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전략이 성공하려면 동북아지역의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이 2000년 이상 오래된 이웃 간의 구원(舊怨)관계로 얽혀있다는 사실을 미국이 간과하면 안 될 것이다. 미국은 한·중·일의 역사문제에는 당사자가 아닌 것처럼 중립을 지킨다는 것을 공식 입장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최소한 19세기 말 이후부터는 확실하게 역사문제의 당사자이다. 미국은 직접적, 간접적으로, 그리고 좋은 일, 나쁜 일로 동북아시아의 역사에 얽혀 있다. 따라서 미국에게 동북아시아의 역사는 남의 일이 아니다.

흔히 미국의 전후 아시아정책에 문제가 제기되거나 실패로 평가되는 사례들의 이면에는 미국 정책담당자들의 아시아 역사에 대한 무지나 몰이해가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곤 했다. 데이비드 할버스탐(David Halberstam)은 미국의 월남 참전 확대 과정을 추적한 *The Best and The Brightest* 에서 중국과 아시아 역사에 대한 미국 정책입안자들과 정치인들의 무지가 중국도 잃고, 베트남전도 진흙탕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안보나 헤게모니는 군사력만으로는 유지되기 어렵다. 팍스로마나가 끝나고 로마도 멸망한 것은 로마 자신이 주변의 클라이언트 민족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것도 큰 요인이었다. 그러한 교훈을 미국의 지도자들이 미국의 소프트파워에 담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미국의 소프트파워는 미국의 문화를 파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

는 수단이어야 한다. 동북아시아의 주요국들 간의 역사에 얽힌 문제를 감안하는 지혜는 미국이 아시아정책을 수립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필수 요소이다. 미국의 명백한 운명(the Manifest Destiny)은 미국 대륙의 서부해안에서 끝나지 않았다. 미국의 이익이 아시아에서 머물고 아시아인들로부터 계속해서 존경받기를 원한다면, 미국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동아시아의 역사문제에 당사자로서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소련에 대한 봉쇄정책을 처음으로 제안한 케넨(George K. Kennan)은 훗날 자신이 의미했던 봉쇄의 개념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의 우월한 민주주의적 가치와 이념으로(오늘날의 소프트 파워) 소련의 팽창을 저지한다는 의미였지 결코 군사적인 봉쇄만을 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의 아시아 회기전략은 항공모함과 같은 군사력의 증강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 아시아인들의 마음과 기억을 사로잡는 소프트파워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더 크고 효과적인 전략이고, 미국 스스로의 소프트파워의 위력을 새로이 깨닫는 새로운 대(大) 각성(New Great Awakening)이 될 것이다.